

있는 그대로, 대한민국

있는 그대로, 대한민국

대통령 비서실 지음



대한민국, 서울, 지식공작소, 2007

있는 그대로, 대한민국

지은이 대통령 비서실

펴낸이 박영률

초판1쇄 펴낸날 2007년 6월 1일

지식공작소

121-869 서울시 마포구 연남동 568-33 충무빌딩 1층

전화 (02) 7474 001, 팩스 (02) 736 5047

출판등록 1992년 10월 19일 제3-441호

www.knowledgesea.com

ks@eeel.net

Knowledge Smith

Chungmu Bldg, 568-33 Yeonnam-dong, Mapo-gu

SEOUL 121-869, KOREA

phone 82 2 7474 001, fax 82 2 736 5047

이 책은 지식공작소가 저작권자와 계약하여 발행하였습니다.

본사의 서면 허락 없이는 어떠한 형태나 수단으로도 이 책의 내용을 이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대통령 비서실, 지식공작소, 2007

ISBN 978-89-5671-062-4

책값은 뒤표지에 있습니다.

○ 책을 펴내며

참여정부가 국민의 선택을 받아 국정을 시작한 지 4년이 넘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면 지난 4년 힘들었습니다. 출발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북핵 위기와 카드 위기 등 안보와 경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대한민국호를 맡았습니다. 국내의 분위기도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지나 보니 한 세월이었지만 그 많은 우여곡절을 어떻게 견뎠는가 싶습니다.

참여정부의 출발과 존재 자체를 부정했던 일부 언론과 야당의 비난과 비방도 가벼운 짐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견디기 힘든 것은 국민의 시선이었습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비난과 비방에 부지불식간 영향을 받아, '이러다가 정말 나라가 잘못되는 것 아닌가, 결판나는 것 아닌가' 라고 우려하는 국민들을 볼 때였습니다.

참여정부의 탄생을 지지했던 분들마저 하나둘씩 등을 돌렸습니다. 심지어 참여정부와 책임을 함께했던 사람들조차 '국정 실패' 로 비난하는 대열에 합세했습니다. 근거와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매를 많이 맞으면 사람의 열이 빠지듯이, 우리 스스로도 확신이 흔들릴 지경이었습니다. 소신 강한 대통령마저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혹시 장관들이 흔들리지 않을까 염려하고, 곳곳하게 버텨주는 내각에 고마워했습니다. 비서실 참모들만이라도 믿고 따라준다면 버틸 수 있겠다는 심경을 내비친 적도 여러 번입니다.

그러던 대통령이 "사실을 확인해 보자"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지난해부

터였습니다. 대통령은 당시의 상황을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추진해 온 일이 있고, 정책은 하나하나 자리를 잡아나가고 있는데, 하나둘씩 성과가 보이고 있는데, 그렇게 일방적으로 물리는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시 한 번 보기로 했습니다. 참여정부를 말할 수 있는 모든 지표를 모으고 분석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정책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있는 자료를 조사·분석하고, 지표가 없는 것은 오래된 자료를 뒤져 새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공들여 작업을 해놓고 보니 스스로도 믿을 수 없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올라가야 좋은 것은 모두 올라갔고, 낮아져야 좋은 것은 어김없이 낮아졌습니다. 속도도 좋았습니다. 올라가면 나쁜 것은 2004년을 기점으로 꺾였고, 내려가면 안 되는 추세는 그 시점에 멈췄습니다.

작업을 하다 보니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와 비교를 하게 되었고,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박정희 정부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 살피게 되었습니다. 문민정부부터 좋아진 것도 있고, 국민의 정부부터 좋아진 것도 있었습니다. 1998년과 2003년의 깊은 골짜기가 남긴 후유증은 있는 그대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꼼꼼히 살피면 역대 정부가 각각 어떤 성격과 지향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 수 있는 의미 있는 대목도 많았습니다. 민주정부는 대단히 유능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은 그 전 시기보다 훨씬 더 성공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정리된 자료가 대통령보고서로 만들어졌습니다. <참여정부 4년의 국정 성과-미래를 향한 도전>이라는 제목이 달렸습니다. 이 보고서를 우리만 보기는 아까웠습니다. 참여정부를 자랑하고 싶어서만은 아닙니다. 이 지표와 통계들은 지난 수십 년 대한민국이 어떻게 걸어왔는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앞으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지표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함께 보기 위해서 책

으로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홍보수석실에서 대통령보고서 내용을 추리고 정리해 내놓게 된 과정이 이랬습니다.

미래를 알고 싶으면 과거를 돌아보라는 가르침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이 책에서 해방 이후 우리 국민이 무엇을 위해 어떻게 노력해 왔는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우리가 도달한 이곳에 서서 우리의 미래를 설계합니다.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참여정부 출범 5년차에
대통령 비서실장 문재인 올림

○ 차례

책을 펴내며 _____ v

1 이제 한 걸음만 더 가면 선진국이다

대한민국이 충족시키고 있는 4가지의 대표적인 선진국 기준 _____ 2

IMF(국제통화기금)의 분류기준 _____ 2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_____ 2

국민소득 2만 달러 이상의 나라들 _____ 3

인적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_____ 4

대한민국이 아직 채우지 못한 선진국의 조건들 _____ 4

복지재정 비중 _____ 4

사회적 자본 성숙도 _____ 4

여성인력 활용도 _____ 5

시대가 바뀌면 생각도, 전략도 바뀌어야 한다 _____ 6

2 경제, 1000달러에서 2만 달러가 되기까지

1. 굿바이, IMF _____ 11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 정부·국민이 함께 도달한 선진국의 문턱
_____ 12

경제성장을 선진국형 성장속도로 진입 _____ 14

원자재 가격 급등에도 안정적인 물가 _____ 16
금리는 점진적인 하락세 _____ 18
부진한 설비투자를 기술혁신 역량 강화로 극복 _____ 20
경기부양책 없이도 설비투자·민간소비 증가세로 전환하는 저력 발휘
_____ 22

2. 우리 경제는 얼마나 튼튼할까? _____ 25

3000억 달러를 넘어선 수출, 세계 11위 _____ 26
우리 경제의 안정성을 반영하는 환율 _____ 28
경상수지는 안정적인 흑자 기조 _____ 30
종합주가지수 사상 최고치 경신 _____ 32
세계 5대 외환보유국이 되다 _____ 34
당연히 국가신용등급도 올라갔다 _____ 36
외국인 직접투자 100억 달러 이상 유지 _____ 38
기업의 빛이 줄고 있다 _____ 39
매년 망하는 기업, 4년 동안 절반 이하로 _____ 40
마침내 부동산도 꺾였다 _____ 42
부실언론이 만들어낸 빚더미 대한민국 _____ 44
은행은 건강한가? _____ 46
외환거래 늘었으나 국제수준에는 미흡 _____ 48

3. 우리 경제는 지속가능한가? _____ 51

연구개발비·특허출원 최고치 기록 _____ 52
차세대 성장 동력, 미국과 기술격차 2.6년에서 1.6년으로 _____ 55
혁신형 중소기업, 3년 만에 2배 증가 _____ 56
지방에도 기술력 갖춘 중소기업 대폭 증가 _____ 58
지역전략산업으로 지방이 첨단산업의 중심이 되다 _____ 60
문화수출 강국을 위하여 _____ 62
농어업도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다 _____ 64

4. 골고루 잘사는 나라 _____ 67

지방을 위한 특별 주머니, 균특회계 _____ 68
정부 R&D예산 지방 비중 40% 육박 _____ 69

비수도권 생산 비중 수도권 앞질러	70
지방의 수출 비중 70% 육박	71
수도권 인구 문제에 대한 한 줄기 희망	72

3

마음은 굴뚝같지만 아직도 부족한 민생과 복지

1. 실업 터널은 짧게, 일자리는 더 가깝게	79
낮아지는 실업률, 그래도 외환 위기 이전만 못해	80
'안정적 유지' 로는 미흡한 청년 실업률	82
지역업주, 절대 수 늘었으나 비중은 하향 추세	84
고용률 지속 상승, 2030년까지 72% 목표	86
복지서비스도 늘고, 일자리도 늘고	88
고용안정, 법 제도로 보다 확실하게	90
2. 민생과 양극화, 더디지만 확실히	93
양극화를 완화하는 길	94
소득분배 개선 효과, 꾸준한 상승세	96
신용불량자 280만 명으로 100만 명 감소	98
3. 복지투자 큰 걸음을 내딛다	101
복지지출 비중 8% 진보, 간단한 게 아니다	102
사회보험, 민주화 이후 급속히 성장	104
기초생활보호 대상자 150만 명까지 확대	106
저소득층 무상교육비 지원 대상 13%로 확대	107
교사와 학생이 보다 가깝게	108
진학률과 교육의 질 동반 성장	110
일하는 여성, 수는 늘고 힘은 세지고	112
육아지원 예산 감대중 정부 때보다 4배 증가	114
100% 돌파한 주택보급률	116
주거복지, 더 많이 더 가깝게	118

- 4. 환경과 문화, 삶의 질이 높아진다 _____ 121
 - 더욱 넓어진 자연환경보호지역 _____ 122
 - 더 많아져야 할 우리 물 우리 공기 _____ 124
 - 생활과 더욱 가까워진 문화시설 _____ 126

4

선진국이 되기 위해 민주주의는 계속되어야 한다

- 1. 민주주의를 지키고 정치를 바꿨다 _____ 133
 -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세계에서 몇 등이나 될까? _____ 134
 - 우리 국민의 인권은 어떻게 지켜지고 있을까? _____ 136
 - 선거 자유는 확대하고 불법선거는 엄단하고 _____ 138
 - '정경유착' 과 '부패정치' 라는 말은 어디로 가버렸을까? _____ 140
 - 지역주의 해소, 성공하지 못했지만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_____ 142

- 2. 정부, 확 달라졌다 _____ 145
 - 그래도 부족한 대국민 서비스 인력 _____ 146
 - 세계에서 가장 빨리 혁신하는 나라 _____ 148
 - 시스템이 일인자 _____ 149
 - 정책서비스도 '만족경영' 시대로 _____ 152
 - 세계 3위 디지털 정부 _____ 154
 - 국민의 소리가 제도를 바꿨다 _____ 156
 - 대통령 업무추진비를 세부내역까지 공개하는 나라 _____ 158
 - 규제 개선으로 2조216억 원을 벌었다 _____ 160
 - 여성공무원 비율 38%, 장애인 의무 고용률 2% 달성 _____ 162
 -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보다 부자가 되었다 _____ 164

- 3. 갈등은 풀고 안전은 높이고 _____ 167
 - 불법 폭력시위 1% 미만으로 급감 _____ 168
 - 이젠 우리도 치안 선진국 _____ 170
 - 교통사고 사망자, 13년 만에 절반으로 _____ 172

5

한반도의 평화 없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1. 무력무력 자라난 지구촌의 대한민국 _____ 179

49개국 44만km, 지구 10바퀴 반을 돌았다 _____ 180

에너지 문제도 안정궤도에 접어들었다 _____ 182

16개국과 FTA 타결, 40여 개국과 협상 중 _____ 184

2. 남북이 함께 사는 한반도 _____ 187

군사시설에서 생산시설로 바뀐 개성공단 _____ 188

바다로, 땅으로, 하늘로 오간 사람이 10만 명 _____ 189

남북으로 오가는 배 _____ 190

찾아진 남북회담 _____ 191

핵 위기도 흔들지 못한 대한민국의 안전성 _____ 192

6

박정희 정부부터 노무현 정부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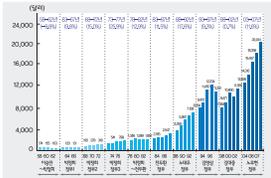
분야별 6개 정부 성과 비교 _____ 197

분야별 3개 정부 성과 비교 _____ 1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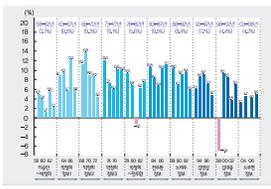
노무현 정부 _____ 199

지표 인덱스 _____ 202

○ 지표 차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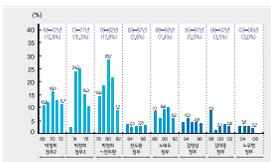
1인당 명목 국민소득(GNI) 추이 _____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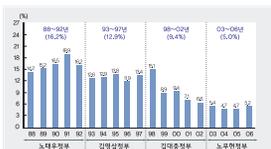
실질 GDP 증가율 추이 _____ 15

국가	기간	상당(1인당)증가율
미국	1980~88	4.2
프랑스	1987~90	3.2
독일	1987~90	2.7
영국	1987~90	2.9
일본	1980~87	3.4
평균	1988~95	3.2
한국	2004~05	4.5

주요 선진국의 국민소득 1만3000~1만7000달러 기간중 성장률 _____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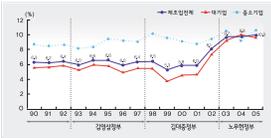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_____ 17



회사채 금리 추이 _____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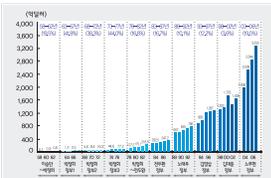
실질 설비투자 증가율 추이 _____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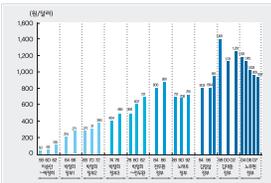
국내 제조업체들의 현금 보유 비중 추이 _____ 21



실질 민간소비 증가율 추이 _____ 23



수출 추이 _____ 27



원화의 대미 달러 환율 추이 _____ 29



경상수지 추이 _____ 31



종합주가지수(KOSPI) 추이 _____ 33



외환보유액 추이 _____ 35

SEK	USD	JPY	GBP
93.1	93.1	93.1	93.1
94.1	94.1	94.1	94.1
95.1	95.1	95.1	95.1
96.1	96.1	96.1	96.1
97.1	97.1	97.1	97.1
98.1	98.1	98.1	98.1
99.1	99.1	99.1	99.1
00.1	00.1	00.1	00.1
01.1	01.1	01.1	01.1
02.1	02.1	02.1	02.1
03.1	03.1	03.1	03.1
04.1	04.1	04.1	04.1
05.1	05.1	05.1	05.1
06.1	06.1	06.1	06.1
07.1	07.1	07.1	07.1
08.1	08.1	08.1	08.1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변화 _____ 37



외국인 직접투자 누계액 추이 _____ 38



제조업 부채비율 추이 _____ 39



부도업체 수 추이 _____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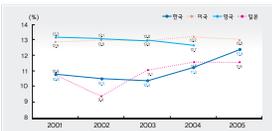
부동산가격 상승률 추이 _____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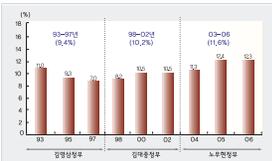
국가채무 추이 _____ 45

구분	경제성장률(98~02)		노무현 성장률(03~05)	
	중간액(조원)	가세율(%)	중간액(조원)	가세율(%)
총내수	72.8	38.0	93.0	39.0
총수출	12.4	6.6	16.2	7.6
총수입	10.9	5.6	13.2	5.9
총투자	16.5	8.2	19.1	8.1
총민간투자	12.6	6.4	15.8	6.3
총국	12.8	6.7	14.2	6.5

국가채무 기간별 증가 요인 _____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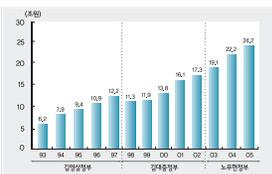
주요 국가별 BIS 비율 추이 _____ 47



일반은행 BIS 비율 추이 _____ 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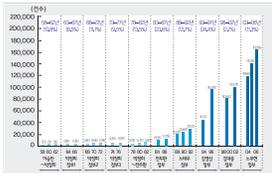
외환거래량 추이(일평균) _____ 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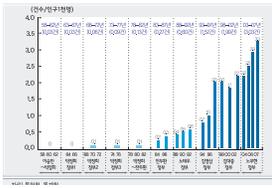
총 연구개발비 추이 _____ 53



공공부문의 R&D 예산 추이 _____ 53



특허출원 건수 추이 _____ 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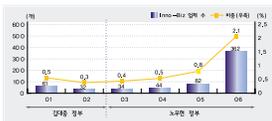
인구 1000명당 특허출원 건수 추이 _____ 54

구분	2005	2006
기술 정보	4,912 (52%)	5,212 (52%)
신소재 기술력	5,212 (52%)	5,212 (52%)
차세대 전자	6,212 (52%)	5,212 (52%)
디스플레이	5,212 (52%)	5,212 (52%)
차세대 반도체	4,912 (52%)	5,212 (52%)
신소재 기술력	5,212 (52%)	5,212 (52%)
차세대 이동통신	5,212 (52%)	5,212 (52%)
차세대 컴퓨터 기술	5,212 (52%)	5,212 (52%)
차세대 컴퓨터 응용 분야	5,212 (52%)	5,212 (52%)
차세대 신약 개발	5,212 (52%)	5,212 (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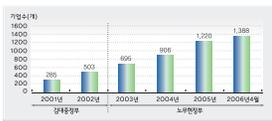
차세대 성장 동력 분야별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및 기술수준 _____ 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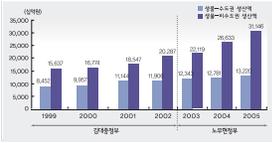
혁신형 중소기업 수 추이 _____ 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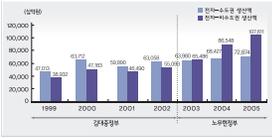
연간 매출액 200억 원 이상 혁신형 중소기업 업체 추이 _____ 57



지방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수 _____ 59



생물산업의 지역별 생산액 추이 _____ 61



전자산업의 지역별 생산액 추이 _____ 61



문화산업 매출액 _____ 63

구분	2006	2002	2003	2004	2005	06-05 연평균 증가율
세계 문화산업 규모 (백만달러)	1,028,890	1,104,650	1,801,038	1,525,100	1,316,790	5.8%
세계 문화산업 규모 (백만달러)	23,277	23,360	27,770	28,023	28,275	5.0%

세계 문화산업 규모 _____ 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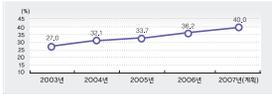
농림축산물 수출액 _____ 65



농림업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실질) _____ 65



균형발전특별회계 규모 _____ 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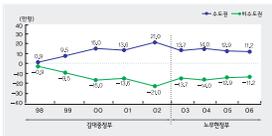
정부 R&D 예산의 지방 비중 _____ 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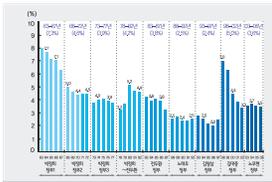
수도권 대비 비수도권의 1인당 GRDP 비율 _____ 70



지방의 수출규모 및 비중 _____ 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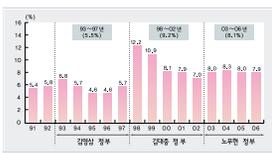
수도권과 지방의 인구 순유입 _____ 73



실업률 추이 _____ 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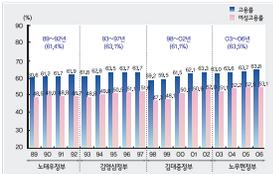
실업자 수 추이 _____ 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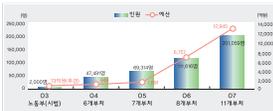
청년 실업률 추이 _____ 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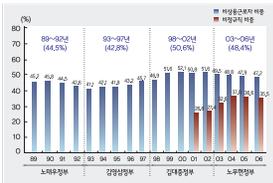
자영업자 수 추이 _____ 85



고용률 추이 _____ 87



사회서비스 일자리 추진 현황 _____ 89



비상용근로자 및 비정규직 비중 추이 _____ 91



고용안정센터를 통한 취업 현황 _____ 91



소득 5분위 배율 추이(도시근로자 가구·가처분 소득 기준) _____ 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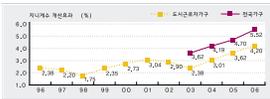
지니계수 추이(도시근로자 가구·총 소득 기준) _____ 95

구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조세 < 이전지출이 없는 일반소득(소득세)	2,494	2,702	2,959	3,238	3,590	3,912	4,271	4,656	5,076	5,539	6,039
조세 < 이전지출이 있는 일반소득(소득세)	2,778	3,079	3,287	3,581	3,918	4,289	4,695	5,141	5,619	6,137	6,691
소득세(합)	5,272	5,781	6,246	6,819	7,508	8,201	8,966	9,847	10,695	11,676	12,730
소득세(전국구)	3,917	4,271	4,571	4,911	5,294	5,719	6,188	6,701	7,259	7,863	8,511
소득세(전국구)	1,355	1,510	1,675	1,908	2,214	2,482	2,757	3,146	3,436	3,813	4,219

조세 · 이전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도시근로자가구) _____ 96

구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조세 < 이전지출이 없는 일반소득(소득세)							3,961	4,284	4,633	5,014	5,442
조세 < 이전지출이 있는 일반소득(소득세)							4,284	4,695	5,141	5,619	6,137
소득세(합)							8,245	8,979	9,774	10,633	11,579
소득세(전국구)							6,017	6,475	7,012	7,682	8,331

조세 · 이전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전국가구) _____ 97



지니계수 개선 효과 _____ 97



금융채무 불이행자 수 추이 _____ 99



사회복지비 비중 _____ 103

구분	79년	102년	108년	연평균 증가율(%)	
				경제성장률	노후연금 성장률
사회보장지출(총액)	6.2	11.2	16.2	11.2	16.2
노령연금 지출(총액)	6.2	11.2	16.2	11.2	16.2
기타 노후복지 지출	6.2	11.2	16.2	11.2	16.2
노후복지지출(합)	12.4	22.4	32.4	12.4	17.4

복지증가율 내역 _____ 103



고용보험 적용 사업체 수 비중 _____ 105



실업급여 수혜율 _____ 105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현황 _____ 106



저소득층 무상교육비 지원 현황 _____ 1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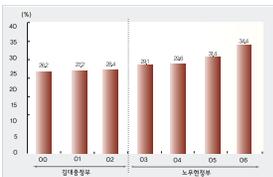
초·중·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_____ 1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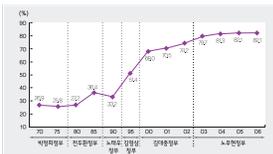
초·중·고등학교 교사당 학생 수 _____ 109

구분	'99	'00	'01	'03	'04	'05	'06	'07	
교육경쟁력 순위	37	34	32	31	18	44	40	42	29
(12개 국가의)	1421	1471	1481	1481	1301	1611	1611	1611	1551

IMD 교육경쟁력 순위 추이 _____ 110



유치원 취원률 _____ 111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_____ 111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추이 _____ 113

연도	총인구 (백만명)	장수	여성인원(백만명)	여성 활동인원(백만명)	여성 인건수(백만명)	남녀소득비
2002	45.84	0.378	5.0	4.0	34.0	0.45
2003	45.70	0.383	5.0	4.0	34.0	0.45
2004	45.78	0.377	5.0	4.0	34.0	0.45
2005	45.80	0.379	5.0	4.0	34.0	0.45
2006	45.75	0.382	5.0	4.0	34.0	0.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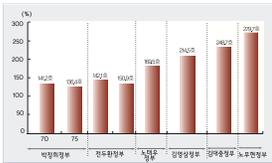
여성권한척도 _____ 113



육아 지원 예산 _____ 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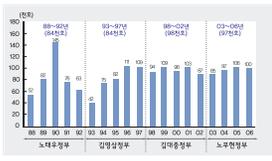
주택보급률 추이 _____ 116



인구 1000명당 주택 수 추이 _____ 117



지역별 주택보급률 추이 _____ 117



공공임대주택 건설 추이 _____ 1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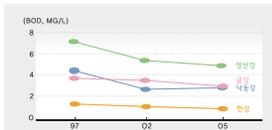
임대주택 건설 비율 _____ 119



연도별 자연환경보호지역 면적(누계) _____ 123



주요 도시별 연간 미세먼지 농도 _____ 125



4대 강 수질오염도 _____ 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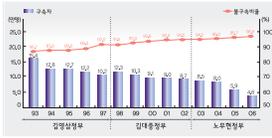
문화기반시설 수 _____ 127

국명	기준 면적 (km²)	인구(수백만 명)	도시면적 (km²)	평균 인구밀도 (명/1km²)	평균시가지 면적(100만 명당)	인간발달지수
한국	100,000	46,994,779	564	60,066	41,942,282	0.91
영국	244,810	59,297,960	9,311	63,068	49,686,000	0.91
일본	377,975	125,790,864	4,624	27,071	117,170,000	0.91
일본	377,975	131,668,000	2,851	46,164	131,960,000	0.91

주요 국가별 도서관 현황 _____ 127



자유화 정도 등급 변화 _____ 135



구속자 및 불구속 비율 _____ 137



간급체포 vs 체포영장 _____ 137

미국	일본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한국	핀란드
6%	5%	5%	5%	5%	5%	10

주요국의 2006년 민주주의 지수조사 선거항목 점수 _____ 139

선거법	선거법 위헌 결정안수	헌정재판소	사법직리명칭	당정부조장수
제 18대	0/1	0/1	-	-
제 19대	2/1	1/1	2/1	6
제 20대	3/07	5/4	8/1	9
제 21대	6/10	1/07	4/1	11

총선 단속 실적 _____ 139



부패인식지수 및 백분율 변화 _____ 141



공직자 부정부패 사범 처리 현황 _____ 141

총선	정당	지역						전국
		수도권	충청	호남	영남	강원	제주	
1988년 (18대)	한정당	304	347	528	463	361	426	2421
	원외당	753	520	491	628	51	491	3454
	총계	1057	867	1019	1091	412	917	5875
1992년 (19대)	한정당	323	451	514	462	461	420	2633
	원외당	348	358	651	628	159	154	2358
	총계	671	809	1165	1090	620	574	4991
1996년 (20대)	신한국당	364	528	728	363	563	321	3424
	국민회	308	84	710	11	57	67	2131
	자유당	54	472	57	701	53	599	1921
2000년 (21대)	한나라당	414	392	37	512	157	369	1861
	민주당	458	362	462	147	128	362	2319
	자유당	85	348	21	121	33	121	626
2004년 (22대)	한나라당	427	250	54	563	461	454	3214
	민주당	621	27	368	11	67	54	1082
	총계	1048	277	422	574	528	508	4296
2008년 (23대)	한나라당	228	154	13	135	121	121	753
	민주당	429	21	309	101	121	121	1002
	총계	657	175	142	236	242	242	1755

1988~2004년 총선 권역별 득표율 _____ 143

비유성직	비유성직	부흥	야수계열	양계계열	주요부흥직	양계종교	개회종교
42	142	154	265	11	13	160	3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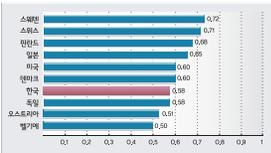
참여정부 출범 이후 지역주의 개선 정도 _____ 143

당계	과제	공적 예산(백만원)	결정 예산(백만원)	결정 예산(백만원)	과제	공공사업 예산(백만원)	예산(백만원)	기타
43,702	22,336	7,391	5,633	2,694	1,794	1,919	942	1,349
(100%)	(100%)	(17.2%)	(25.2%)	(12.2%)	(27.7%)	(27.4%)	(42.2%)	(3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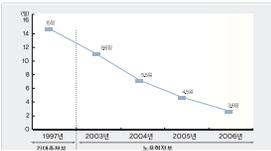
노무현 정부 국가직 공무원 증원 현황 _____ 147

	한국(OA)	일본(OA)	미국(OA)	프랑스(OA)	독일(OA)
공무원 1인당 인구수(명)	41.4	31.4	15.3	13.9	1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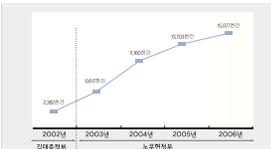
공무원 1인당 인구 수 _____ 1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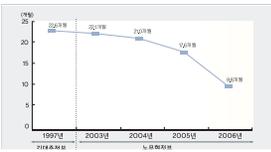
2005 국가별 종합혁신지수 순위 _____ 1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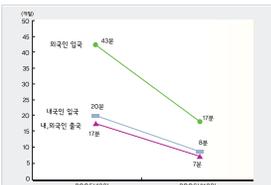
수출입화물 처리시간 단축 추이 _____ 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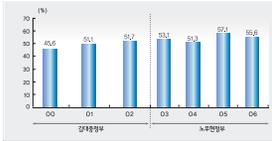
세금 전자신고 건수 증가 추이 _____ 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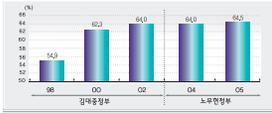
특허심사기간 단축 추이 _____ 1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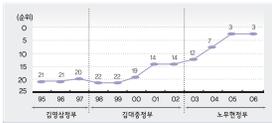
출입국 심사대기시간 단축 추이 _____ 151



중앙행정기관 주요 정책 만족도 _____ 1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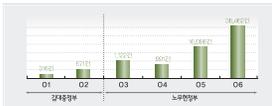
중앙행정기관 민원서비스 만족도 _____ 1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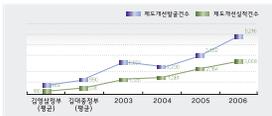
국가정보화 순위 _____ 155



UN 전자정부 수준 평가 _____ 155



국민 제안 건수 _____ 1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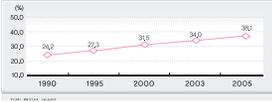
제도개선 실적 _____ 157



연도별 정보공개 청구 및 공개 건수 _____ 1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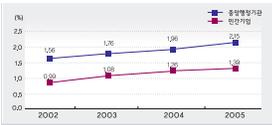
등록규제 건수 현황 _____ 161



여성공무원 비율 변화 추이 _____ 1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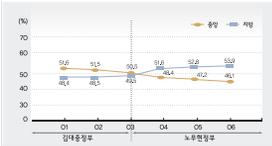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 _____ 163



장애인 고용률 _____ 1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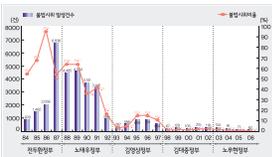
연도별 지방 이양 결정 및 확정 건수 _____ 165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가용 자원 비중 _____ 1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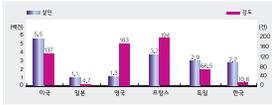
전체 집회 시위 발생 건수 _____ 169



불법 폭력 시위 발생 비율 _____ 169



총범죄 발생 _____ 171



인구 10만명당 살인 강도 발생 _____ 171

구분	한국	캐나다	호랑	뉴질랜드	프랑스	호주	스웨덴	일본	영국
반감기	13년	21년	25년	27년	28년	30년	30년	33년	34년

주요 선진국 반감기 소요기간 _____ 1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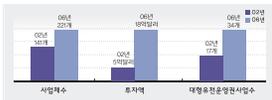
연도별 교통사고 사망자 _____ 173

역대 정부	발굴회수	발굴국가	면적(㎡)
수출회로	7	18	-
수출회로	17	19	258,673
강원상항부	19	34	299,337
강원상항부	48	54	421,000
노무현정부(2002)	23	49	483,000

역대 대통령 해외수방 현황 _____ 181



정상 외교의 지역별 분포 _____ 181



해외 자원 개발 현황 _____ 183



FTA 협상 실적 _____ 185



개성공단 생산액 및 근로자 현황 _____ 188



남북 인적 왕래 _____ 189



남북 선박 왕래 및 물동량 현황 _____ 190



남북회담 개최 및 합의서 현황 _____ 1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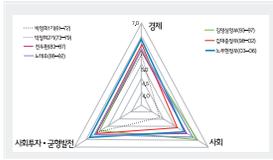
주요기관의 종합국가위험도 평가 _____ 1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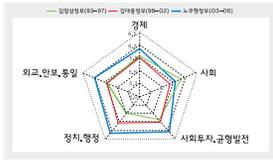
Euro Money의 종합국가위험도 순위 및 점수 _____ 193



Institutional Investor의 종합국가위험도 순위 및 점수 _____ 194



분야별 6개 정부 성과 비교 _____ 197



분야별 3개 정부 성과 비교 _____ 198

1장

이제
한 걸음만 더 가면 선진국이다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인가? 선진국인가, 후진국인가, 아니면 중진국인가? 국제사회에서 누구나 받아들이는 기준을 적용해 보면 대한민국은 선진국의 문턱을 막 넘으려는 나라라고 말할 수 있다. 금년 중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달성하면, 선진국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기준 4가지를 모두 충족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선진국인가? 그러나 그렇게 말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남아있다. 선진국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을 가르는 네 가지 기준을 통해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알아보자.

대한민국이 충족시키고 있는 4가지의 대표적인 선진국 기준

IMF(국제통화기금)의 분류기준

IMF는 선진국과 기타 신흥시장, 그리고 개발도상국이라는 두 개의 범주로 국가를 분류한다. 이 분류에 따르면 현재 선진국은 29개국이며, 아시아에서는 대한민국과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5개국이 선진국이다. IMF는 선진국을 규정하는 기준을 분명하게 제시하지는 않는다. 다만 1인당 소득이 높아도 경제구조가 원유 생산이나 관광 등 특정부문에 지나치게 편중된 나라(쿠웨이트, 카타르, 버뮤다와 같은 나라)는 선진국에서 제외한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OECD는 '선진국 클럽'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각국의 경제성장을 분석할 때 이들을 선진국으로 꼽곤 한다. 현재 회원국은 30개국이며, 아시아에서는 대한민국과 일본이 포함되어 있다. 국민소득이 1만 달러 이하인 국가(헝가리, 슬로바키아, 터키, 멕시코)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회원국 모두를 선진국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국민소득 2만 달러 이상의 나라들

국민소득은 선진국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인 기준선이 있는 것은 아니다. 대개 국민소득 2만 달러 이상 국가를 선진국이라고 부른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55%가 2만 달러를 선진한국의 기준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 자료가 있다(2005년 5월 설문조사).

2005년 현재, 1인당 소득이 2만 달러 이상인 국가는 24개국 정도이며 OECD 평균은 3만1000달러다. 한편 세계은행은 국민소득 1만726달러 이상을 고소득국, 3466~1만725달러의 국가를 중상위소득국, 876~ 3465달러의 국가를 중하위소득국, 그리고 875달러 이하의 국가를 저소득국으로 분류한다(World Development Report, 2007).

인적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인적개발지수(HDI)는 수명, 지식, 생활수준의 세 가지를 기준으로 선진국을 가른다. 이 가운데 수명은 기대수명으로 측정하고, 지식은 성인의 문자 해독률(2/3비중)과 초·중등학교 및 대학 진학률(1/3비중), 그리고 생활수준은 구매력 평가 기준 1인당 GDP로 측정한다.

UNDP(유엔개발계획)는 1993년부터 HDI를 발표해 왔으며, 지수가 0.8 이상인 국가를 고HDI 국가, 0.5이상~0.8미만을 중HDI 국가, 0.5미만을 저HDI 국가로 분류한다. 2006년 보고서에서 고HDI 국가는 63개이고, 한국은 총 115개국 중 26위(0.912)에 기록됐다. 위의 세 가지 기준에 공통으로 속하는 선진국들은 모두 0.9이상의 HDI를 기록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아직 채우지 못한 선진국의 조건들

복지재정 비중

복지 분야 재정지출이 전체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선진국의 절반수준에 불과하다. 한국의 재정 지출 가운데 복지지출 비중은 26.7%(2005년)인 데 반해 미국은 그 두 배에 달하는 57.3%(2004년)이며, 호주는 51.4%(2005년), 스웨덴은 54.5%(2004년), 이탈리아는 66.0%(2004년) 등이다. OECD국가의 평균 수치는 56.5%다.

이를 GDP 대비 비중으로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선진국 대비 1/3 수준으로 떨어진다. 한국은 6.0%인데 미국은 12%, 호주는 13.2%, 스웨덴은 19.7%, 이탈리아는 25.4%에 이르며 OECD 평균은 19.2%다.

대한민국이 지금처럼 복지재정 비율을 유지해서는 지속가능한 성장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상태가 계속되면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 복지 수요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지 못하게 되어 사회 양극화의 골이 깊어지게 된다. 여기에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게 되면 국가의 인적자본이 부족해진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람에 대한 앞선 투자를 통해 경제 발전과 사회통합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사회적 자본 성숙도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또 하나의 과제는, 원칙과 상식이 통하여 예측 가능성이 높은 사회, 약속과 책임을 존중하여 신뢰성이 높은 사회, 서로를 존중하는 대화와 타협의 문화로 통합력이 높은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아직 우리는 원칙과 신뢰, 통합과 같은 사회적 자본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독선과 독재의 시대가 남긴 불신과 대결, 불관용과 타도의 문화가 정치, 경제, 사회 곳곳에서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2006년 IMD(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가 발표한 사회응집력 비교에서 한

국은 비교 대상국 61개국 가운데 48위에 기록되었다. 1990~2003년 동안의 법·질서 준수지수는 OECD 30개국 중 27위(KDI, 2007년 1월), 2006년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부패인식지수는 163개국 중 42위다.

사회적 자본은 4가지로 구성된다. 사회 구성원의 공동 이익을 위한 신뢰(trust), 원칙(integrity), 통합(solidarity), 개방(openness)이 그것이다(세계경영경제학회, 2000년).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려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성숙한 민주주의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관용의 문화를 뿌리내려야 한다. 대화와 타협으로 서로를 설득해 의견을 모으고, 양보와 타협을 통해 이익을 서로 교환할 줄 알아야 한다. 그래도 안 풀리는 문제는 규칙으로 풀어야 한다. 규칙에 따라 승부하고,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 그래서 승자는 책임 있게 일하고, 패자도 협력하면서 다음 기회를 기약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공동의 목표를 향해 힘을 모을 수 있다. 이것이 성숙한 민주주의이고, 사회적 자본이 튼튼한 선진 민주국가이다.

여성인력 활용도

여성이 사회 활동을 하는 비율은 선진국을 가르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다. 대한민국은 출산·육아기의 경력 단절, 낮은 직업상 지위, 여성 친화적 일자리 부족 등의 이유로 여성 고용률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다. 2004년 OECD의 보고에 따르면 한국의 여성 고용률이 52.2%인 데 반해 미국은 65.4%, 일본은 57.4%, 영국이 66.6%, 스웨덴은 71.8%였으며, OECD 평균은 55.6%였다.

한편 여성의 무급 가족종사자(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무급으로 일하는 종사자)의 비중은 한국이 14.8%, 미국은 0.1%, 일본이 8.9%, 영국은 8.9%, 독일이 0.5%였으며, OECD 평균은 1.9%였다(ILO, 2004년).

사회서비스업에서 여성을 얼마나 고용하고 있는가도 선진국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다. 2003년에 OECD가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사회서비스업 여성 고용비율은 12.6%였으나 미국은 27.7%, 영국은 26.9%, 스웨덴은 32.5%였으며, 네덜란드가 28.1%였다. 여성인력을 널리 활용하는 것은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대응하여 노동 공급의 양과 질, 두 측면에서 경제 활력과 성장 잠재력에 기여한다.

시대가 바뀌면 생각도, 전략도 바뀌어야 한다

2007년에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달성하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24번째로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국가가 될 전망이다. 올해는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선진국 그룹의 일원이 되어 국민들이 자신감과 긍지를 갖는 해가 될 것이다.

그러나 아직 많은 숙제를 안고 있다. 한 걸음만 더 가면 선진국이지만, 지금까지 온 걸음보다 쉬운 걸음은 아닐 것이다. 인구구조 변화, 양극화 등 사회구조 변화라는 미래과제를 극복하고 앞서 가는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

30년 전 1000달러에 희망을 걸고 있던 시대와 지금은 크게 다르다. 시대가 바뀌면 생각도, 전략도 바뀌어야 한다. 1000달러 시대의 패러다임에서 2만 달러 시대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앞서 가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

지나온 길을 돌아보며 우리의 성공을 확인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다. 더불어, 새롭게 갈 길을 위해 새로운 생각과 전략을 가다듬는 것도 미룰 수 없는 일이다.

2장

경제,
1000달러에서 2만 달러가 되기까지

“한국 경제 파탄, 침몰 위기”

“경제성적표 역대정부 중 최악”

노무현 정부 기간 동안 국민들이 자주 들어온 얘기다. 4년 내내 계속된 이런 언론 보도를 보면, ‘우리 경제는 정말 이제 끝장나는가 보다’ 라는 걱정을 안 할 수 없다.

하지만 실제 우리 경제는 이런 주장과는 완전히 다르게 가고 있다. 한마디로 ‘한국 경제는 제대로 가고 있다’. 지표로 본 한국 경제는 파탄과 위기는커녕, 세계 10위권을 굳건히 지키며 순항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 4년간 한국 경제는 수출·주가·소득 등 주요 지표에서 모두 2배가 넘는 실적을 달성했다.

경제 성장률은 평균 4.3%를 기록했다.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에서 나타나는 10% 내외의 고도성장은 아니지만, 국민소득 1만5000달러 이상의 선진국 수준에서는 건실한 5% 안팎의 성장을 유지해 왔다. 국민소득은 지난 1995년 1만 달러를 돌파한 지 12년, 외환 위기를 겪은 지 7년 만에 당당히 2만 달러까지 치고 올라와 이제 우리는 선진국 문턱에 와 있다.

수출은 지난해 3000억 달러를 넘어 세계 11위를 달성했다. 물가는 2~3%대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경제의 종합성적표라고 할 수 있는 종합주가지수는 노무현 정부 출범 직후 600선에서 꾸준히 상승해 올해 사상 최고치인 1600을 돌파했다. 5년 만에 3배 가까이 상승한 것이다. 외환 위기 당시 300억 달러에 불과했던 외환보유액도 2000억 달러를 넘어 세계 5위에 올랐다.

그러나 아무런 어려움 없이 순항해 온 것은 아니었다. 외환 위기의 후유증으로 내수가 쉽게 살아나지 않은 탓에 경기 회복이 생각만큼 빨리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인기에 영합하거나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는 낡은 정책을 배제하고 원칙에 입각한 정책 운용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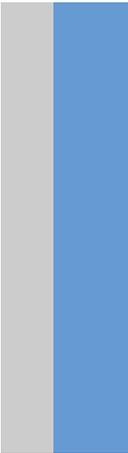
장을 조성하고 경제 체질을 개선했다. ‘동반 성장’ 전략을 통해 성장 동력과 잠재력을 확충하고 국민과 함께 슬한 난관을 이겨냄으로써 선진국 진입의 문턱에까지 들어선 것이다.

특히 여러 차례에 걸친 북핵 위기, 신용불량자 문제, 금융 위기, 부동산 문제, 환율 급락, 유가 급등과 같이 수많은 위기 요인들을 극복하며 여기까지 온 것은 노무현 정부만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자부심을 가질 만한 일이다.

2006년 12월 말의 한 여론조사를 보면, 우리 국민은 1987년 민주화 이후 거둔 가장 큰 성과로 정치민주화·인권신장보다 경제성장(23.7%)을 더 많이 꼽았다. 한국 경제는 이제 국민소득 3만 달러의 명실상부한 선진국 대열을 향해 가고 있다.

1. 굿바이, IMF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 정부·국민이 함께 도달한 선진국의 문턱
경제성장을 선진국형 성장속도로 진입
원자재 가격 급등에도 안정적인 물가
금리는 점진적인 하락세
부진한 설비투자를 기술혁신 역량 강화로 극복
경기부양책 없이도 설비투자·민간소비 증가세로 전환하는 저력 발휘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 정부·국민이 함께 도달한 선진국의 문턱

국민생활수준 지표인 1인당 국민소득(명목 GNI, 달러 기준)은 노무현 정부 들어서 2007년까지 큰 폭의 상승률(연평균 11.6%, 잠정)을 기록해 1990년대 이후 가장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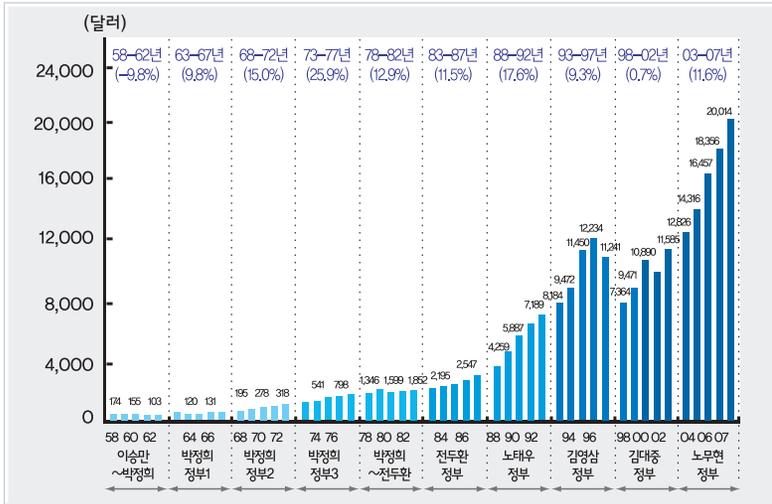
1인당 국민소득은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2003년 외환 위기 이전의 수준을 회복한 이후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2006년 1만8000달러대, 2007년에는 2만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1995년 처음으로 1만 달러를 넘어선 지 12년 만의 일이고, 외환 위기를 겪은 뒤 다시 1만 달러에 진입한 지 7년 만의 일이다.

다른 나라의 경우 국민소득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로 가는 데 걸린 기간을 보면, 미국은 10년, 독일은 13년, 일본은 6년, 싱가포르는 5년이 소요됐다. 싱가포르 같은 도시형 국가를 제외하고는 2차대전 이후 해방된 나라 중 2만 달러에 들어선 나라는 아직 없다.

국민소득 2만 달러 달성이 '환율 하락(원화가치 상승) 덕분'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물론 환율이 하락하면 달러로 표시되는 국민소득이 늘어나는 여지는 있다. 하지만 우리 돈의 가치가 높아진 것은 우리 경제가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체질 강화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국민소득 2만 달러 달성이 단순히 환율 하락 덕분이라고 깎아내릴 필요는 없다. 우리 기업과 국민들의 피땀 어린 노력의 결과이며 한국 경제의 성과로서 자부심을 가져도 좋은 성적표다.

실제로 1인당 국민소득 증가에 대한 환율요인의 기여율은 지난 2000~2006년 중 약 32.4% 정도다. 일본과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1인당

인당 명목 국민소득(GNI)



자료) 한국은행, IMF, 재경부

주) 1. 괄호 안은 기간별 연평균 증가율임

2. 해방 이후 5년 단위로 1958~2005년은 한국은행과 IMF통계치를 이용하여 재산출, 2006년과 2007년은 재경부 추정치를 인용함

국민소득이 1만 달러 수준에서 2만 달러를 돌파하는 데 각각 6년과 5년 이 소요되었고, 같은 기간 중 환율요인의 기여율이 각각 55%와 32%로 나타났다.

경제성장률 선진국형 성장속도로 진입

노무현 정부 기간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4.3%다. 이를 놓고 1990년대 초반이나 2000년대 전후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일부 언론과 야당이 '노무현 정부가 경제를 망쳐놓았다'고 주장하는 주요 근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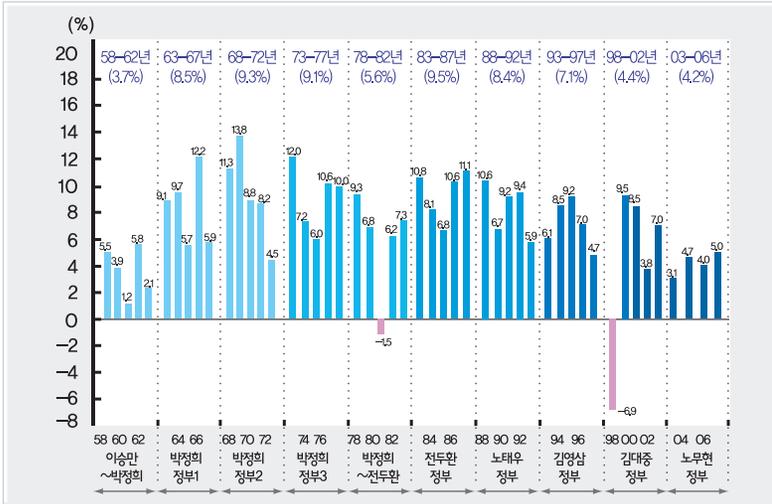
경제성장률에 대해 그렇게 단선적으로 얘기하는 건 무책임하다. 국민소득이 높아지면 성장률이 둔화되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는 선진국의 실제 사례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미국, 일본 등 G7 국가들이 소득 1만5000달러였을 때 평균 성장률은 3.2% 수준이었다.

또 2005년 현재 소득 1만5000달러 수준의 국가들은 이보다도 낮은 평균 2.8%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들과 비교하면 우리 경제의 평균 4.3% 성장률은 낮다고 타박할 수준이 결코 아니다.

4% 성장했던 2005년의 경우 우리나라는 선진국클럽이라고 불리는 OECD 국가 30개 중 성장률 7위를 기록했다. 동구 신흥국, 아일랜드와 도시형 국가를 제외했을 경우 순위권에 해당하는 성적이다.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맞아 이제 우리나라도 고도성장의 환상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성장', '복지와 함께 가는 성장'을 생각해야 할 때다. 중국·인도처럼 9~10%의 성장률을 거두지 못한다고 질책하는 것은 대학생에게 왜 사춘기 청소년처럼 키가 빨리 자라지 않느냐고 나무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실질 GDP 증가율



자료) 한국은행, IMF

주) 1. 괄호 안은 기간별 연평균 증가율임.

2. 해방 이후 5년 단위로 기간을 구분하고, 국민의 정부 기간의 경우 금융위기 충격 전후의 영향을 배제하여 처음 2년(98~99년)을 제외한 연평균 성장률을 나타냄

주요 선진국의 1만3000달러~1만7000달러 기간중 성장률

국가	기간	실질GDP증가율
캐나다	1985~88	4.1
프랑스	1987~90	3.2
독일	1987~90	2.7
이태리	1987~90	2.9
일본	1986~87	3.4
영국	1988~90	2.6
미국	1981~85	3.2
평균	3.7년	3.2
한국	2004~06	4.5

자료) 한국은행, IMF, OECD

주) 한국 2006년 GDP 성장률 5.0%로 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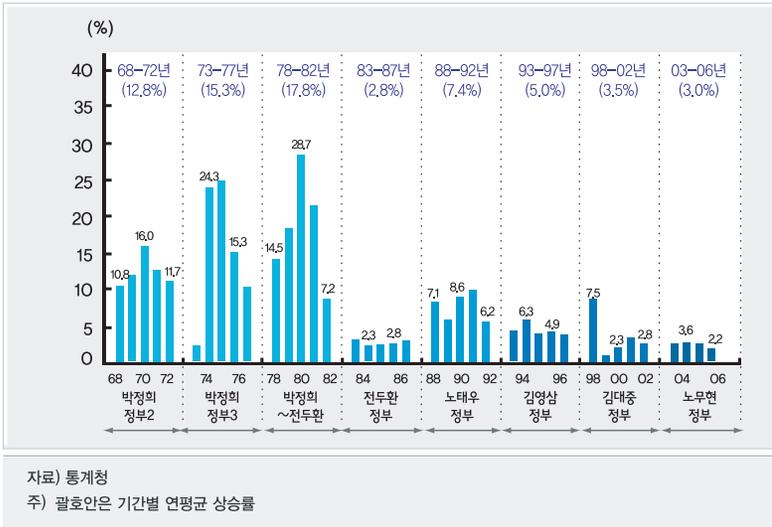
원자재 가격 급등에도 안정적인 물가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03년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연평균 3% 수준으로서 역대정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2003~2006년 기간 동안의 소비자물가 연평균 상승률은 약 3.0%로서 1998~2002년 기간의 연평균(3.5%)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원유 등 원자재 가격이 급등세를 나타낸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물가 추이가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내수 부진으로 인해 경기 부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으나, 인위적인 경기 부양을 철저히 자제함으로써 물가 안정 기조가 유지될 수 있었다.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 이외에도 환율 하락(원화 강세), 농축수산물 가격의 안정 등이 물가 안정에 일조했다.

소비자물가상승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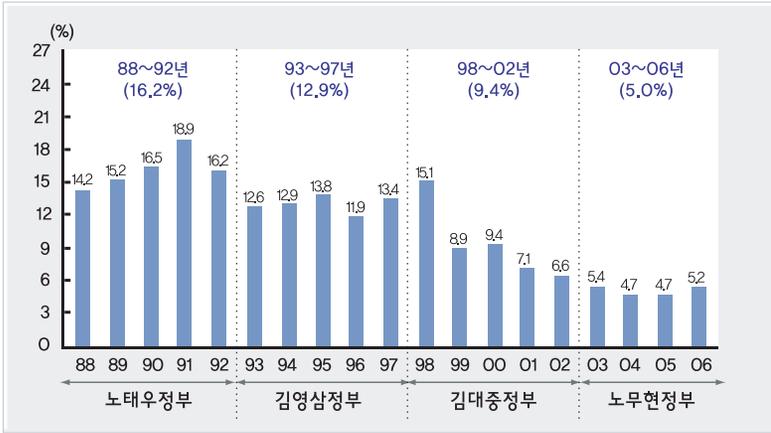


금리는 점진적인 하락세

금리는 노무현 정부 초기 SK글로벌 분식회계 사건과 신용카드사 부실 우려 등으로 일시적으로 급등세를 보이기도 하였으나, 정부의 신속한 조치로 인해 조기에 안정세를 회복했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1997년 외환 위기의 여파로 급등했던 금리가 경제 안정 및 자본시장 개방 등의 영향으로 등락을 거듭하면서도 저성장 기조 및 풍부한 시중 유동성의 영향으로 점진적인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다.

회사채 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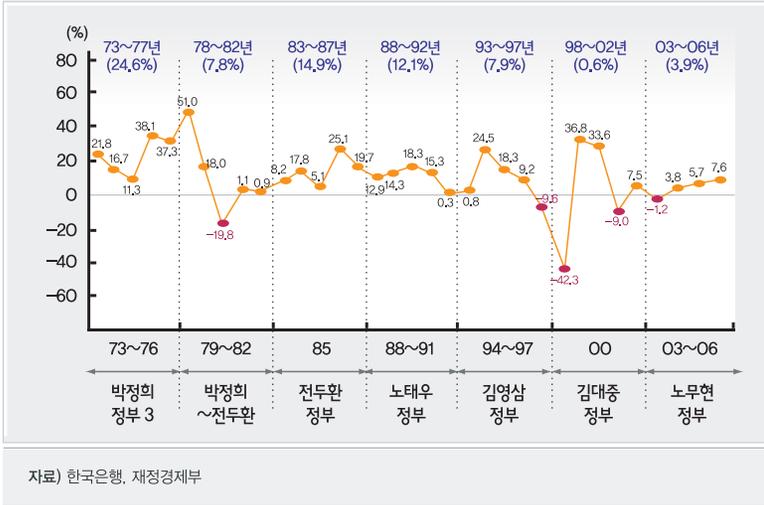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 주) 1. '장외 3년 만기 AA-' 등급 회사채 금리 연평균 기준임
 2. 괄호 안은 기간 평균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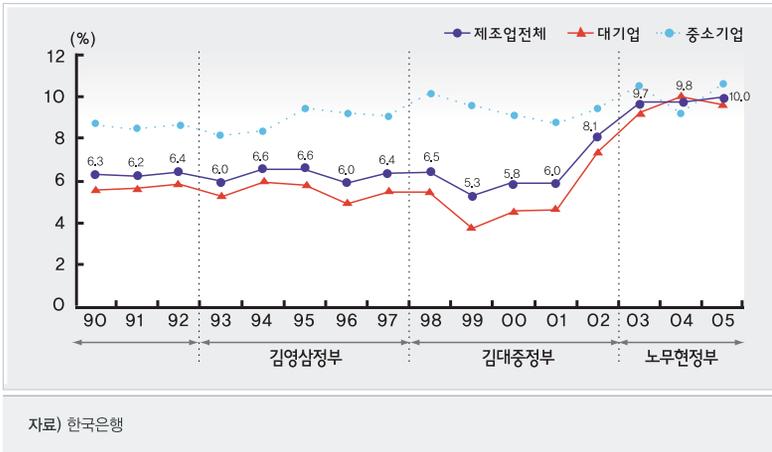
부진한 설비투자를 기술혁신 역량 강화로 극복

경기의 향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설비투자는 노무현 정부 출범 직후인 2003년에 감소세를 보였으나, 이후 점진적인 증가세를 회복하고 있다. 기업의 현금보유 비율이 사상 최대에 이르고 있지만, 설비투자가 늘지 않아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고 있는 구조적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07년 1월 조사한 결과를 보면, 국내기업들은 신규사업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이유로 “신사업발굴의 어려움”(40.4%), “기술력 등 내부 혁신 역량 부족”(12.7%), “각종 규제”(16.3%)를 들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기업의 혁신 역량 강화와 합리적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노무현 정부는 기업의 기술 혁신 역량 강화, 미래 성장 동력 확충에 무엇보다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설비투자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실질 설비투자 증가율 추이



국내 제조업체들의 현금보유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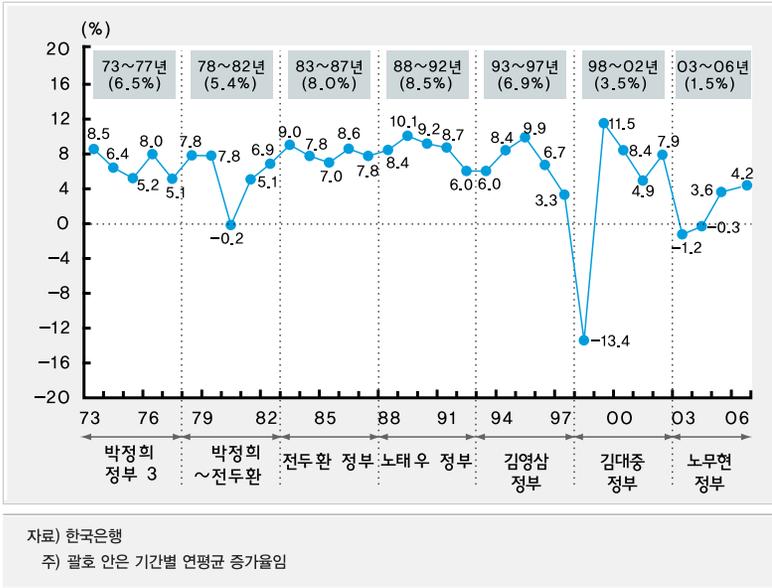


경기부양책 없이도 설비투자 · 민간소비 증가세로 전환하는 저력 발휘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민간소비는 2003~2004년에 사상 처음으로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인 바 있으나, 2005~2006년에 연간 3~4%의 증가율을 회복함으로써 전 기간 연평균 증가율은 1.5%를 기록했다. 2002년까지 신용카드 버블 등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던 민간소비는 2003년 이후에는 신용카드 버블 붕괴로 인한 조정과정에 직면하게 된다. 2005년 들어서는 가계부채 조정이 어느 정도 진전을 보이면서 민간소비는 2006년 현재까지 증가율이 점차 높아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대한민국 역사상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을 쓰지 않은 최초의 정부이다. 그럼에도 이제 설비투자도 회복되고, 민간소비도 눈에 띄게 좋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원칙에 입각한 경제운용으로 한국 사회의 경제적 토대가 튼튼해진 것임을 입증해 주는 지표라 하겠다.

실질 민간소비 증가율 추이



2. 우리 경제는 얼마나 튼튼할까?

3000억 달러를 넘어선 수출, 세계 11위

우리 경제의 안정성을 반영하는 환율

경상수지는 안정적인 흑자 기조

종합주가지수 사상 최고치 경신

세계 5대 외환보유국이 되다

당연히 국가신용등급도 올라갔다

외국인 직접투자 100억 달러 이상 유지

기업의 빛이 줄고 있다

매년 망하는 기업, 4년 동안 절반 이하로

마침내 부동산도 꺾였다

부실언론이 만들어낸 빚더미 대한민국

은행은 건강한가?

외환거래 늘었으나 국제수준에는 미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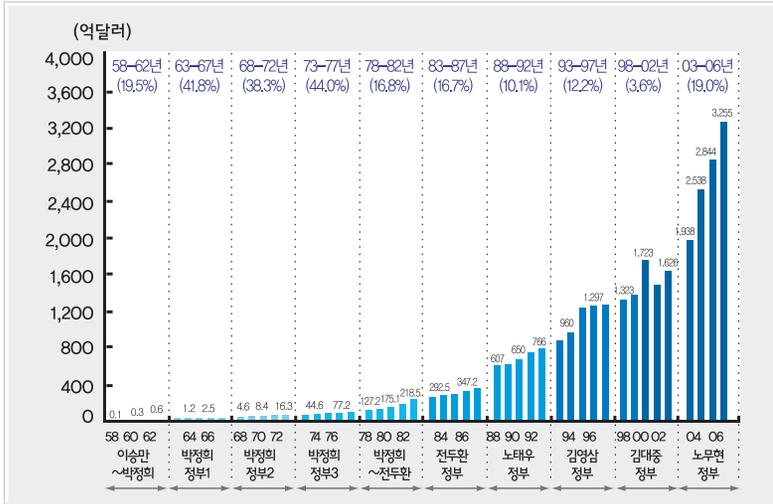
3000억 달러를 넘어선 수출, 세계 11위

대외 수출은 2003년 이후 연평균 19.0%의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한 결과 2006년에 연간 3000억 달러의 고지를 돌파했다. 노무현 정부 출범 직전의 2배에 가까운 액수이며, 세계 11번째 규모이기도 하다. 중계무역국을 제외하면 수출 규모면에서 이제 우리 앞에는 G7과 중국만이 있을 뿐이다.

수출 증가세의 지속은 2004년 이후 원자재 가격 상승, 유가 급등, 원화 강세 등 불리한 대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국내 경기를 견인하는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수출 호조는 세계경제의 성장세 지속이라는 경기 요인도 있으나, 구조적으로는 기술 개발을 통한 수출산업의 고부가가치화, 국내 산업 경쟁력 제고 등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수출



자료) 무역통계(KOTIS), IMF

주) 해방 이후 5년 단위로 기간을 구분하고, 괄호 안은 기간별 연평균 증가율임

우리 경제의 안정성을 반영하는 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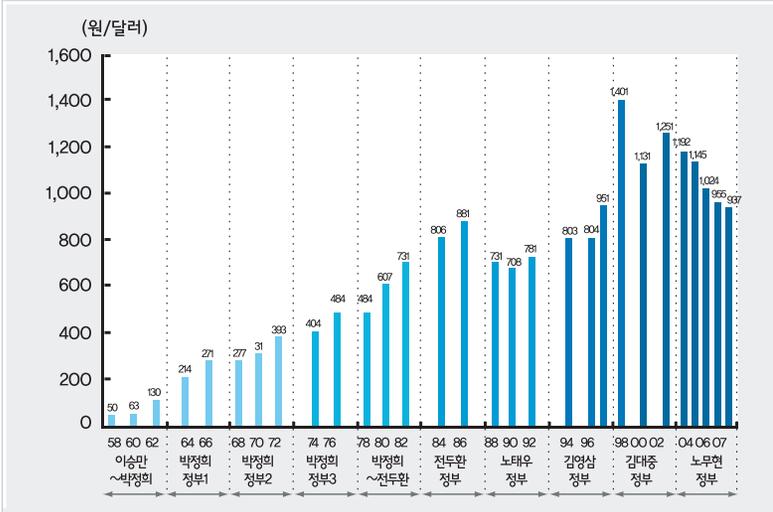
달러 환율은 노무현 정부 들어서 수출 호조,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유입 등에 따라 점차적으로 하락하면서 2006년 연평균 955원을 기록하여 김영삼 정부 말기(1997년)와 비슷한 수준을 보인다.

환율 하락(원화 강세)은 경상수지 흑자 기조의 유지와 외환보유고의 증가세 지속 등 우리 경제의 안정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경상수지 흑자 누적액은 노무현 정부 기간(2003~2006년) 중 약 600억 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외환보유고는 노무현 정부 출범 직전(2002년)에 비해 2배나 늘어난 약 2400억 달러(2006년 말 현재)에 달하고 있다.

환율 변동은 기본적으로 경상수지, 자본 유출입 등에 의해 영향을 받으나, 우리 경제의 경쟁력 강화 및 대외신인도 증가에 따른 외화 유입 증가로 인해 당분간 상향추세로 반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원화의 대미 달러 환율 추이



자료) 한국은행, IMF
 주) 1. 연간 평균 기준임.
 2. 2007년은 1~4월 평균 기준임

경상수지는 안정적인 흑자 기조

경상수지는 2003년에서 2006년에 이르기까지 누적 기준으로 약 612억 달러 흑자를 실현하는 동시에 연도별로 안정적인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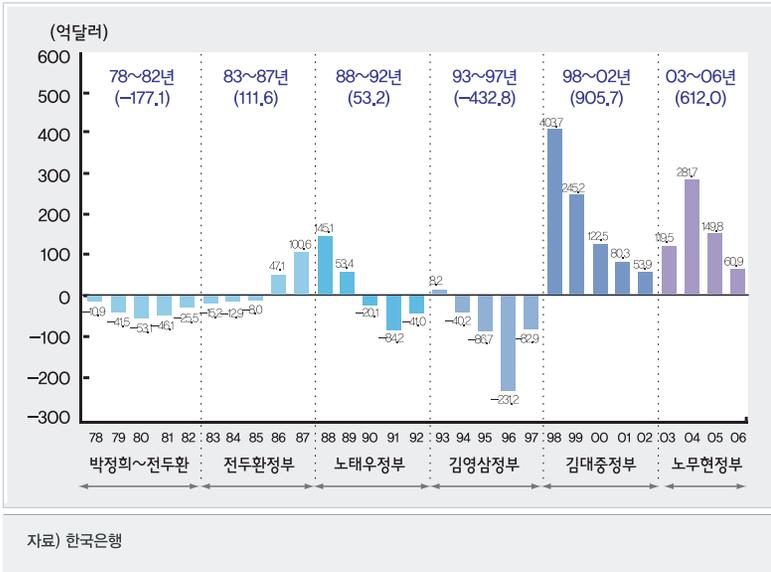
경상수지 흑자 기조는 내수 경기의 상대적인 부진을 반영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는 경상수지 흑자에 따른 국민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다.

김대중 정부 기간에는 외환 위기 영향으로 경상수지 흑자가 급격하게 늘었다가 다시 줄어드는 모습을 보인 데 반해 노무현 정부 들어서는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비교적 견실하고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명목 GDP 대비 경상흑자 비율도 노무현 정부 들어 2004년을 제외하고는 2% 수준에서 안정적 변화를 보이고 있다.

환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한 것은 IT산업을 비롯한 우리 주력 산업의 대외 경쟁력 강화에 기인한다. 다만 서비스업의 취약한 경쟁력으로 인해 서비스 수지 적자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어 경상수지 악화 요인으로 작용한다.

경상수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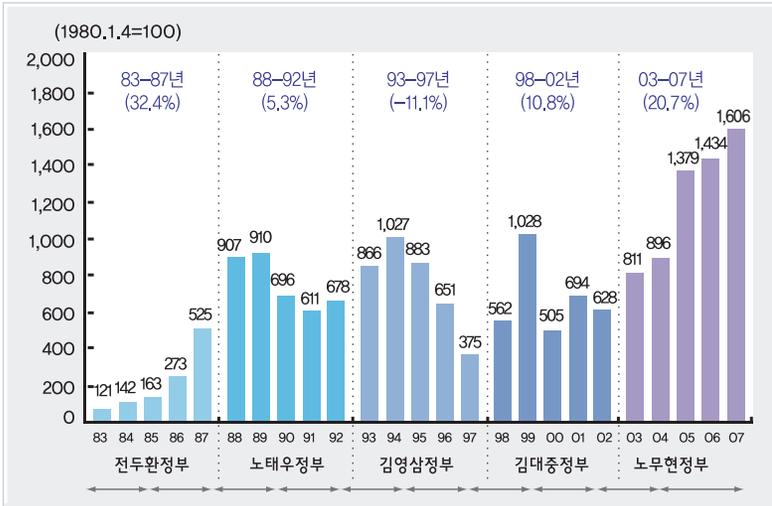
종합주가지수 사상 최고치 경신

노무현 정부 출범 직전 600대에 머물던 종합주가지수(KOSPI)는 꾸준히 상승세를 지속해 2007년 사상 최고치에 이르는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다.

국내 주식시장은 상장기업들에 대한 저평가, 과거 큰 폭의 경기변동, 해외 증시 변화, 지정학적 안보요인 등에 극히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마의 1000'의 벽을 쉽게 뚫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머물러 왔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 들어 안정된 거시경제 운용, 안보리스크의 감소, 경제체질 강화 등이 뒷받침되고 세계적 유동성 증가가 더해지면서 2005년 1000의 벽을 뚫고 상승세를 지속, 2007년에는 출범 직전의 2.5배에 이르는 1600까지 오르는 기염을 토하고 있다.

주가지수가 경제의 종합성적표라고 할 때 노무현 정부 들어 우리 주식시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것은 세계 증시의 상승 기조와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국내 경제의 체질과 경쟁력 강화가 뒷받침되지 않았다면 달성할 수 없는 성과였다.

종합주가지수



자료) 증권거래소

- 주) 1. 괄호 안은 기간별 연평균 등락률임
 2. 2007년은 5월 기준

세계 5대 외환보유국이 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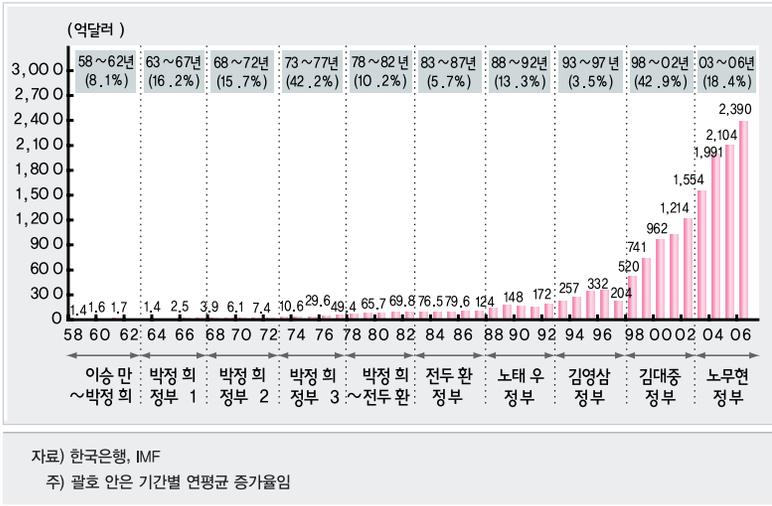
외환보유액은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급속한 증가세를 보이면서 2006년 말 사상 최대 규모인 약 2400억 달러를 기록, 중국, 일본, 러시아, 대만 등에 이어 세계 5대 외환보유국(2006년 12월 기준)이 되었다.

김영삼 정부 시기인 1997년 외환 위기가 있었던 해에 204억 달러에 불과했던 외환보유액은 김대중 정부 임기 말에 1214억 달러로 안정적 추세를 확보하고, 노무현 정부 출범 4년 만에 1997년 외환보유액에 비해 10배가 넘는 2400억 달러를 기록했다.

외환보유액의 증가는 수출 증가 등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고, 성공적인 기업 및 금융 구조개혁과 국가 신인도 향상 등으로 외국인 투자자금이 꾸준하게 유입된 데 기인한다.

외환보유액의 적정 수준에 관한 일률적인 견해는 없으나, 우리나라의 특수성(소규모 개방경제, 지정학적 요인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수준의 외환보유액을 유지하는 것은 대외신인도 제고와 위기 재발 방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외환보유액 추이



당연히 국가신용등급도 올라갔다

국가의 외채 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국가신용등급은 노무현 정부 기간에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2개사로부터 상향조정을 받았다.

국가신용등급 평가에 있어서 외환보유액, 외채구조 등 대외부문 건전성이 가장 중요하지만, 거시경제 여건, 재정 건전성, 금융 및 기업부문 경쟁력, 노동시장 유연성, 안보 위협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사가 지난 2005년 7월에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A-에서 A로 1단계 상향조정했고, 피치(Fitch)사도 같은 해 10월에 2002년 6월 이후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A에서 A+로 상향조정했다.

무디스(Moody's)사는 비록 등급조정은 아니지만 2006년 4월 추후 등급조정 가능성을 나타내는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조정했다.

3대 신용평가기관의 평가 등급을 점수(최대 20점)로 환산한 수치의 평균을 보면 2003~2006년 중 14.6점을 기록하여 1998년 외환 위기로 인해 기록한 최악의 점수 10.3점에서 꾸준히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가신용등급은 기업, 금융기관 등 민간기관의 신용등급 판정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등급 상향조정은 국가의 대외신인도 제고는 물론 민간부문의 해외차입비용 감소에도 기여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변화

S&P		Moody's		Fitch	
88,10,1	A+	86,11,18	A2	96,6,27	AA-
95,5,3	AA- (1단계 ↑)	90,4,4	A1 (1단계 ↑)	97,11,18	A+ (1단계 ↓)
97,10,24	A+ (1단계 ↓)	95,10,2	A2 (1단계 ↓)	97,11,26	A (1단계 ↓)
97,11,25	A- (2단계 ↓)	97,8,5	A1 (1단계 ↑)	97,12,11	BBB- (4단계 ↓)
97,12,11	BBB- (3단계 ↓)	97,11,28	A3 (2단계 ↓)	97,12,23	B- (6단계 ↓)
97,12,23	B+ (4단계 ↓)	97,12,11	Baa2 (2단계 ↓)	98,2,2	BB+ (5단계 ↑)
98,2,17	BB+ (3단계 ↑)	97,12,21	Ba1 (2단계 ↓)		
99,1,25	BBB- (1단계 ↑)	99,2,12	Baa3 (1단계 ↑)	99,1,19	BBB- (1단계 ↑)
99,11,11	BBB (1단계 ↑)	99,12,16	Baa2 (1단계 ↑)	99,6,24	BBB (1단계 ↑)
				00,3,30	BBB+ (1단계 ↑)
01,11,13	BBB+ (1단계 ↑)				
02,7,24	A- (1단계 ↑)	02,3,28	A3 (2단계 ↑)	02,6,27	A (2단계 ↑)
05,7,24	A (1단계 ↑)			05,10,24	A+ (1단계 ↑)

자료 : 재정경제부
 주 : 각 신용평가사별 신용등급전망(Credit Outlook)은 S&P,Fitch사는 안정적(stable)이며 Moody's는 긍정적(positive)

외국인 직접투자 100억 달러 이상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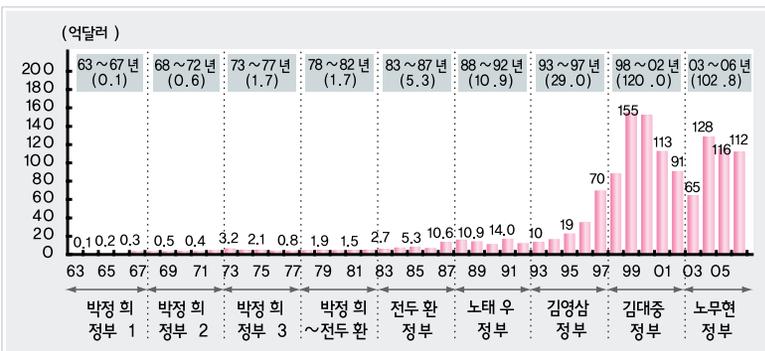
외국인 직접투자는 1990년대 말 김대중 정부 기간에 이어 노무현 정부 들어서도 견실한 유입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다.

외국인 직접투자액은 2002~2003년을 제외하고 연간 100억 달러를 웃도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투자 유치를 위한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 등이 지속되면 외국인 투자 유입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투자형태별로 보면 공장 설립 등 Greenfield(외국인에 의한 공장 및 사업장 설립)형 투자액이 2003년 이후 연평균 58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단, 우리나라의 경제규모 대비 외국인 투자 비중은 아직까지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다는 점에서 외국인을 위한 경영 및 생활환경의 개선과 인센티브 강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외국인 직접투자 추이



자료) 산업자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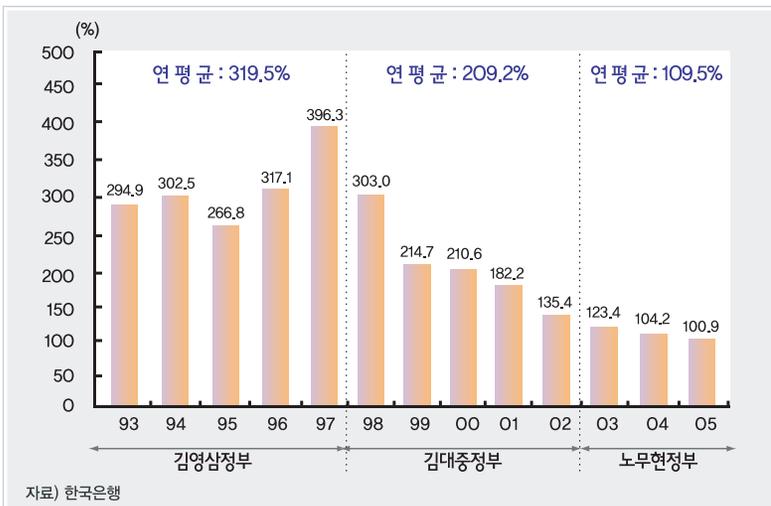
주) 1. 신고 기준임, 2. 괄호 안은 기간별 연간 평균치임

기업의 빛이 줄고 있다

제조업 부문의 부채비율(부채/자기자본×100)은 1997년 외환 위기 직후 하락세를 지속하면서 2005년말 현재 약 100% 수준까지 떨어졌다. 이는 외환 위기 이후 정부의 정책적 유도과 국내 제조업체들의 재무구조 건전화 노력으로 나타난 가시적 성과로 볼 수 있다.

시장원리에 따른 자율적 구조조정 관행을 정착시키고, 부실 회사의 퇴출 관행을 확립함으로써 완전히 개선된 기업 재무건전성이 지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제조업 부채비율



매년 망하는 기업, 4년 동안 절반 이하로

부도업체는 외환 위기가 발생한 직후인 1998년에 2만2000개 수준까지 급증하였으나, 이후 노무현 정부 기간에는 연평균 4000개 수준까지 감소하여, 기업부문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는 단계임을 시사해 준다. 출범 초인 2003년에는 5308개였으나 2006년에는 2529개로 절반 이하로 줄었다.

부도업체 수가 김영삼 정부 출범 첫해인 1993년의 9502개보다도 현저하게 낮은 2529개까지 감소한 것은 경쟁력이 취약하고 내실 없는 기업들의 시장 퇴출이 상당 정도 진척되었음을 반영한다.

결국 현재 시장에 남은 기업들은 기업 구조조정에서 살아남고, 경쟁력이 충분하며, 내실 있는 기업들이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의미하기 때문에 앞서 살펴본 제조업 부채비율의 하락과 더불어 기업부문의 체질 강화를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무분별한 지원은 도덕적 해이 현상을 심화시켜 경제 전체적으로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효율적인 기업에 대해서는 퇴출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부도업체 수



자료) 한국은행

- 주) 1. 전국 대상 기준으로 개인사업자를 포함함
 2. 괄호 안은 기간별 연간 평균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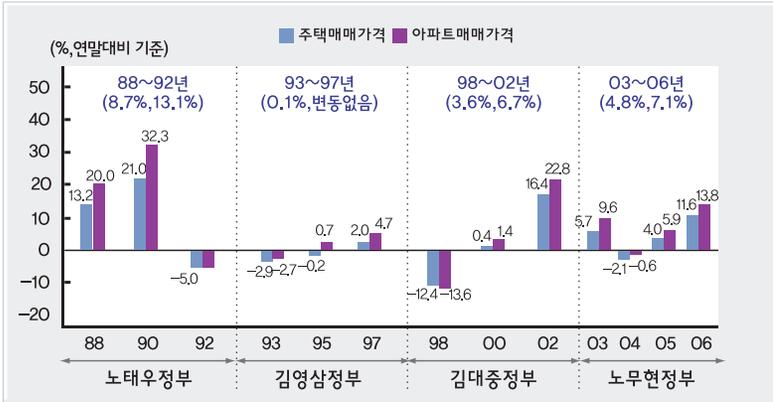
마침내 부동산도 꺾였다

노무현 정부 출범 전부터 불안하던 부동산시장은 10·29 대책으로 2004년 안정되었으나, 주택담보대출 증가 등에 따른 풍부한 시중 유동성 및 주택 수급 여건의 악화로 인해 2006년 다시 상승세로 전환되었다.

이후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규제, 주택공급 확대 방안, 분양가 인하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을 강력히 추진함에 따라 2007년 들어 다시 안정세가 회복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주택가격 안정과 주거의 질적 개선’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2003년 10·29정책, 2005년 8·31정책, 2006년 11·15대책, 2007년 1·11대책 등을 제시하였다. 다만, 단기간에 주택공급의 확대가 실현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미 발표된 대책을 앞으로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부동산가격 상승률 추이



자료) 국민은행
 주) 괄호 안은 기간별 평균 증가율로 전자는 주택매매가격, 후자는 아파트매매가격의 연평균 수치임

부실언론이 만들어낸 빚더미 대한민국

국가채무는 노무현 정부 출범 직전인 2002년 133조6000억 원에서 2007년 현재 301조11000억 원(예산기준)으로 증가했다. 대부분의 언론은 이를 대서특필하며 노무현 정부가 '빚으로 국정을 운영했다'고 비판했다. 정말 그런 것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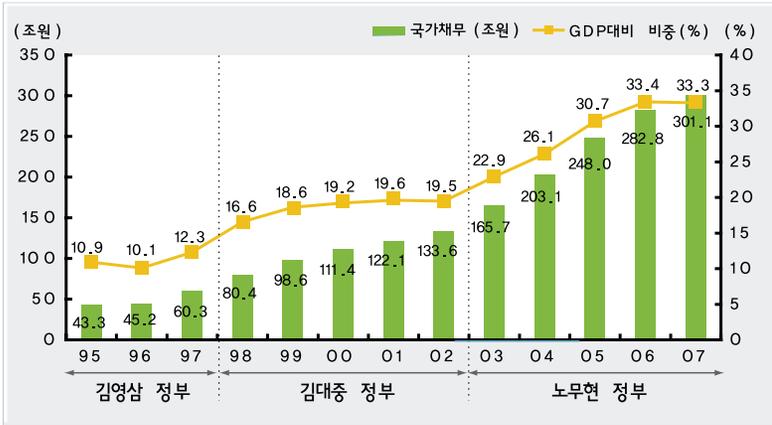
노무현 정부 시기 국가채무는 주로 공적자금 상환과 외평채(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 때문에 늘어났다. 각각 53조 원과 69조 원이다. 둘을 합한 금액은 전체 국가채무 증가분의 73.0%를 차지한다.

공적자금 상환은 일반 재정운용과는 관계없는 불가피한 조치다. 김영삼 정부 시기 외환 위기에 따른 경제 파탄을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 김대중 정부 시절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그 자금의 상환시기가 되면서 부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외평채 발행도 통상적인 재정운용과는 관계가 없다. 이것은 환율 안정을 위해 외국환이라는 대응자산을 가지는 것으로 사실상 채무라고 보기 어렵다. 환율 안정을 통해 수출의 가격경쟁력 유지와 무역수지 흑자 유지에 기여하는 긍정적 영향도 있다. 결국 노무현 정부 기간의 국가채무 증가는 방만한 재정운용과는 관계가 없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비중(33.3%)은 일본(176.2%), 미국(60.9%) 등 선진국뿐만 아니라 OECD 평균치(76.9%)를 크게 밑도는 수준으로,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

국가채무가 증가했음에도 해외의 어떤 신용평가기관도 대한민국의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하지 않았다. 국가채무는 이상 없다. 단지 부실 언론의 부실한 보도가 대한민국을 빚더미에 올라앉은 부실국가로 만들었을 뿐이다.

국가채무 추이



자료) 재정경제부
 주) 2000~06년은 실적기준

국가채무 기간별 증가 요인

구분	김대중 정부('98~'02)		노무현 정부('03~'07)	
	증감액(조원)	기여율(%)	증감액(조원)	기여율(%)
국가채무 (GDP 대비비중 증감)	73.3 (7.2%p)	100.0	167.5 (13.7%p)	100.0
일반회계	26.4	36.0	30.5	18.2
공적자금	0.0	0.0	53.2	31.8
외환시장안정용	16.5	22.5	69.0	41.2
국민주택기금	17.6	24.0	10.6	6.3
기 타	12.8	17.5	4.2	2.5

자료) 재정경제부

은행은 건강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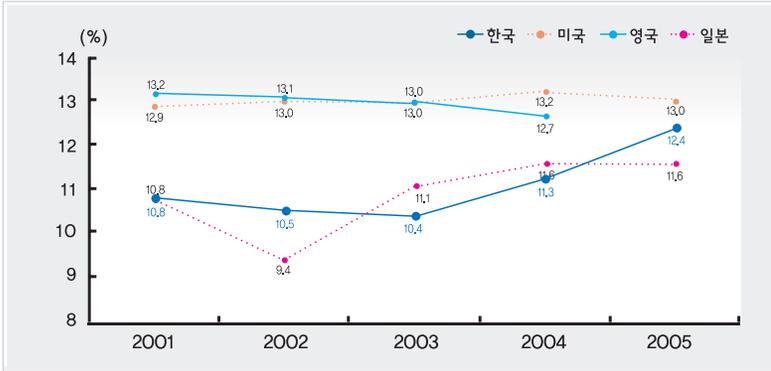
금융서비스가 경쟁력을 상실하면 국부 유출로 경제 위기를 초래할 수 있고, 경쟁력을 강화하면 국부 증가로 경제의 건전성을 지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다. 그 중심에 은행이 있다.

은행의 건전성을 판단하는 기준인 BIS(자기자본 비율)는 노무현 정부 들어 꾸준한 오름세를 보이면서 2005년 12.43%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2006년 현재 12.31% 수준에 있다.

은행 BIS 비율은 1997~1998년 외환 위기의 여파로 7%까지 떨어지면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은행들의 구조조정과 실적 개선 등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국내 은행들의 BIS비율은 국제적으로 비교하더라도 양호한 수준이며, 앞으로도 당기순익 시현 등을 통한 기본자본 확충과 이에 힘입은 보완 자본 인정 여력 확대 등의 효과로 자본 적정성이 점차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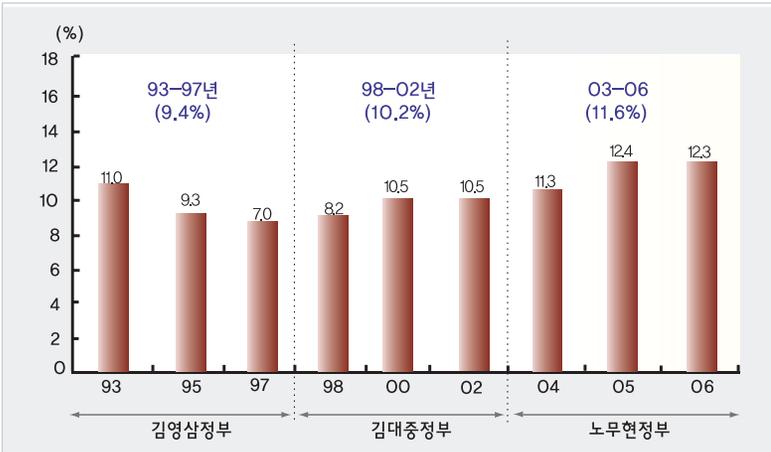
주요 국가별 BIS비율 추이



자료) IMF, 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

주) 1.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은행규제자본 기준 2. 일본은 주요은행 기준

일반은행 BIS비율 추이



자료) 금융감독원, 은행경영통계

주) 1. 1998년부터는 유가증권평가충당금 및 대손충당금을 100%이상 적립한 기준으로 작성
2. 괄호 안은 기간별 연평균 증가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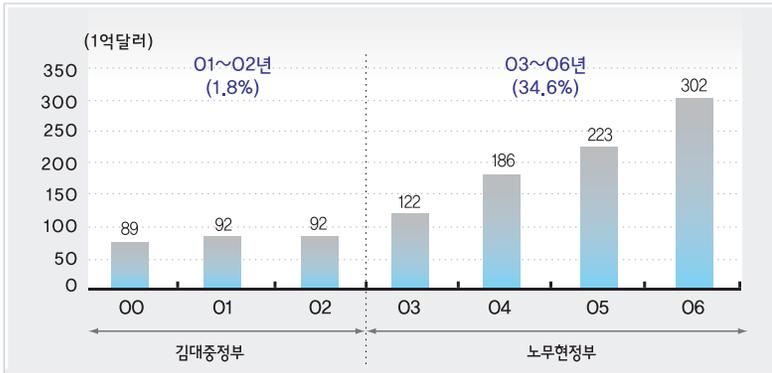
외환거래 늘었으나 국제수준에는 미흡

외환거래량은 노무현 정부 들어 ‘해외투자활성화 방안’, ‘외환시장 중장기 발전방향’ 등 적극적인 외환자유화 추진으로 연평균 34.6%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2006년부터 자본거래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되고, 해외투자 규제를 적극 완화하며, ‘외환시장 중장기 발전방향’의 일정을 앞당겨 2009년에 완료하기로 하는 등 외환자유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세계 외환거래액에서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외환거래 비중은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그 수준은 국제적인 외환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영국, 미국, 일본 등에 비하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다. 향후 국제금융 활성화와 금융개방 등 금융산업 선진화의 진전에 따라 외환거래 증가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환거래량 추이(일평균)



자료) 한국은행

주) 괄호 안은 기간별 연평균 증가율임

3. 우리 경제는 지속가능한가?

연구개발비 · 특허출원 최고치 기록

차세대 성장 동력, 미국과 기술격차 2.6년에서 1.6년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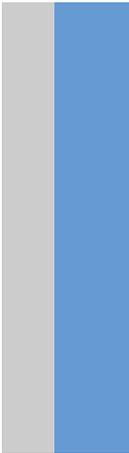
혁신형 중소기업, 3년 만에 2배 증가

지방에도 기술력 갖춘 중소기업 대폭 증가

지역전략산업으로 지방이 첨단산업의 중심이 되다

문화수출 강국을 위하여

농어업도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다



연구개발비 · 특허출원 최고치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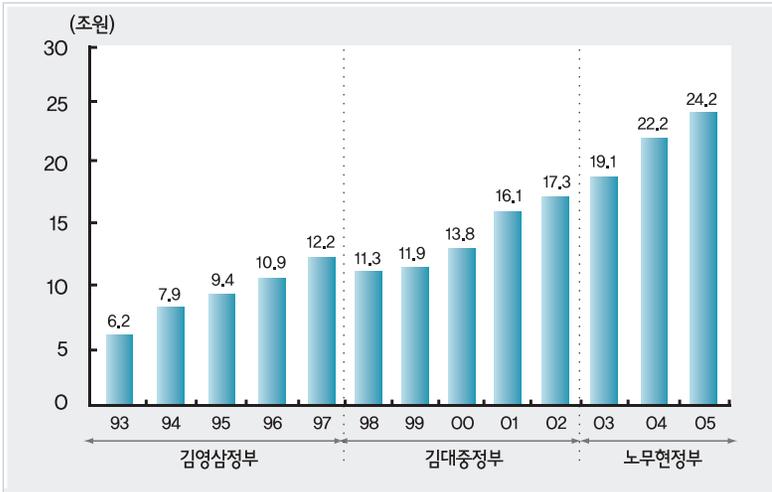
국내 총 연구개발비는 2005년 현재 약 24조 원에 달하여 노무현 정부에 들어서만 연평균 11.7%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연구개발비를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특허출원 건수는 연평균 11.3%의 증가율을 보였고 2006년에만 약 16만3000건을 기록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인구 1000명당 특허출원 건수를 보더라도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연평균 3.03건에 달해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특허출원의 증가는 국내기업들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연구개발에 지속적인 투자를 한 결과다.

세계 주요국의 특허출원은 R&D 투자 증가, 지식 재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 및 국제 특허분쟁 증가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05년 기준으로 세계 4위를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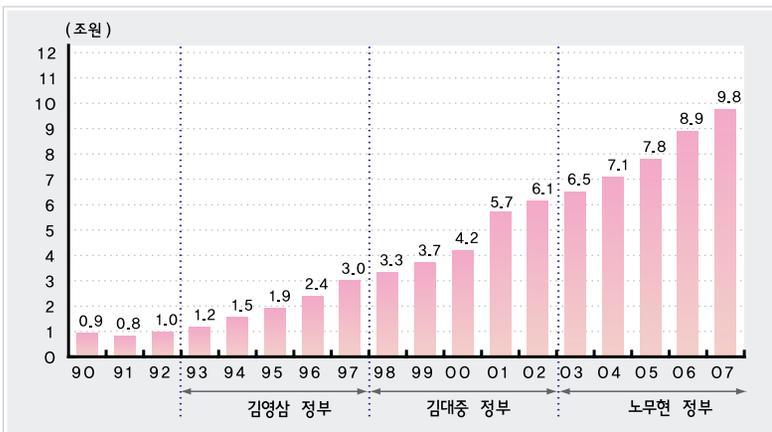
노무현 정부는 R&D 예산 편성의 전문성을 높이고 국가적 우선순위에 의한 전략적 투자의 강화를 위해 2004년 10월에 과학기술부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시키고, 과학기술혁신본부 신설 등을 추진해 왔다. 연구개발비에 의해 창출된 기술의 사업화를 위해 대덕을 연구개발특구로 지정(2005년 1월)해 중점 지원하고 있으며, 전국에 7개의 혁신 클러스터 추진단을 설치하여 전국적으로 기술의 사업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총연구개발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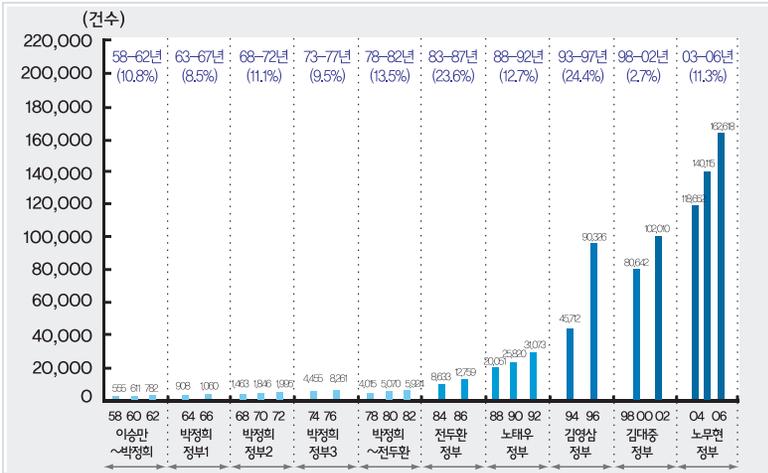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부
 주) 총연구개발비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합계임

공공부문의 R&D 예산 추이



자료) 기획예산처

특허출원 건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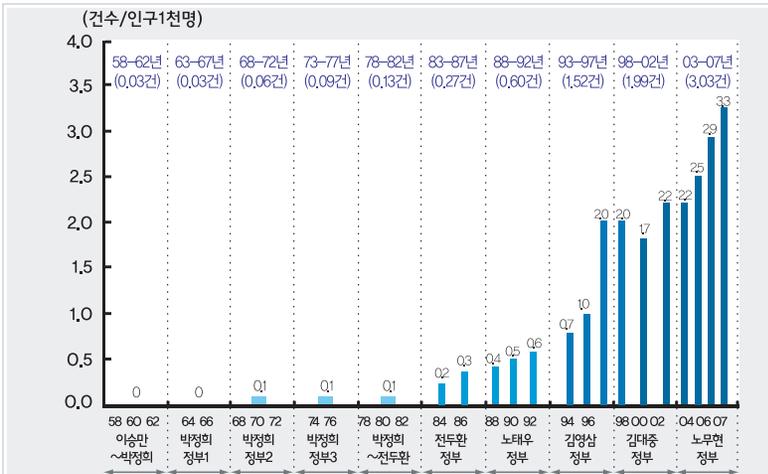


자료) 특허청

주) 1. 괄호 안은 기간별 연평균 증가율.

2. 총연구개발비 10억원당 특허 출원건수는 2002년 6.14, 2003년 6.21, 2004년 6.31, 2005년 6.65

인구 1천 명당 특허출원 건수 추이



자료) 특허청, 통계청

차세대 성장 동력, 미국과 기술격차 2.6년에서 1.6년으로

지난 2003년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으로서 10대 분야를 발굴·선정하고 집중 육성한 결과, 10대 산업 분야의 경쟁력이 진일보하고,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도 상당히 줄어들었다.

2005년 하반기부터 이동통신·방송기술인 와이브로, DMB, 기존 반도체의 속도 및 대용량화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차세대 반도체 기술, 하이브리드카, 지능형 로봇 휴보 등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 IT 분야는 IT기술 선진국인 미국과의 기술격차가 2003년 2.6년에서 2006년 현재 1.6년으로 단축되었고, 차세대 이동통신, 디지털 TV방송의 경우에도 1년 이내로 단축되었으며, 기술수준도 90%를 상회하고 있다.

차세대 성장동력 분야별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및 기술수준

구분	2005	2006
지능형 로봇	4.0년 (65%)	2.2년 (82%)
미래형 자동차	5.0년 (65%)	4.0년 (75%)
차세대 전자	6.0년 (50%)	3.0년 (70%)
디스플레이	1.5년 (90%)	1.0년 (95%)
차세대 반도체	4.0년 (60%)	1.6년 (84.1%)
디지털 TV/방송	1.5년 (85%)	0.7년 (94.2%)
차세대 이동통신	5.0년 (80%)	0.9년 (90.4%)
지능형 홈네트워크	2.0년 (80%)	1.0년 (90.0%)
디지털 콘텐츠/SW솔루션	3.0년 (77.5%)	2.2년 (80.1%)
바이오 신약/장기	5.0년 (60%)	4.0년 (70%)

자료) IT신성장동력 기술수준 조사 (2006), 자동차, 전자, 디스플레이, 바이오는 사업단 추정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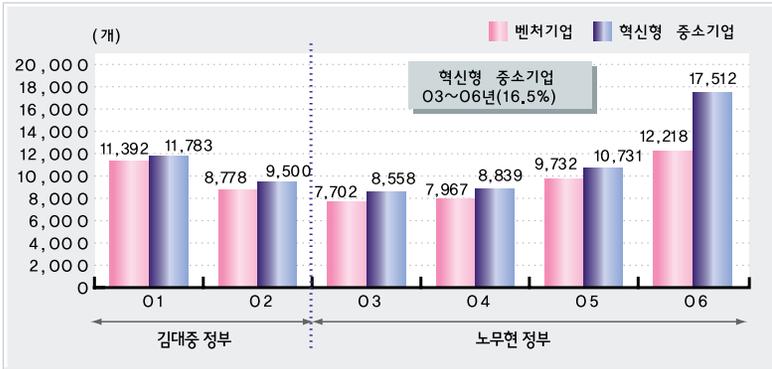
혁신형 중소기업, 3년 만에 2배 증가

혁신형 중소기업(Innovative SME)은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기존 제품·공정·마케팅·조직혁신 등 기업 활동과정에서 서비스 개선과 신제품 생산·개발 등의 혁신활동을 통해 고용과 부가가치 창출을 주도하는 기업을 말한다. 전통적 산업을 대체·보완해 미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어갈 동력인 셈이다.

국내 혁신형 중소기업은 IT버블 붕괴에 따른 벤처기업의 감소로 인해 노무현 정부 출범 초기인 2003년에 8500여 개까지 줄어들었으나, 2006년 말 현재 1만7500여 개에 달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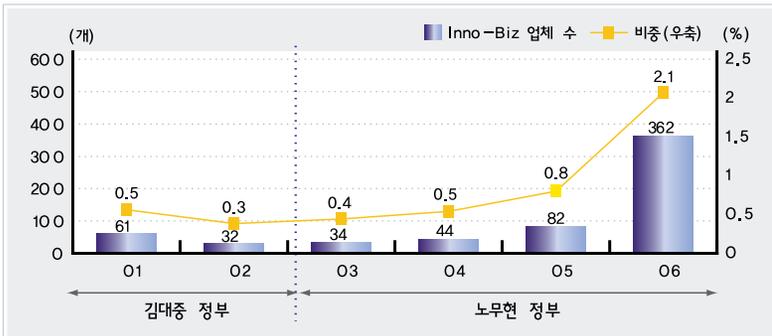
혁신형 중소기업 가운데서도 연간 매출액 200억 원 이상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수는 노무현 정부 출범 당시 34개사(비중 0.4%)에 불과했으나, 2006년 현재 362개사로 늘어나면서 그 비중 역시 2.1%까지 높아졌다.

혁신형 중소기업 수 추이



자료) 중소기업청
 주) 괄호 안은 기간별 연평균 증가율임

연간 매출액 200억 원 이상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업체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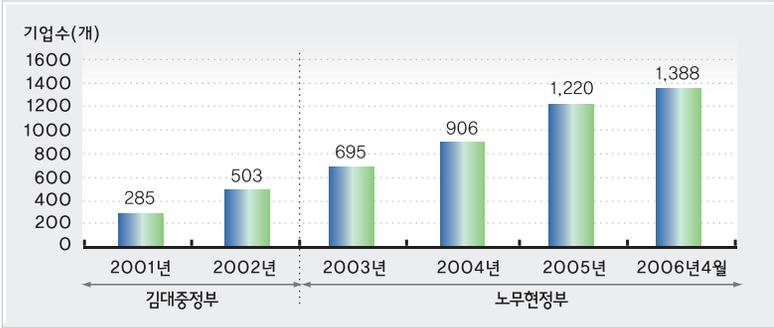


자료) 중소기업청
 주) 비중은 혁신형 중소기업 대비 기준임

지방에도 기술력 갖춘 중소기업 대폭 증가

2003년을 기점으로 지방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의 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역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혁신을 주도할 역량 있는 선도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선결요건이다. 지방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증가는 지방이 살아날 수 있다는 희망의 징조다.

지방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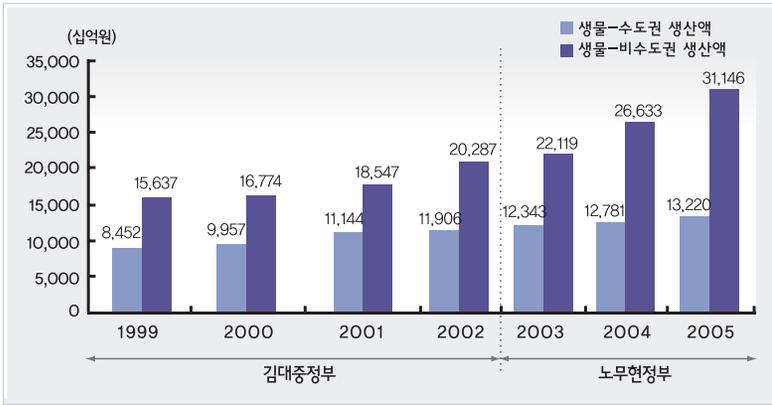
자료) 중소기업청

지역전략산업으로 지방이 첨단산업의 중심이 되다

노무현 정부가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실시한 32개 지역 전략산업 중 21개의 지역 전략산업이 지역 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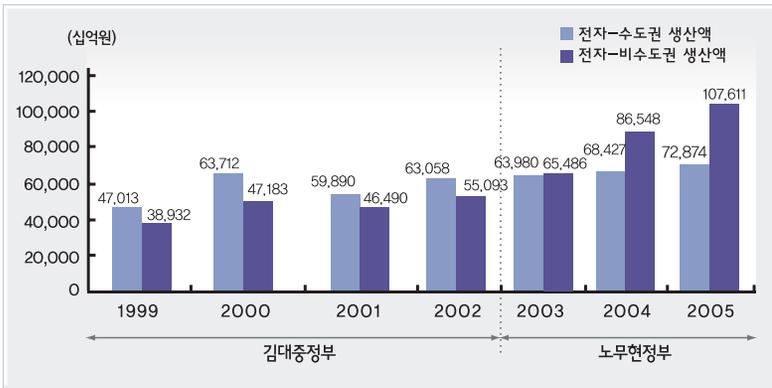
지역 전략산업 중 대구의 모바일·나노, 광주·광주광역시·충남의 전자정보, 전남 생물, 경남 기계 등은 지역경제의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 특히 2003년 이후 생물, 전자, 기계, 부품소재 등 산업 전반에 걸쳐 지방이 수도권보다 높은 성장세를 나타내기도 했다. 생물 산업의 비수도권 비중은 2002년 62.0%에서 2005년 67.6%로 증가했으며, 전자산업의 비수도권 비중도 2002년 46.6%에서 2005년에는 55.8%로 높아졌다.

생물산업의 지역별 생산액 추이



자료) 산자부

전자산업의 지역별 생산 추이



문화수출 강국을 위하여

문화산업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매출액은 2002년 약 30조 원에서 2005년 약 54조 원으로 증가하면서 전체 GDP의 6.7%를 점유했다. 출판 분야가 전체 문화산업 매출 규모의 35.9%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게임 16.1%, 방송 16%, 광고 15.6%, 영화 6.1%, 캐릭터 3.8% 순이다. 2005년 한국 문화산업 규모는 세계 문화산업의 2.2%를 차지하고 있다. 2001~2005년 동안의 연평균 문화산업 성장률은 세계 문화산업 성장률과 비슷한 수준이다.

문화산업 매출액



자료) 문화관광부

세계 문화산업 규모

(단위: 백만달러, %)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01~'05 연평균 성장률
세계 문화산업 규모 (성장률)	1,068,862 (2.0)	1,104,493 (4.3)	1,160,638 (5.1)	1,255,109 (8.1)	1,328,786 (5.9)	5.8%
세계 문화산업 규모 (성장률)	23,777 (4.1)	25,560 (7.5)	27,270 (6.7)	29,022 (6.4)	29,571 (1.9)	5.6%

자료 : Price Waterhouse Coopers(PWC,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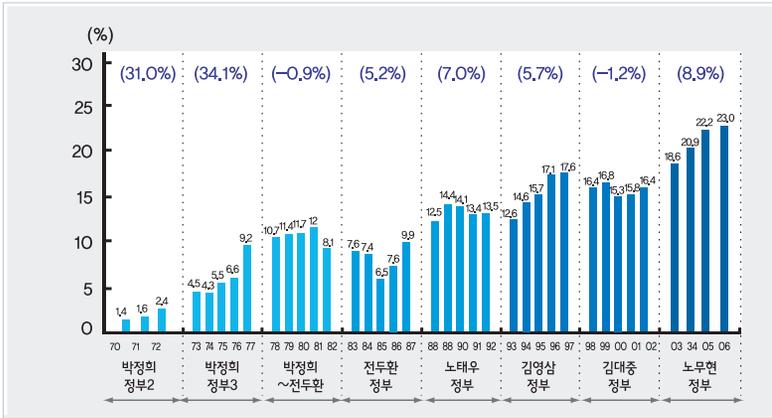
주 : 문화산업통계에 의한 규모(약 54조원)와 PWC에 의한 규모(약 30조원)가 상이한 것은 문화산업범위의 차이에 의한 것임.

농어업도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다

수출농업은 개방화 시대 농업의 활로를 개척하는 성장 동력이다. 수출 농업 육성을 위해 수출단지 지원, 수출업체 해외 마케팅 지원, 수출 물류비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농림축산물 수출액은 2002년 16억4000달러에서 2006년 23억 달러로 40%가 증가했다. 신활력사업, 농업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해 농업부문의 기술·경영혁신과 경쟁력 강화가 꾸준히 진행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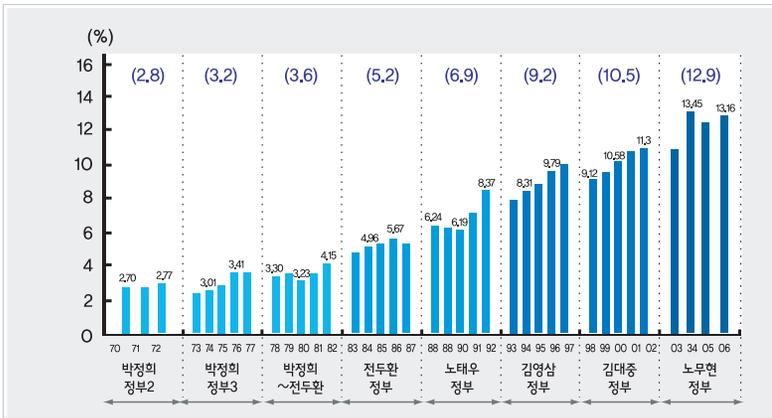
2003~2006년간 농림업 취업자 1인당 농림업 부가가치는 1290만 원으로 김대중 정부 5년 평균 1050만 원에 비해 23%가 증가했다. 농업 체질 강화, 농업 생산기반 조성을 통한 농업 생산성 증대를 추진해 온 결과다. 2007년에도 3조6995억 원과 1조9656억 원이 농업 체질 강화와 농업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각각 지원될 예정이다.

농림축산물 수출액



자료) 농림부(관세청 무역통계자료)
 주) 괄호 안은 수출액의 기간 내 평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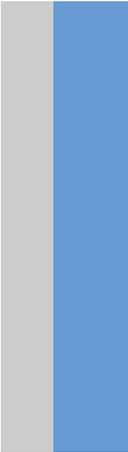
농림업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실질)



자료) 농림부, 한국은행
 주) 1. 괄호 안은 농림업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의 기간 내 평균임, 2. 2006년 실질부가가치는 추정치임

4. 골고루 잘사는 나라

지방을 위한 특별 주머니, 균특회계
정부 R&D예산 지방 비중 40% 육박
비수도권 생산 비중 수도권 앞질러
지방의 수출 비중 70% 육박
수도권 인구 문제에 대한 한줄기 희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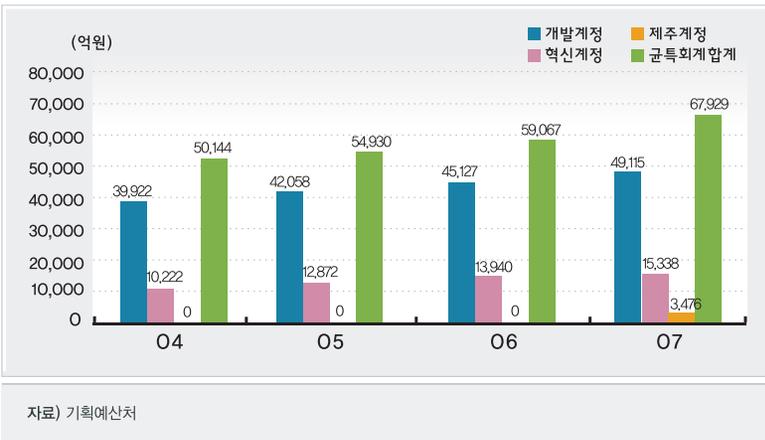


지방을 위한 특별 주머니, 균특회계

노무현 정부는 지방의 균형발전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05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신설하였으며, 지원 규모는 2005년 약 5조 5000억 원, 2006년 5조9000억 원, 2007년 약 6조8000억 원으로 증가하고 있다.

균특회계에는 개발계정과 혁신계정 외에 2007년부터 제주 특별자치도 계정이 신설되어 3476억 원이 별도로 지원되고 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규모



정부 R&D예산 지방 비중 40% 육박

정부의 R&D예산 중 지방이 차지하는 비중이 노무현 정부 출범 초기인 2003년 27%에서 점차 확대되어 2007년에는 4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의 R&D예산의 확대는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의 연구개발 인프라 확충과 혁신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R&D 예산의 지방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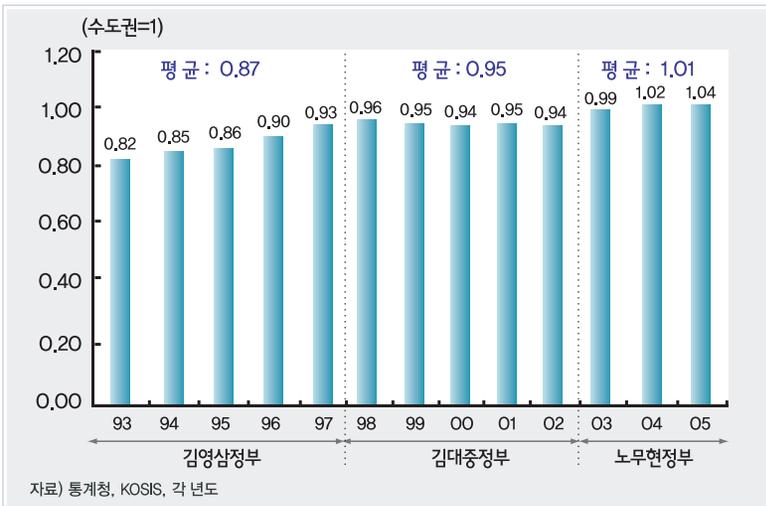


자료) 과기부

비수도권 생산 비중 수도권 앞질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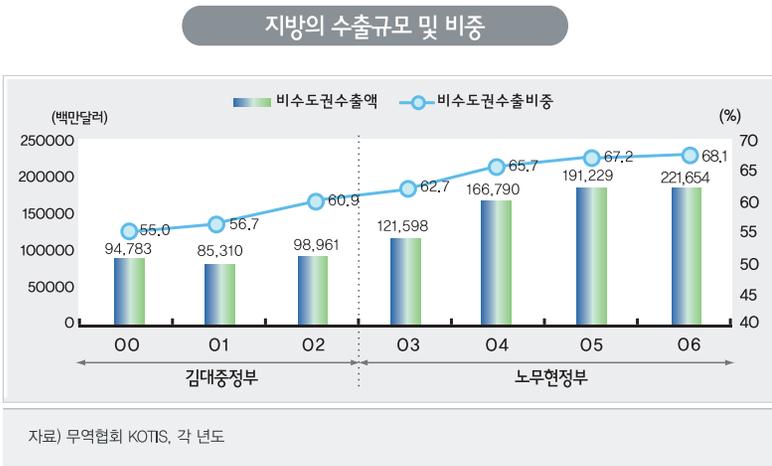
수도권 대비 비수도권(지방)의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 비율이 2002년 0.94%에서 2005년 1.01%로 크게 높아져, 노무현 정부에 들어와 비수도권 비중이 수도권을 상회하기 시작했다.

수도권 대비 비수도권의 1인당 GRDP 비중



지방의 수출비중 70% 육박

전국 수출 대비 비수도권(지방)의 비중이 2000년 55%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5년에는 67.2%, 2006년에는 68.1%로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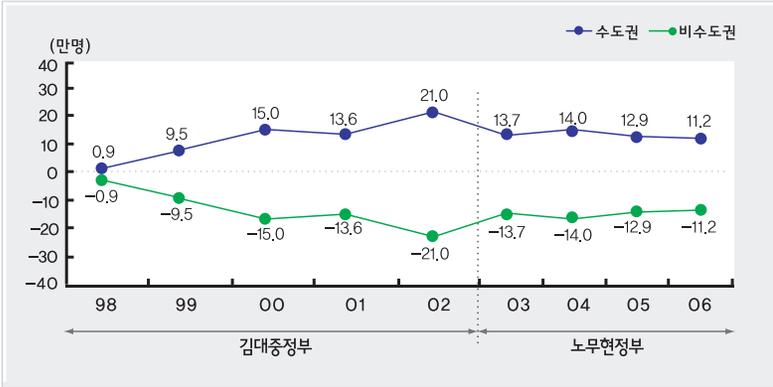


수도권 인구 문제에 대한 한줄기 희망

수도권의 절대적 인구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전국대비 수도권 비중이 2002년 47.2%에서 2006년에는 48.7%로 늘어났다. 현상적으로는 늘었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변화되고 있는 상황을 발견할 수 있다.

바로 수도권의 인구 순유입(유입 - 유출인구)에 관한 지표이다. 수도권 인구 순유입은 2003년 들어 줄어들기 시작했다. 2002년 21만 명에서 2006년 11만2000명으로 감소하는 등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입 완화추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수도권 인구 유입의 둔화에는 소득격차 요인 외에도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지역산업육성,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등 지방의 인구 유입촉진 및 유출방지 노력의 강화와 지방 인구구조의 노령화에 따른 수도권으로 이동요인 감소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인구 순유입



자료) 통계청 KOSIS, 각 년도
 주) 2006년은 11월까지의 통계임

3장

마음은 굴뚝같지만
아직도 부족한 민생과 복지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민생의 어려움은 1997년 외환 위기로 심화되었다. 외환 위기는 한국 사회에 불어 닥친 태풍이었다. 1997년 1만7000개, 1998년 2만3000개의 기업이 부도났고, 98년에는 실업자가 무려 150만 명까지 늘었다.

또 하나의 시련이 있었다. 2002년의 신용 위기가 그것이다. 1997년 외환 위기가 기업부도 사태라고 한다면, 2002년 신용 위기는 가계부도 사태였다. 어느 정도 회복되던 민생이 다시 한 번 무너졌다. 가계가 무너지니 소비가 줄어들고 소비가 줄어드니 투자가 안 되고, 투자가 안 되니 다시 민생이 어려워지는 악순환에 빠진 것이다.

이 같은 문제는 단순히 성장정책만으로 풀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다. 대형 유통업이 발전할수록 재래시장이나 동네가게는 어려워지고 영세자영업자들의 민생문제가 발생한다. 경제가 발전할수록 인건비가 올라가고 인건비가 올라가면 기업들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다시 일자리를 줄이고 비정규직을 늘린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실업자와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영세자영업도 늘어나게 된다.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양극화와 민생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더불어 사는 사회를 지향했다. 경쟁력 있는 복지국가를 만들자는 것이다. 이를 위한 핵심전략이 사회투자 전략이다. 사회투자는 사람에 대한 투자다. 이것이 뒷받침돼야 지속적인 경제 발전과 양극화 해소가 가능하고 사회통합도 이룰 수 있다.

복지예산을 연간 20%씩 늘려 기초생활 보장 지출을 늘리고 보육예산을 다섯 배 증가시켰다. 양극화 극복의 핵심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사회투자는 중요하다. 고용 없는 성장, 고학력 실업과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교차하는 일자리의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서비스 일자리는 물론 공공서비스, 사회서비스를 늘려야 한다. 보육, 간병, 식품 안전, 치안, 재해예방, 환경관리 등 국민복지 향상에 직결되는 사회서비

스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정부는 지난 4년간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예산을 네 배 가까이 늘려왔다. 올해에도 1조3000억 원을 투입해 일자리 20만 개를 만들어낼 계획이다.

그러나 한국의 사회투자는 아직 갈 길이 멀다. GDP 대비 공공사회 지출이 김영삼 정부 3.2%, 김대중 정부 5.6%에서 2005년에는 8.6%로 늘어났지만, 선진국과 비교하면 아직 태부족이다. 북유럽의 1/3, 미국, 일본의 1/2을 넘지 못하는 OECD 최하위 수준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이 '비전 2030'이다. 복지투자를 중심으로 하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이다. 사람에 대한 투자, 함께 가는 사회를 통해 우리 사회의 장기적인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이다.

1. 실업 터널은 짧게, 일자리는 더 가깝게

낮아지는 실업률, 그래도 외환 위기 이전만 못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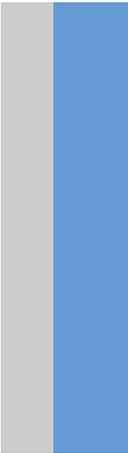
'안정적 유지' 로는 미흡한 청년 실업률

자영업주, 절대 수 늘었으나 비중은 하향 추세

고용률 지속 상승, 2030년까지 72% 목표

복지서비스도 늘고, 일자리도 늘고

고용안정, 법 제도로 보다 확실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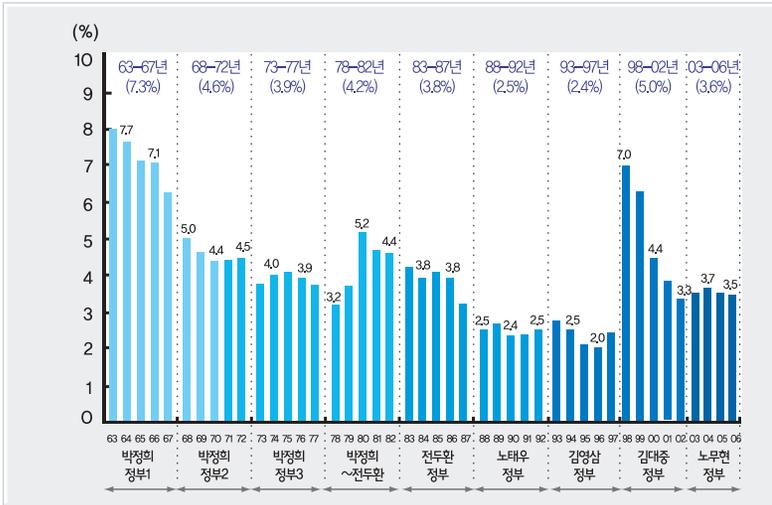
낮아지는 실업률, 그래도 외환 위기 이전만 못해

실업률은 외환 위기 직후 급등세를 보이다가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는 연간 평균 3%대 중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실업자 수도 외환 위기 직후인 1998년에 비해 절반 수준까지 줄었다가 노무현 정부 기간에는 평균 80만 명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실업률과 실업자 수가 모두 아직까지는 외환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낮아지고 있다.

실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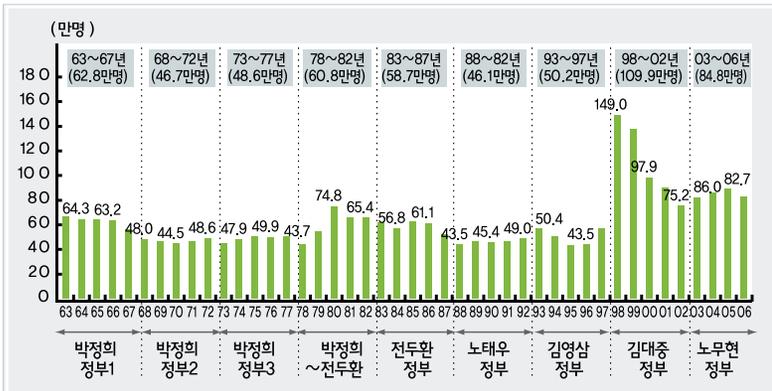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주) 1. 연간수치는 월평균, 괄호 안은 기간평균

2. 1999년 이전은 구직기간 1주 기준, 2000년 이후는 구직기간 4주 기준

실업자 수 추이



자료) 통계청

주) 1. 연간수치는 월평균, 괄호 안은 기간평균

2. 1999년 이전은 구직기간 1주 기준, 2000년 이후는 구직기간 4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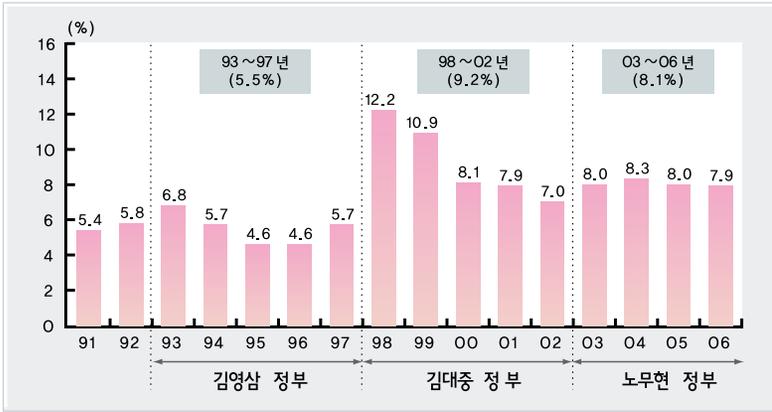
‘안정적 유지’ 로는 미흡한 청년 실업률

일반적인 실업률을 웃도는 청년 실업률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청년 실업률은 외환 위기 직후인 1998~1999년에 2년 연속 10%대를 기록한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다가 정체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아직까지도 외환 위기 이전의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을 보면 일본의 청년층 실업률이 경기 호조에 힘입어 8%대까지 떨어진 것을 제외하면 미국이나 독일의 청년층 실업률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무현 정부는 지난 2004년 3월 청년실업해소특별법(2008년 12월 31일까지)을 제정하여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확대하고 국내외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청년실업 해소 및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청년실업률 추이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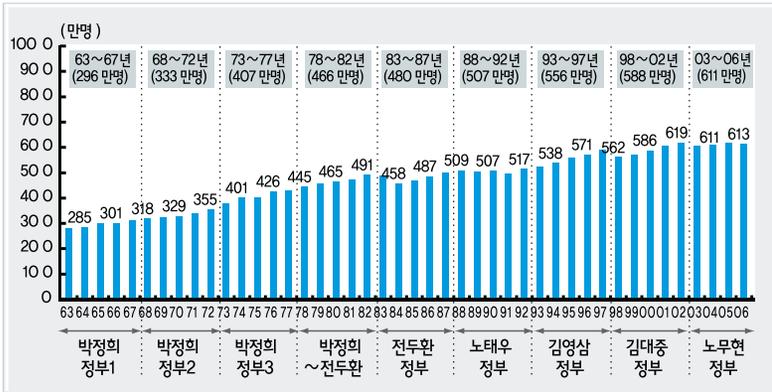
- 주) 1. 연간수치는 월평균, 괄호 안은 기간평균
- 2. 1999년 이전은 구직기간 1주 기준, 2000년 이후는 구직기간 4주 기준
- 3. 청년실업률은 15~29세 기준

자영업주, 절대 수 늘었으나 비중은 하향 추세

자영업주 비중은 2002년 27.9%에서 2006년 26.5%로 하락하는 추세이며, 이는 경제 구조의 고도화 과정에서 비효율적인 부문이 조정되어 가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자영업주의 절대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역대 정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2006년 말 현재 613만 명 규모).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택시 대당 인구수는 서울 143명, 동경 230명, 런던 345명, 뉴욕 657명이다. 음식점 업소당 인구수(2004년)는 한국 79명, 일본 140명, 미국 416명(자료 : 정책기획위원회, 2007년 1월, <참여 정부 정책의 성과와 과제>)으로 우리나라 자영업자가 현저히 많음을 알 수 있다.

자영업주 수 추이



자료) 통계청

주) 연간수치는 월평균, 괄호 안은 기간평균

고용률 지속 상승, 2030년까지 72%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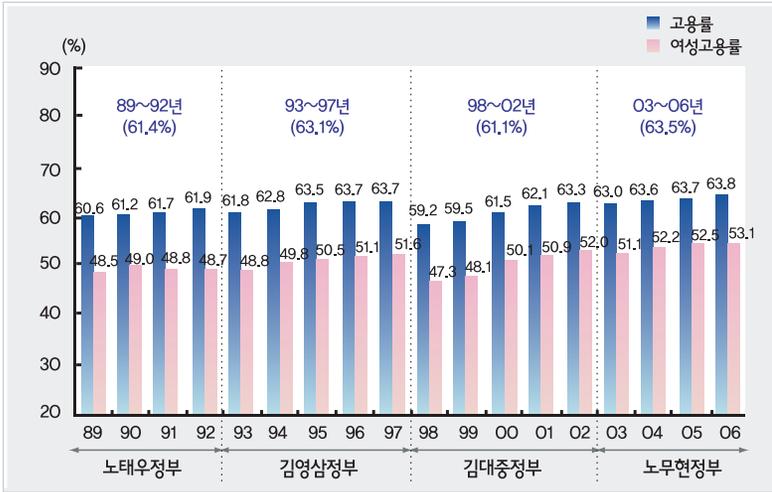
실업률은 다소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는 반면 고용률은 노무현 정부 기간 중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특히 여성 고용률이 꾸준히 늘었다.

전체적으로 김대중 정부 기간에 비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외환 위기 이전인 김영삼 정부 기간의 고용률 수준도 웃돌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저성장 기조 및 고용 없는 성장구조에 대응하여 '일자리 창출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등 고용률을 높이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함께하는 희망한국 비전 2030〉에 따르면, 2030년 고용률은 선진국 수준인 72%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2005년 현재 주요 국가 고용률 수준을 보면 미국 71.5%, 일본 69.3%, 독일 65.5%, 아일랜드 67.1%, 영국 72.6%이다.

고용률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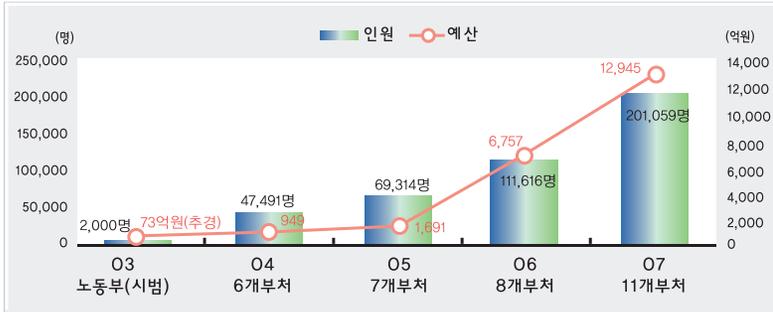
주) 연간 수치는 월평균, 괄호안은 기간평균

복지서비스도 늘고, 일자리도 늘고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은 일석이조의 효과를 내는 방안이다. 일자리와 복지서비스 두 가지를 얻을 수 있다. 고령화, 소득수준 향상 등에 따라 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고 있지만 공급은 아직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노무현 정부는 사회서비스 공급 확대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03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2007년에는 20만 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추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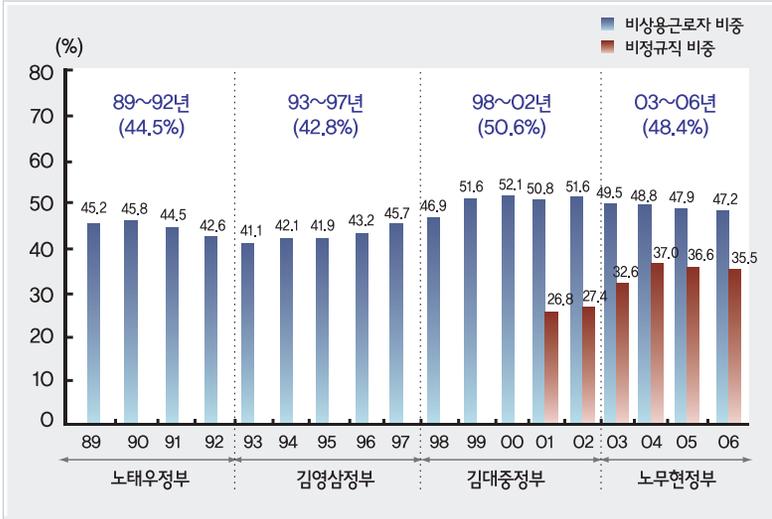
고용안정, 법 제도로 보다 확실하게

비상용근로자 비중(임금근로자 중 임시 및 일용근로자 비중)은 노무현 정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로 고용여건이 점차 안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2004년에 37%까지 증가했다가 그 이후 계속 하락하고 있으나 아직 과거의 최저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2006년 11월 비정규직 보호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07년 7월부터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처우가 대폭 시정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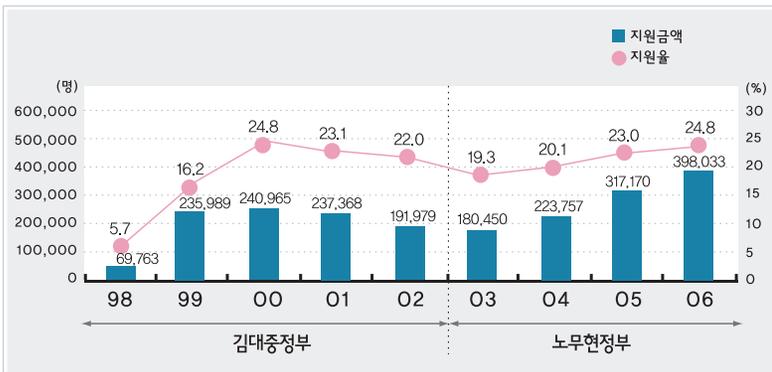
노무현 정부는 고용안정과 필요한 노동력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고용안정센터 활성화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했다. 고용안정센터의 구인·구직 활동을 통해 취업한 건수가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06년 현재 약 40만 명이 취업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취업률도 24.8%까지 증가했다.

비상용근로자 및 비정규직 비중 추이



자료) 노동부, 통계청

고용안정센터를 통한 취업 현황



자료) 노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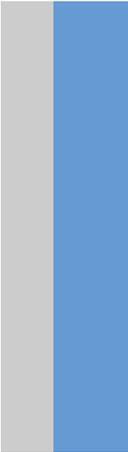
주) 취업률 = 취업 건수/구직자 수 × 100

2. 민생과 양극화, 더디지만 확실히

양극화를 완화하는 길

소득분배 개선 효과, 꾸준한 상승세

신용불량자 280만 명으로 100만 명 감소



양극화를 완화하는 길

소득 5분위 배율은 상위 20%(5분위)의 소득이 하위 20%(1분위) 소득의 몇 배가 되는지를 나타내는 통계로 양극화 정도를 가늠하는 잣대가 된다. 소득 5분위 배율은 외환 위기 직후 급상승했고, 이후 안정세를 찾은 다음, 2002년부터 다시 상승하는 추세다. 2000년대 초반의 개선은 외환 위기 극복 및 내수경기 호조에 따른 것이고, 2002년 이후의 부진은 경기 회복 지연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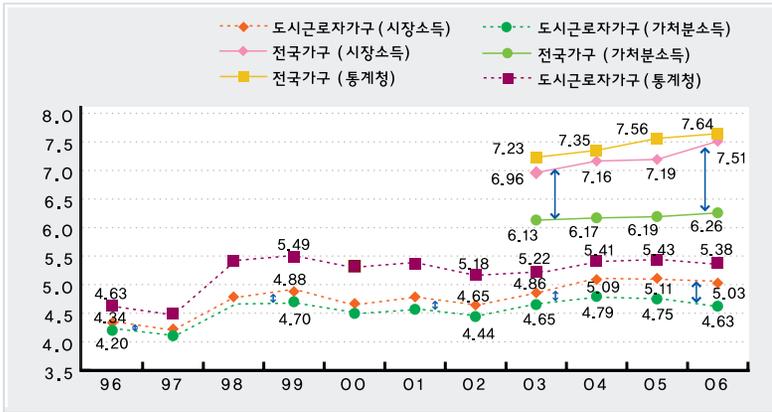
도시근로자가구의 경우 2005년 이후 미세한 완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시장소득 기준 5분위 배율과 가처분소득(세금 효과가 반영된 실소득) 기준 5분위 배율 간의 차이(↓로 표시)는 점차 커지고 있다. 이는 공적 이전 및 직접세·사회보장기여금 등 정부 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향상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또 다른 지표인 지니계수(도시근로자가구 기준) 역시 외환 위기 당시에 크게 높아졌으며, 전반적으로 외환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지니계수는 0(완전평등 상태)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완전불평등 상태)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시근로자가구의 경우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2005년 이후 미세한 완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와 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 간의 차이(↓로 표시)는 점차 커지고 있어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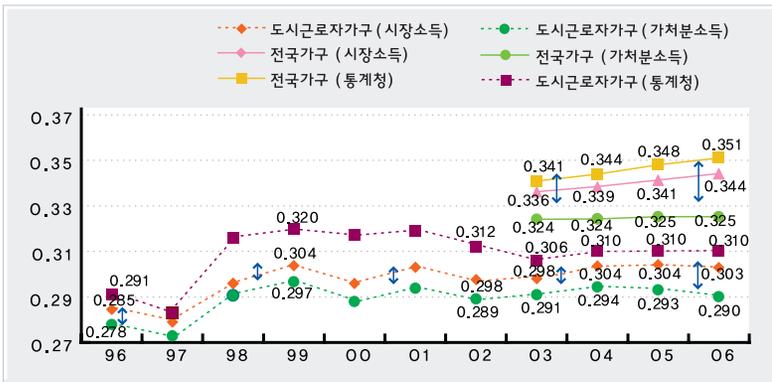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사회보장제도가 잘 갖춰진 국가에서 가처분소득 기준의 지니계수가 상대적으로 덜 악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의

소득5분위 배율 추이(도시근로자가구 · 가처분소득 기준)



자료) 통계청

지니계수 추이(도시근로자가구 · 총소득 기준)



자료) 통계청

양극화 시정 효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소득분배 개선 효과, 꾸준한 상승세

양극화 완화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지표가 소득분배 개선율이다. 도시근로자가구의 경우, 1996년 2.38%에서 2006년 4.20%로 높아졌다. 외환 위기 당시 감소했고, 그 이후 증가하여 2001년 3.04%까지 이르렀다. 2003년 2.38%로 다시 감소했다가 이후 꾸준히 향상되어 2006년 4.20%에 이르고 있다.

자영업자 등을 포함한 전국가구로 볼 경우 소득분배 개선 효과는 노무현 정부 출범시인 2003년 3.62%에서 2006년 5.52%로 향상되었다.

조세 · 이전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 (도시근로자가구)

구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조세 · 이전지출이 없는 경우(시장소득)(A)	0,2846	0,2790	0,2959	0,3038	0,2980	0,3030	0,2977	0,2980	0,3036	0,3041	0,3029
조세 · 이전지출이 있는 경우(가처분소득)(B)	0,2778	0,2729	0,2907	0,2967	0,2879	0,2938	0,2891	0,2909	0,2944	0,2931	0,2901
차이(B-A)	0,0068	0,0061	0,0052	0,0071	0,0081	0,0092	0,0086	0,0071	0,0091	0,0110	0,0127
소득분배개선율 $((B-A)/A) \times 100$	2,38	2,20	1,75	2,35	2,73	3,04	2,90	2,38	3,01	3,62	4,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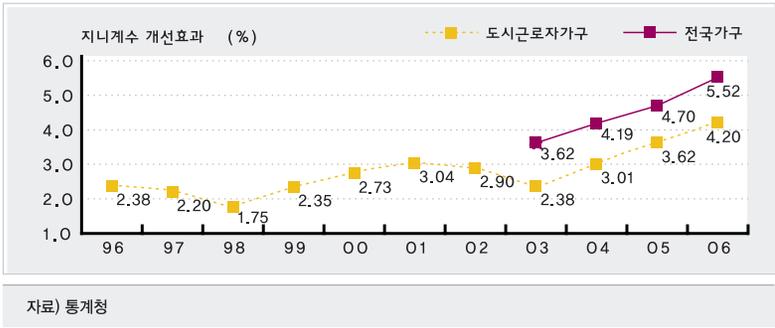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조세 · 이전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 (전국가구)

구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조세 · 이전지출이 없는 경우(시장소득)(A)								0,3363	0,3385	0,3414	0,3442
조세 · 이전지출이 있는 경우(가처분소득)(B)								0,3241	0,3243	0,3253	0,3252
차이(B-A)								0,0122	0,0142	0,0160	0,0190
소득분배개선율 (B-A)/A × 100								3,62	4,19	4,70	5,52

자료 :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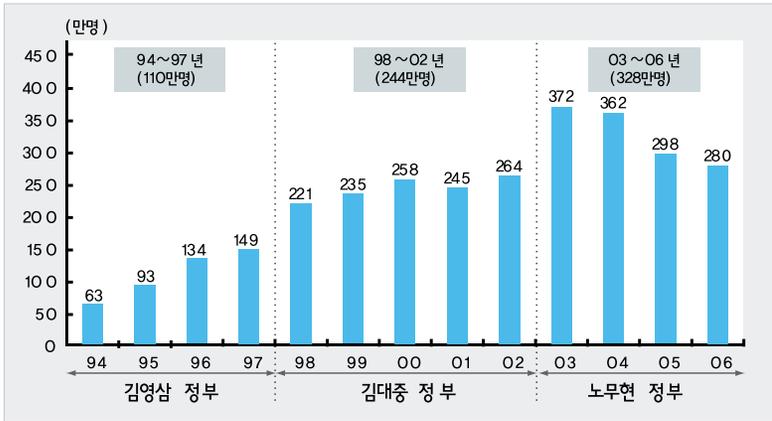
지니계수 개선 효과



신용불량자 280만 명으로 100만 명 감소

노무현 정부 출범과 함께 직면한 민생현안이 바로 개인 신용 불량자(금융채무 불이행자) 문제였다. 2002년 신용카드 남발의 여파로 신용불량자 수가 2003년에 급증하였고, 2004년 2월에는 383만 명까지 증가했다. 노무현 정부는 각종 제도정비를 통해 신용불량자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한 결과 그 수가 2006년 말 280만 명까지 줄어들었다. 개인워크아웃 제도, 배드뱅크제도, 개인채무자회생제도 등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 채무 불이행자들의 채무 상환 능력을 높이고 경제활동 복귀를 위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금융채무 불이행자 수 추이



자료) 자유기업원, 삼성경제연구소, 전국은행연합회

주 : 1) 연간수치는 연말기준, 괄호 안은 기간평균

2) 94~97년 자료는 자유기업원 「한국인의 씀씀이」에서 재인용,

98~00년 자료는 삼성경제연구소 「2002년 TREND 10」에서 재인용함

3) 2005년 4월 28일 이후 연체자 등록기준 변경(30만원초과 3개월 연체 및 30만원이하 연체 3건에서 50만원초과 3개월 연체 및 50만원이하 연체 2건)

3. 복지투자 큰 걸음을 내딛다

복지지출 비중 8% 진보, 간단한 게 아니다

사회보험, 민주화 이후 급속히 성장

기초생활보호 대상자 150만 명까지 확대

교사와 학생이 보다 가깝게

저소득층 무상교육비 지원 대상 13%로 확대

진학률과 교육의 질 동반 성장

일하는 여성, 수는 늘고 힘은 세지고

육아지원 예산 김대중 정부 때보다 4배 증가

100% 돌파한 주택보급률

주거복지, 더 많이 더 가깝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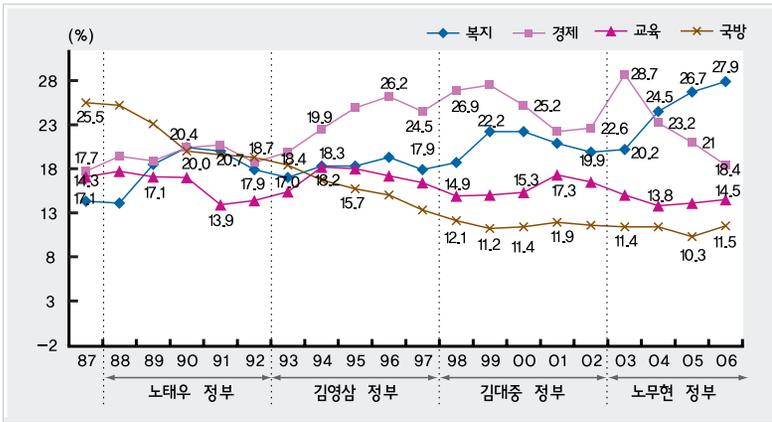
복지지출 비중 8% 진보, 간단한 게 아니다

사회복지 관련 예산(통합재정 기준)은 노무현 정부의 사회투자 전략의 비중을 알 수 있는 주요한 지표다. 사회복지 관련 예산은 노무현 정부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2년 19.9%에서 2006년 27.9%로 상승했다.

특히 주택부문과 사회보장성 연금 지출이 매년 49%씩 크게 증가했다. 국민주택기금 규모가 2002년 4000억 원에서 2006년 6조7000억 원으로 연평균 105% 증가했다. 2003년 이후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사업을 본격 추진(2003~2012년)했을 뿐 아니라 생애 첫 주택자금 대출 등 서민 주택자금 용자를 확대했다.

사회복지를 중점적으로 확충한 분야는 기초생활 보장, 사회서비스, 여성 보육서비스 등이다. 사회안전망 확충과 성장 잠재력 강화에 직결되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비 비중



자료) 기획예산처

복지증가율 내역(통합재정 기준)

구분	'97년	'02년	'06년	연평균 증가율(%)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사회보장연금지출	4.6	11.9	23.0	20.7	18.0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6.7	2.5	12.2	△17.9	49.0
기타 순수복지 지출	6.5	11.7	19.0	12.7	12.8
복지지출합계	17.8	26.1	54.2	8.0	2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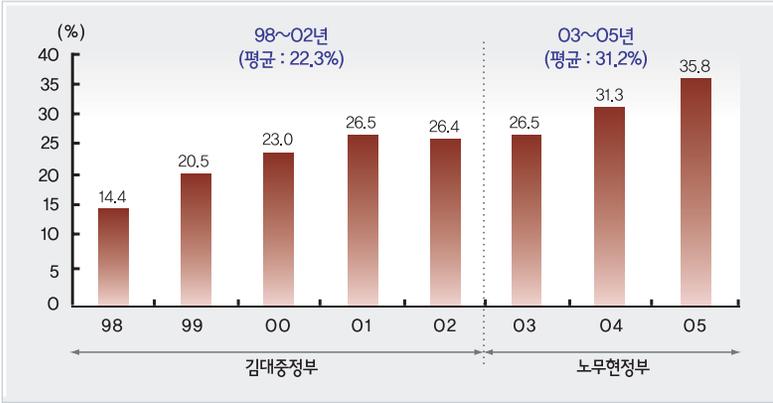
자료) 기획예산처

사회보험, 민주화 이후 급속히 성장

고용보험과 실업급여 수혜율은 사회안전망을 넓혀나가는 과정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고용보험 적용 사업체 수는 김대중 정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노무현 정부 기간에는 이러한 증가세가 더욱 커졌다. 전체 사업체 수 대비 고용보험 적용 사업체 수 비중은 2005년 현재 35.8%까지 늘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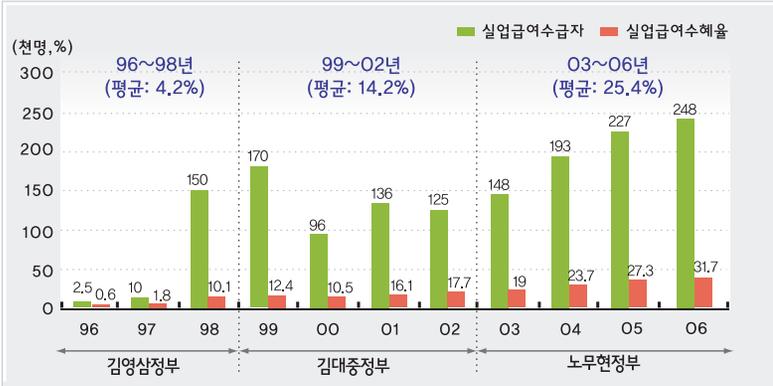
실업급여 수혜율도 매년 증가하여 실업자 3명 중 1명이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

고용보험 적용 사업체 수 비중



자료) 통계청 KOSIS, 각 년도

실업급여 수혜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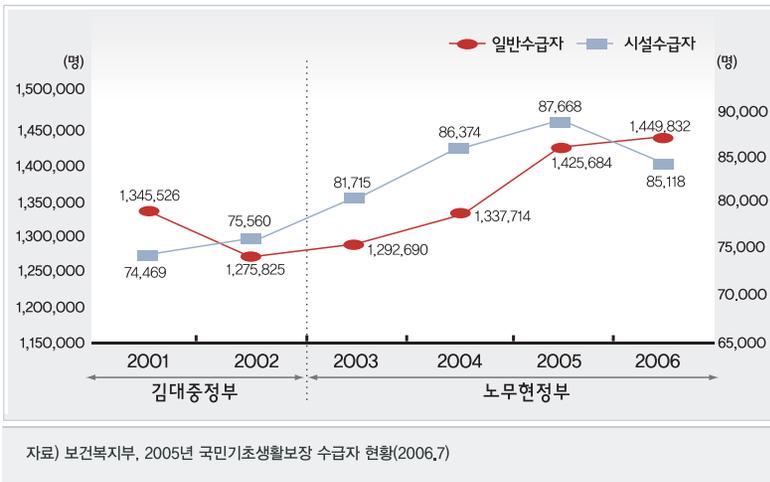


자료) 노동부

기초생활보호 대상자 150만 명까지 확대

국가로부터 최저생활을 보장받는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수는 2002년에 감소했다가 노무현 정부에 들어서 다시 증가해 2006년에는 153만 4950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이유는, 빈곤층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빈곤층의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등을 통해 보호 대상자를 확대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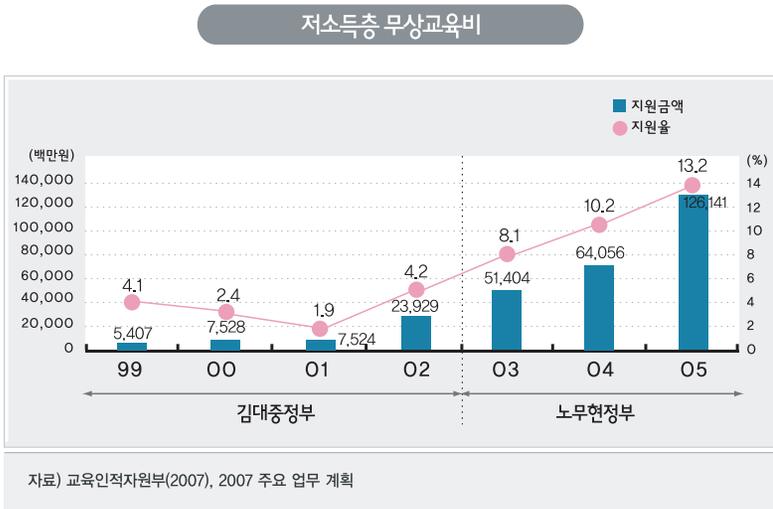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현황



저소득층 무상교육비 지원 대상 13%로 확대

2004년 저소득층 만 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확대 및 만 3, 4세아 차등교육비 지원을 시작으로 노무현 정부 기간 동안 저소득층에 대한 무상교육비 지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 4%대에 머물던 지원율은 2005년 13.2%로 상승했다.

2006년 현재 도시근로자 가운데 만 5세를 둔 경우는 평균소득 90% 이하의 가구에, 만 3, 4세의 경우에는 평균소득 70% 이하의 가구에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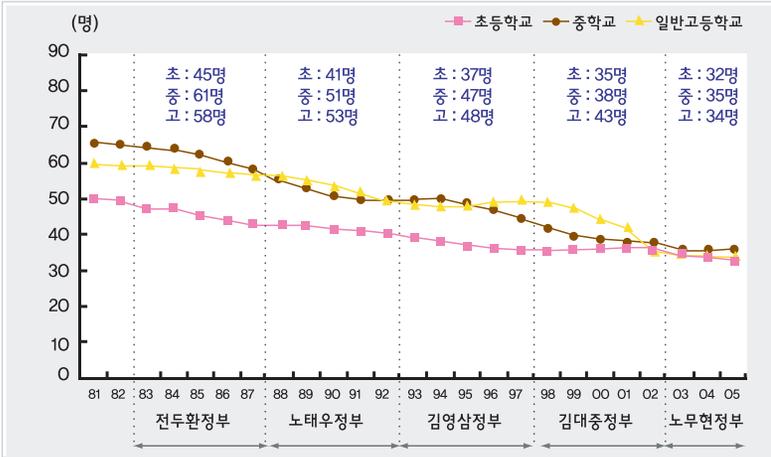


교사와 학생이 보다 가깝게

김영삼 정부 초기인 1993년 38.8명에 달하던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가 2006년에는 30.9명으로 20.4%가 줄었다. 중학교와 일반 고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도 김영삼 정부 이후 꾸준히 감소하여 노무현 정부 기간에는 평균 34~35명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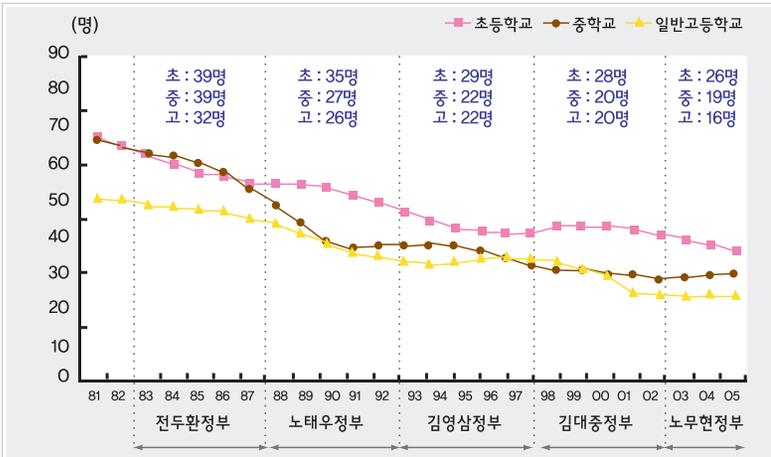
초·중·고등학교의 교사당 학생 수도 과거의 감소세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교사당 학생 수의 감소는 교사의 확충과 더불어 저출산에 따른 영향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

초·중·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자료) 통계청 KOSIS, 각년도
 주) 수치는 각 정부기간의 평균치임

초·중·고등학교 교사당 학생 수



자료) 통계청 KOSIS, 각년도
 주) 수치는 각 정부기간의 평균치임

진학률과 교육의 질 동반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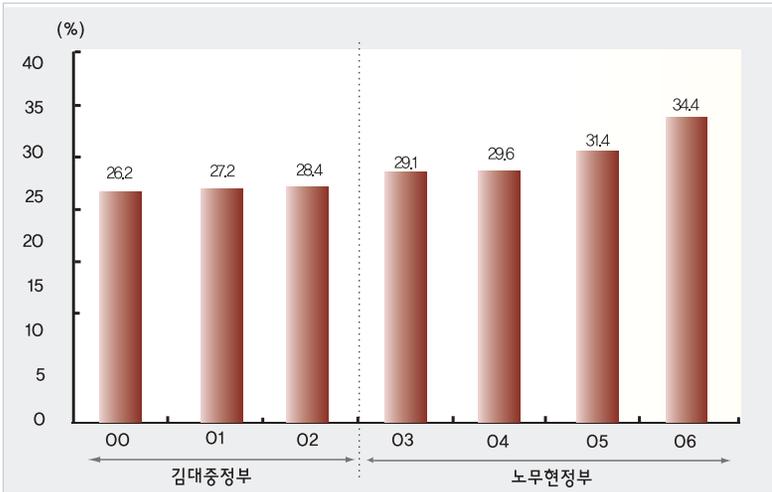
노무현 정부는 2004년에 유아교육법을 제정해 1999년부터 시작된 만 5세아 무상교육 지원의 범위를 크게 확대했다. 이에 따라 2002년 28.4%였던 유치원 취원율이 2006년에는 34.4%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유치원 취원율 증가와 함께 고등교육 진학률은 2006년 82%로 세계 최고 수준에 다다랐다.

교육경쟁력에 대한 평가도 긍정적이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2007년 국가경쟁력 평가에 따르면, 교육부문은 전년에 비해 13단계 상승한 29위를 기록했다.

IMD 교육경쟁력 순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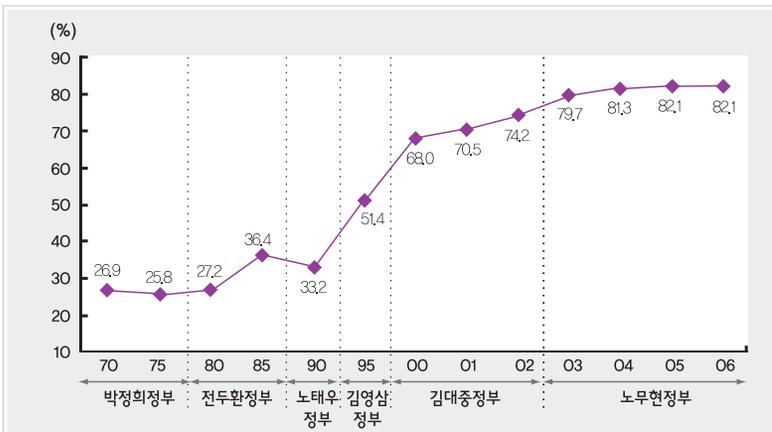
구분	'99	'00	'01	'02	'03	'04	'05	'06	'07
교육경쟁력 순위	37	34	32	31	18	44	40	42	29
(전체 국가수)	(47)	(47)	(49)	(49)	(30)	(60)	(60)	(61)	(55)

유치원 취원율



자료 : 교육통계분석자료집, 2006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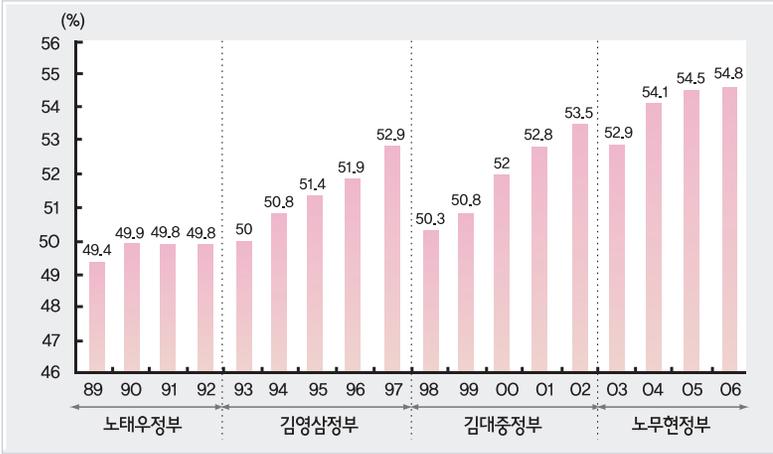
자료) 교육통계분석자료집, 2006

일하는 여성, 수는 늘고 힘은 세지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1993년 이후 50% 수준을 넘어섰으며, 노무현 정부에 들어와 역대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여성의 지위도 함께 높아졌다. 여성지위를 나타내는 국제지표인 여성권한척도(GEM: Gender Empowerment Measure)가 2004년 68위에서 2006년 53위로 향상됐다. 노무현 정부 직전인 2002년에는 조사대상국 64개국 중 61위로 최하위권이었다.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추이



자료) 노동부
 주 : 1989~1999년도는 1주 기준, 2000년~2006년도는 4주 기준

여성권한척도(GEM: Gender Empowerment Measure)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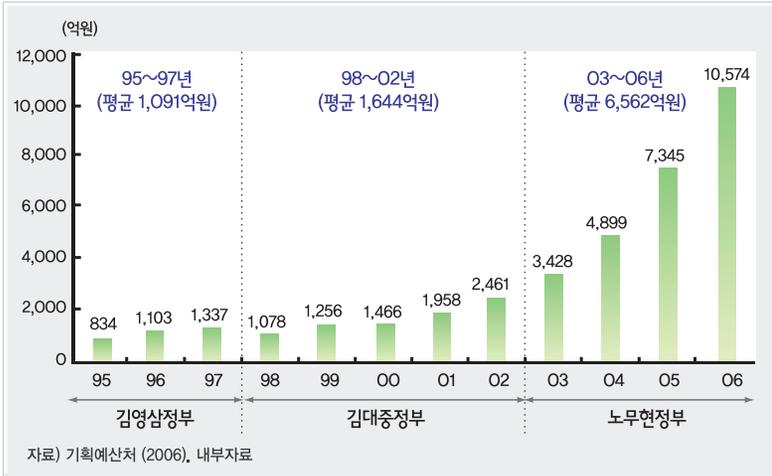
년도	순위/대상국가	점수	여성의원비율	여성 행정관리직	여성 전문기술직	남녀소득비
2002	61/64	0.378	5.9	5.0	34.0	0.45
2003	63/70	0.363	5.9	5.0	34.0	0.46
2004	68/78	0.377	5.9	5.0	34.0	0.46
2005	59/80	0.479	13.0	6.0	39.0	0.48
2006	53/75	0.502	13.4	7.0	38.0	0.46

* 자료 : UN, [Human Development Report], 각년도

육아지원 예산 김대중 정부 때보다 4배 증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육아지원 수준과 비례한다. 육아지원 예산은 2002년 김대중 정부의 2461억 원에 비해 2006년 1조574억 원으로 약 4배 증가했다. 특히 노무현 정부에서는 차등보육료 지원 대상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369만 원, 2007년)까지 확대했다. 2003년에는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제도를 도입했다.

육아 지원 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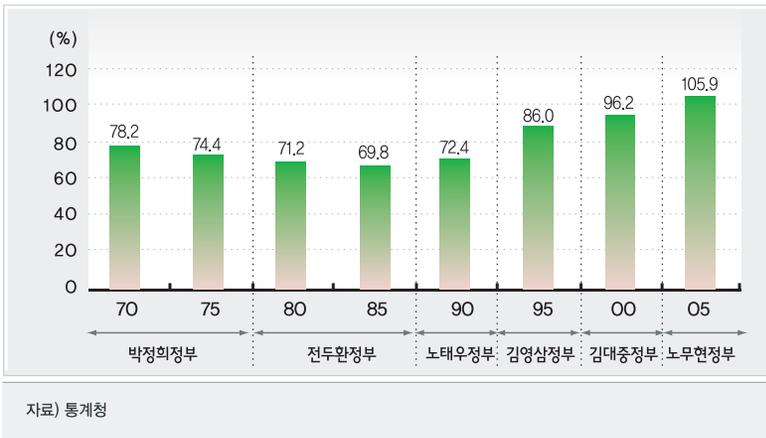


100% 돌파한 주택보급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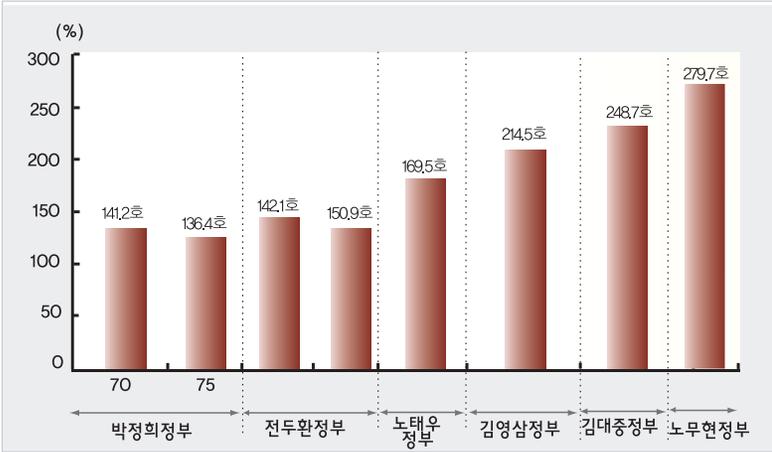
투기 근절과 안정적인 주택 공급은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두 바퀴다. 2000년까지 100%를 밑돌던 주택보급률은 2005년 105.9%를 기록했으며, 인구 1000명당 주택 수도 279.7호로 2000년 대비 12.5% 상승했다. 인구 1000명당 주택 수 추이를 보면 1985년 150.9호, 1995년 214.5호, 2005년 279.7호로 꾸준히 증가했다.

지역별 주택보급률은 2005년 현재 수도권 96.8%, 비수도권 114.2%로 2000년 대비 각각 10.7%, 9.4% 상승했다.

주택보급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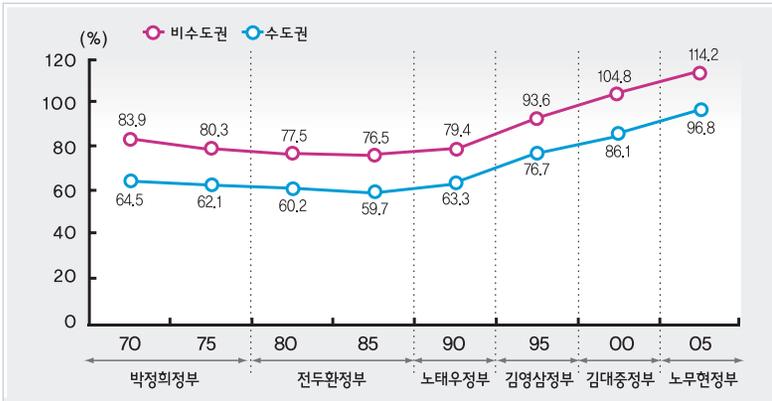


인구 1000명당 주택 수 추이



자료) 통계청

지역별 주택보급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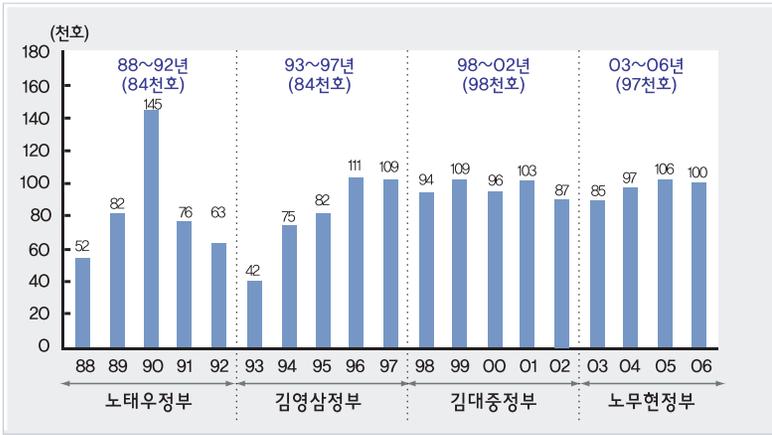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주거복지, 더 많이 더 가깝게

임대주택 공급은 주거복지 확충을 위한 주요 정책이다. 공공임대주택 건설은 2003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06년 10만 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 이후 임대주택 건설 비율은 20%를 넘는 수준이다. 노태우 정부 평균 8만4000호, 김영삼 정부 8만4000호, 김대중 정부 9만8000호, 노무현 정부 9만7000호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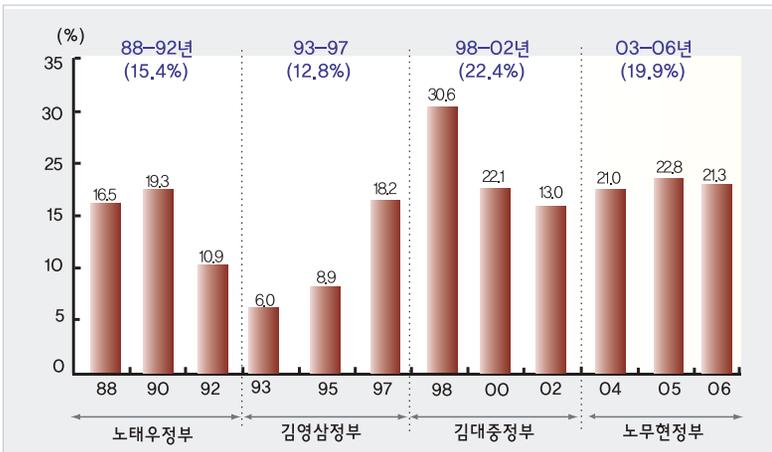
특히 김대중 정부 이후 복지와 분배정책의 확대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이 크게 늘어났고 노무현 정부는 이러한 정책기조를 계승해 국민주거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건설 추이



자료) 건설교통부

임대주택 건설 비율



자료) 건설교통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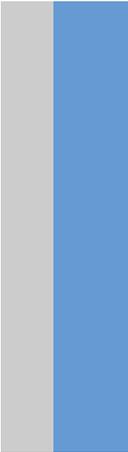
주) 임대주택 건설비율 = 임대주택/주택건설실적

4. 환경과 문화, 삶의 질이 높아진다

더욱 넓어진 자연환경보호지역

더 맑아져야 할 우리 물 우리 공기

생활과 더욱 가까워진 문화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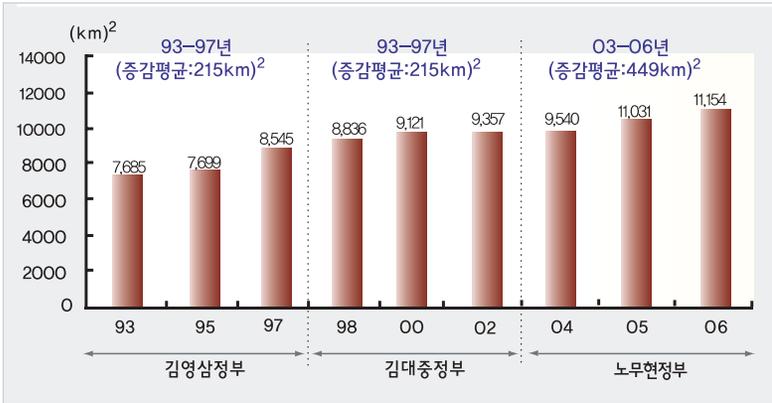


더욱 넓어진 자연환경보호지역

자연환경보호지역의 면적은 김영삼 정부(1997년) 시절 8545km²에서 김대중 정부(2002년)시절 9357km², 노무현 정부(2006년)에 들어서 1만 1154km²로 늘었다. 특히 노무현 정부에서는 2005년 9월 9일 백두대간보호지역을 지정함으로써 자연환경보호지역이 크게 증가했다.

전 국토 대비 자연환경보호지역 비율은 11.2%로 상승했으나 OECD 평균인 15%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다.

연도별 자연환경보호지역 면적 (누계)



자료) 환경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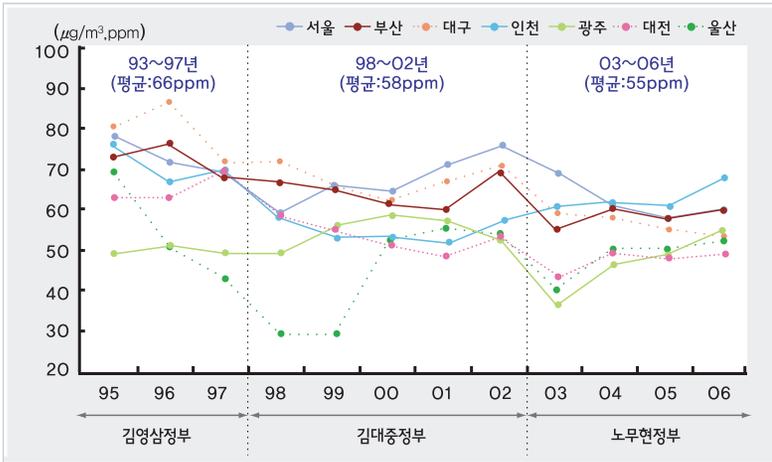
주) 자연환경보호지역 -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경관보전지역, 자연공원법상 자연공원, 백두대간보호법상 백두대간보호지역, 야생동·식물보호법상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습지보전법상 습지보호지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상 특정도서 면적

더 맑아져야 할 우리 물 우리 공기

서울, 부산, 대구, 울산, 대전 등 많은 대도시 지역에서 대기환경(미세먼지 농도) 수준은 평균 55ppm으로 노무현 정부 들어 크게 개선됐다. 그러나 미국 워싱턴 23ppm(2003년), 영국 런던 27ppm(2004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노무현 정부 들어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2003년), 수도권 대기환경 관리 기본계획 수립, 대기오염 총량제 실시 등 대기 개선 노력을 강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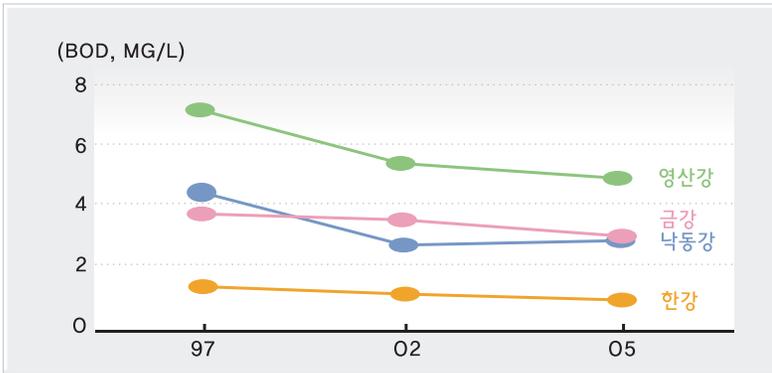
한강(팔당호)의 수질오염도(BOD)는 역대 정부보다 노무현 정부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수질이 개선되었다. 낙동강(물금), 금강(대청호), 영산강(주암호) 등은 김영삼 정부 때보다는 개선되었으나 김대중 정부 때보다는 다소 악화됐다.

주요 도시별 연간 미세먼지 농도



자료) 환경부

4대 강 수질오염도



생활과 더욱 가까워진 문화시설

노무현 정부 들어 박물관, 미술관, 공공도서관, 공연장 등 문화기반시설이 대폭 늘었다. 문화기반시설은 2002년 1101개소에서 2006년에는 1609개소로 노무현 정부 4년 동안 46.1% 증가했다.

1997년 문화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립박물관 건립을 지원(건립비의 30% 국고보조)한 이래 최근 4년간 등록박물관 수는 약 44% 증가했다. 그러나 박물관 1개소당 인구수는 한국 13만4000명으로 미국 6만 명, 프랑스 4만6000명, 일본 3만7000명, 독일 2만 명 등에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문화기반시설 수



- 주 : 1) 사립·대학박물관은 등록관만 대상이며 자료는 2006.12.31 기준임
 2) 미술관 : 각 시·도에서 관할 구역내에 등록된 미술관을 대상함
 3) 공공 도서관 : 자료수는 간행물(종)을 제외한 전체 자료를 말하며
 4) 공연장은 등록공연장을 의미하며 98~01년까지의 자료는 증가추세에 의한 추정치임

주요 국가별 도서관 현황

국명	기준 년도	인구수(명) (A)	도서관수 (개관)(B)	1인당 인구수 (명)(A/B)	장서수(책) (C)	1인당장서수 (책)(C/A)
한국	2006	48,991,779	564	86,865	49,242,282	1.01
미국	2004	287,871,383	9,211	31,253	871,889,000	3.00
영국	2004	59,700,464	4,624	12,911	110,111,000	1.85
일본	2004	126,688,000	2,825	44,845	333,962,000	2.64

자료 : 미국 NCLIS (U.S. National Commission on Libraries and Information Science)
 영국 도서관통계기구 (LISU: Library & Information Statistics Unit)
 일본도서관협회 "圖書館年鑑 2005"
 기타 : LibEcon(<http://www.libecon2000.org>)

4장

선진국이 되기 위해
민주주의는 계속되어야 한다

1987년 6월 항쟁이 있는 지 이제 20년 세월이 흘렀다. 6월 항쟁 이후 지금의 대한민국은 전세계가 부러워하는 ‘민주주의와 경제가 함께 성공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은 2006년 5월 “민주화와 경제 발전에 성공한 한국은 가장 훌륭한 개발도상국 모델”이라고 평가했다.

1987년 6월 항쟁으로 우리 국민들은 독재정권 종식이라는 민주주의의 1단계 과제를 달성했다. 그 후 선거를 통한 평화적 정권교체까지 이루어냈다.

그러나 여전히 과제는 남아 있었다. 민주화 이후에도 우리 사회에 잔존해 있는 특권과 반칙, 권위주의 문화, 부정부패의 유착구조 등 독재체제의 유산들을 청산하고 해체하는 일이었다. 독재정권이 만들어 놓은 지역 간 분열구조를 통합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1987년 6월 항쟁을 완수하는 민주주의의 2단계 과제다.

1987년의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는 위기에 빠졌다고 진단하는 이도 있다. 그러나 1987년 이후 20년 동안 민주주의의 2단계를 달성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 그렇게 해서 얻은 성과는 민주주의 발전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지난 20년, 특히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우리 민주주의는 뚜렷하게 발전했다.

제왕적 대통령 문화와 대통령의 국회 지배가 사라졌고, 권력기관들 역시 제자리를 찾아갔다. 특권과 반칙, 정경유착이 사라졌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가 만들어지고 있다. 돈 정치, 금권·관권 선거가 청산됐다.

행정 분야에서도 정부혁신을 통해 고객만족도 제고, 전자정부, 지방분권, 국가청렴도 지수 개선 등 상당 정도의 성과를 이뤄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더 계속되어야 한다. 독선과 독재의 시대가 남긴 불신과 대결, 배제와 타도의 문화가 사회 곳곳에서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

다. 이를 극복하고 성숙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의 3단계 민주주의 과제다.

나뉘어져 서로 경쟁하고 갈등하면서 그 과정을 통해 통합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민주주의다. 이를 위해서는 대화와 설득, 양보와 타협, 규칙과 승복의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이를 우리가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성숙한 민주주의를 이루어 갈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이루어 나가야 할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목표이다.

1. 민주주의를 지키고 정치를 바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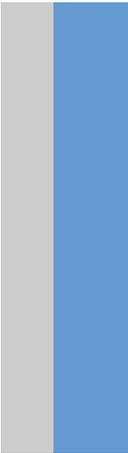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세계에서 몇 등이나 될까?

우리 국민의 인권은 어떻게 지켜지고 있을까?

선거 자유는 확대하고 불법선거는 엄단하고

'정경유착' 과 '부패정치' 라는 말은 어디로 가버렸을까?

지역주의 해소, 성공하지 못했지만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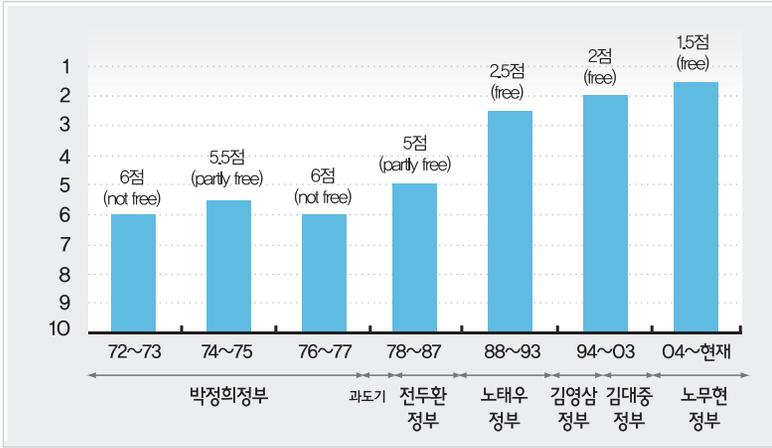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세계에서 몇 등이나 될까?

60여 년의 역사를 가진 미국의 비영리, 비정치 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의 '세계의 자유'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자유화 정도는 1988년 이후 급격히 신장되었으며, 일본·대만과 더불어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1.5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프리덤하우스는 전세계 192개 국가와 18개 분쟁지역의 민주화 정도를 정치적 권리와 시민적 자유로 분류해서 면밀히 측정해, 매년 세계 각국의 민주주의 지표에 대한 연례보고서를 발표한다.

언론의 자유를 증진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국제적인 NGO '국경 없는 기자회(RSF)'가 발표하는 세계 언론 자유 지수 순위 역시 한국이 세계 168개국 중 31위로 미국(53위), 일본(51위)보다 더 높으며, 아시아권에서 가장 높은 언론 자유를 향유하는 국가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한국의 언론이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언론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으며,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이제 언론의 자유가 정부 권력에 의해 제한받지 않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자유화 정도 등급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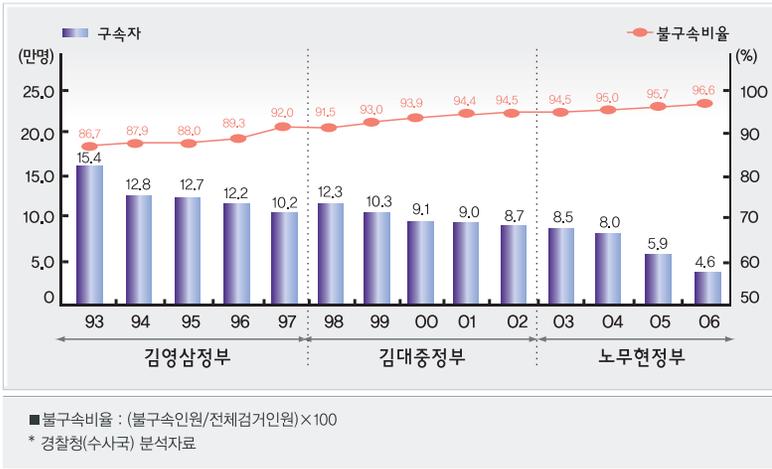


우리 국민의 인권은 어떻게 지켜지고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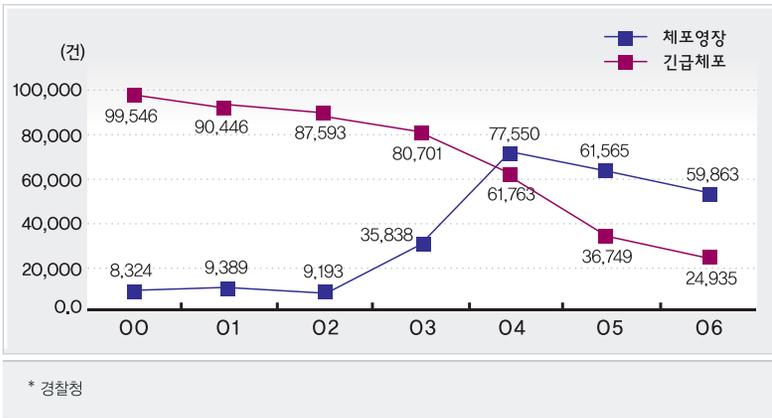
혐의가 있더라도 수사과정에서 구속하지 않고 수사하는 비율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노무현 정부 이후에는 경찰의 수사절차에서 인권이 확고하게 보장되도록 했으며 더불어 실적 평가 시 구속가산점제 폐지 등 불구속 수사 원칙을 강화해 평균 95% 이상을 상회하는 수준의 정착단계로 진입했다.

중요하고 긴급한 사건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긴급체포'도 보충성 원칙을 엄격히 적용해 매년 급감하고 있으며 대신 영장에 의한 체포가 정착돼 2004년부터는 긴급체포 건수를 웃돌고 있다.

구속자 및 불구속비율



긴급체포 vs 체포영장



선거 자유는 확대하고 불법선거는 엄단하고

노무현 정부는 선거의 자유는 확대하고 불법선거는 엄단했다. 이코노미스트지가 발표한 '2006년 민주주의의 지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선거 항목'은 우리나라가 10점 만점에 9.58점을 받아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등과 함께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됐다.

노무현 정부는 엄정한 선거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는 자에게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선거공영제의 확대 등 선거비용이 합리적으로 사용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제 17대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 적발 건수, 돈 선거 적발 건수는 각각 6042건, 1057건으로 16대 선거의 2배에 이르렀으며, 사법처리도 419명에 달해 엄정하면서 공정한 선거체제 확립을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선관위의 조사에 의하면, 깨끗하며 투명한 선거풍토를 정착시키려는 노력에 힘입어 기부행위 등 불법선거운동 경험률이 16대 총선 9.0%에서 17대 2.9%로 크게 하락했으며, 총선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선거조사 결과에서도 선거 비용이 크게 줄었다는 응답이 86.9%로 나타났다. 유권자의식조사에서도 17대 총선이 '깨끗했다'는 응답이 85.1%로 나타나는 등 선거문화 전반이 획기적으로 변화했다.

주요국의 2006년 민주주의 지수조사(이코노미스트) 선거 항목 점수

미국	일본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한국	핀란드
8.75	9.17	9.58	9.58	9.58	9.58	10

자료 : 정책기획위원회, “참여정부 정책의 성과와 과제,” 2007. 1. 31

총선 단속실적

선거명	선거법 위반 적발건수	돈선거 관련 적발건수	사법처리현황	당선무효건수
제 14대	674	104	-	-
제 15대	741	106	28	6
제 16대	3,017	594	184	9
제 17대	6,402	1,057	419	11

자료 : 정책기획위원회, “참여정부 정책의 성과와 과제,” 2007. 1. 31

‘정경유착’과 ‘부패정치’라는 말은 어디로 가버렸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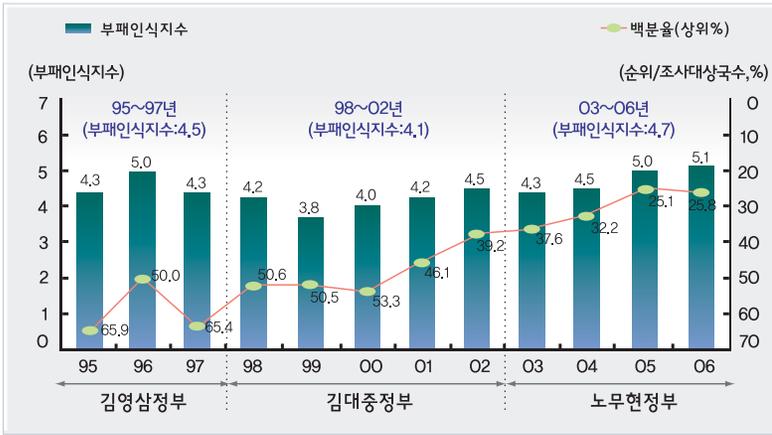
국제투명성기구(TI)의 부패인식지수(CPI)는 노무현 정부 기간 동안 꾸준히 상승했다. 2000년 4.0에서 2005년 5.0, 2006년에는 5.1로 지속적으로 높아져 2006년 현재 조사 대상 162개 국가 중 42위(상위 백분율 25.8%)를 기록하고 있다. 2002년 상위 39%에서 2005년 상위 25%로 상승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보도 자료를 통해 “한국은 평가 대상 국가 중 세 번째로 개선도가 높다”고 밝혔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국가경쟁력 순위 뇌물부패 항목에서는 2004년 42위(2.9점)였던 것이 2005년 33위(4.4점)로 올라갔다. 세계경제포럼(WEF)은 부패부문 평가에서 2004년 51위(4.7점)에서 2005년 47위(4.9점)로 우리나라의 순위를 상향 평가했다.

노무현 정부는 부패 방지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2003년 ‘공무원의 청렴 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 2005년 ‘주식백지신탁제도’ 및 ‘부패영향평가제도’를 도입했다. 2002년 1월 25일 발족된 부패방지위원회를 2005년 7월 국가청렴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독립성을 높였다. 2007년 정·재계 등 각계 인사와 함께 투명사회협약을 선포한 것도 중요한 성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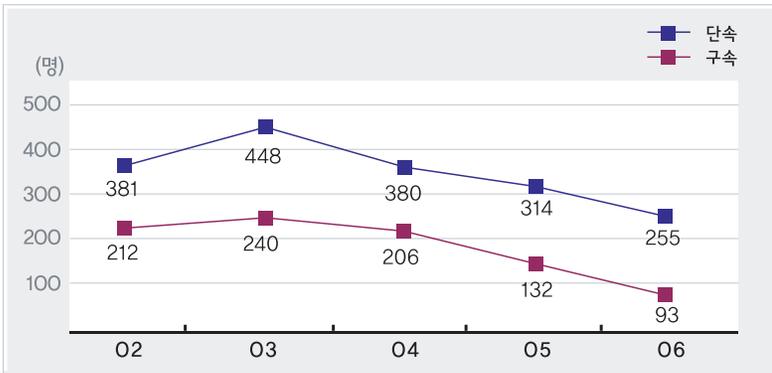
부정부패에 연루돼 단속·구속된 공직자 수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이는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효율성, 국민의 준법의식 향상 등 사회 전반에서 일어난 긍정적 변화 때문이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 고질병인 ‘정경유착’, ‘돈 정치’가 사라지고 있다.

부패인식지수 및 백분율 변화



자료) 국가청렴위원회 홈페이지

공직자 부정부패사범 처리현황



자료) 통계청, e-나라지표

지역주의 해소 성공하지 못했지만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지역주의 청산은 많은 노력을 통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아직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아직도 지역주의의 원심력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1988년부터 2004년까지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를 보면 이런 원심력의 강도를 알 수 있다. 대부분 선거의 승패가 정치적 지역주의에 따라 엇갈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기록한 영남권 득표율 32%는 어느 정도 지역주의가 완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2006년 10월 폴앤폴에서 실시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지역주의가 개선됐다는 응답(30.0%)이 더 심각해졌다는 응답(19.0%)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1988~2004년 총선 권역별 득표율

(%)

총선	정당	지역						전국
		수도권	충청	호남	경북	경남	강원	
1988년 (13대)	민정당	30.4	34.7	22.8	49.9	36.1	43.6	34.0
	평민당	22.3	3.0	69.1	0.8	1.5	4.0	19.3
	민주당	23.7	15.3	0.9	26.0	45.6	21.6	23.8
	공화당	16.7	42.1	1.6	14.9	8.6	20.2	15.6
1992년 (14대)	민자당	35.5	40.1	24.4	48.2	48.6	41.0	38.5
	민주당	34.8	22.6	62.1	8.8	13.9	12.4	29.2
	국민당	19.4	19.0	4.7	22.0	15.4	30.7	17.4
1996년 (15대)	신한국당	35.4	27.8	17.6	30.5	50.6	37.3	34.5
	국민회의	31.6	8.4	71.5	1.5	5.7	6.7	25.3
	자민련	14.1	47.0	0.7	20.1	5.3	23.6	16.2
2000년 (16대)	한나라당	41.4	23.2	3.7	52.5	53.7	38.6	39.0
	민주당	42.9	30.0	66.7	14.7	11.8	36.5	35.9
	자민련	8.5	34.8	2.0	14.0	3.3	10.2	9.8
2004년 (17대)	한나라당	40.7	23.0	0.4	58.3	48.5	43.4	37.9
	민주당	8.0	2.7	30.8	1.1	0.7	6.4	8.0
	우리당	44.2	44.5	55.0	26.3	35.8	38.8	42.0
	자민련	2.0	22.6	0.4	0.5	0.5	0.2	2.7
	민노당	4.15	2.4	4.0	3.0	7.0	4.1	4.3

자료 : 중앙선관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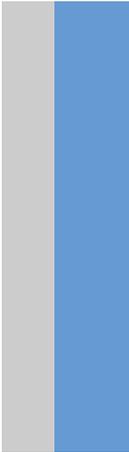
참여정부 출범이후 지역주의 개선정도('06.10. 폴앤폴. %)

더욱심각	다소심각	보통	다소개선	많이개선	모름/무응답	심각(종합)	개선(종합)
4.2	14.5	51.4	28.5	1.2	0.3	19.0	30.0

자료 : 폴앤폴

2. 정부, 확 달라졌다

그래도 부족한 대국민 서비스 인력
세계에서 가장 빨리 혁신하는 나라
정책서비스도 '만족경영' 시대로
세계 3위 디지털 정부
시스템이 일인자
국민의 소리가 제도를 바꿨다
대통령 업무추진비를 세부내역까지 공개하는 나라
규제 개선으로 2조216억 원을 벌었다
여성공무원 비율 38%, 장애인 의무 고용률 2% 달성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보다 부자가 되었다



그래도 부족한 대국민 서비스 인력

노무현 정부는 일률적인 조직·인력 구조조정보다는 정부 규모의 적정화를 통해 책임을 다하는 정부가 되고자 노력하였다. 공무원의 수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한 결과이다.

노무현 정부는 주 40시간 근무제 등 환경변화에 탄력적 대처가 필요한 분야, 청년실업 해소 등 국가 당면과제 해결과 관련된 새로운 서비스 수요와 생활수준 향상과 함께 급증한 치안질서·복지·교육 등에 대한 전통적인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노무현 정부에서 국가직 공무원 4만3702명이 증원되었는데, 그 증원 내역은 대국민 서비스를 담당하는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교원 2만2536명과 치안서비스 개선을 위한 경찰 5633명의 증원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집배원, 검역, 특허심사 등 대민서비스 접점에도 인력이 보강되었다.

뉴질랜드,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작은 정부' 보다는 산출과 성과에 역점을 두는 '능력 있는 정부(enabling government)'를 추구하면서 1999년 이후 공무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공기업 민영화와 민간 위탁 등 정부 규모 축소를 위한 구조조정 방식도 제한적으로 활용해 불필요한 부문을 축소하는 작업도 병행했다.

노무현 정부 기간(2003~2006년) 중 연평균 총 공무원 수는 93만4518명으로 김영삼 정부 기간의 91만4502명보다 약간 많지만 인구 1000명당 공무원 수는 김영삼 정부(1993~1997년)의 연평균 20.3명보다 적은 연평

노무현정부 국가직 공무원 증원현황

(2006년 12월)

합계	교원	검역, 특허심사 등	경찰	집배원	교정	고용지원	재난안전	기타
43,702 (100%)	22,536 (51.5%)	7,741 (17.7%)	5,633 (12.8%)	2,694 (6.4%)	1,794 (4.3%)	1,013 (2.4%)	942 (2.3%)	1,349 (3.1%)

자료 : 행자부

공무원 1인당 인구 수

	한국(05)	일본(00)	미국(00)	프랑스(99)	독일(00)
공무원 1인당 인구수(명)	41.4	30.4	15.3	13.6	18.9

자료 : 정책기획위원회, “참여정부 정책의 성과와 과제” 2007. 1. 31
 주 : 공무원수는 국가+지방+공공기관이며, 군인은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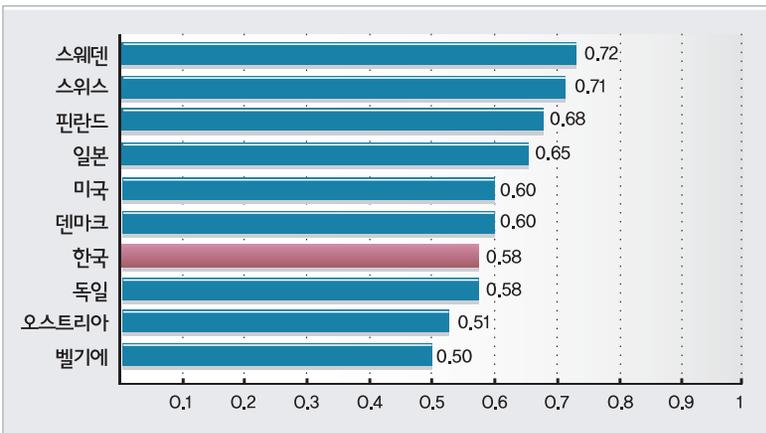
균 19.4명을 기록했다.

한편 공무원 1인당 인구수는 우리나라가 41.4명으로 OECD 주요국에 비하여 공무원 수가 상대적으로 적다.

세계에서 가장 빨리 혁신하는 나라

우리나라의 국가 종합혁신지수는 세계 34개국 중 7위 수준이다. 특히 2003~2005년 3년간 평균 종합혁신지수 연평균 증가율은 7.9%로 34개국 중 최고 수준이다. 지난 몇 년 동안 당당하게 혁신선도국가로 분류될 만큼의 성과를 이뤄낸 것이다.

2005 국가별 종합혁신지수 순위



주) 혁신선도국가 : 미국, 일본, 스위스, 핀란드, 덴마크, 독일, 한국

중간국가 : 영국, 아일랜드,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아이슬란드

추격국가 : 슬로베니아, 헝가리, 리투아니아

후발국가 : 에스토니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자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가혁신비교분석 보고서(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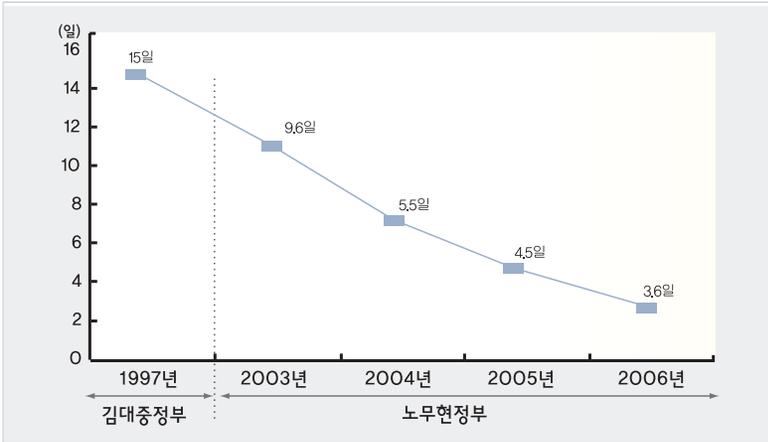
시스템이 일인자

노무현 정부는 정부업무가 ‘사람’이 아닌 ‘시스템’을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를 통해 공무원들의 일하는 방식과 과정은 물론 사고까지 바꾸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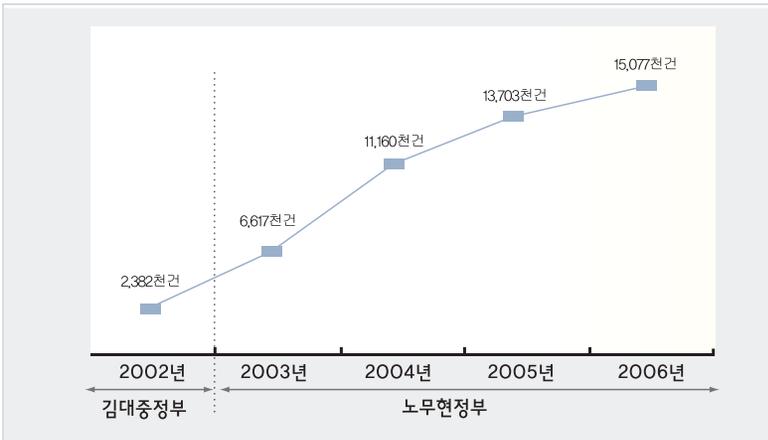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인 ‘e지원’을 기반으로 구축된 ‘온 나라 업무관리시스템’이 중앙행정기관에서 도입되었으며, 2007년 하반기에는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전자통합평가시스템 등과 연계되어 정부업무 디지털 신경망이 구축된다.

개별 행정기관 차원에서는 국민에게 더 효율적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혁신하였는데, 특히 통관, 조세, 특허, 출입국, 정부조달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업무를 전면 재설계하여 표준화·시스템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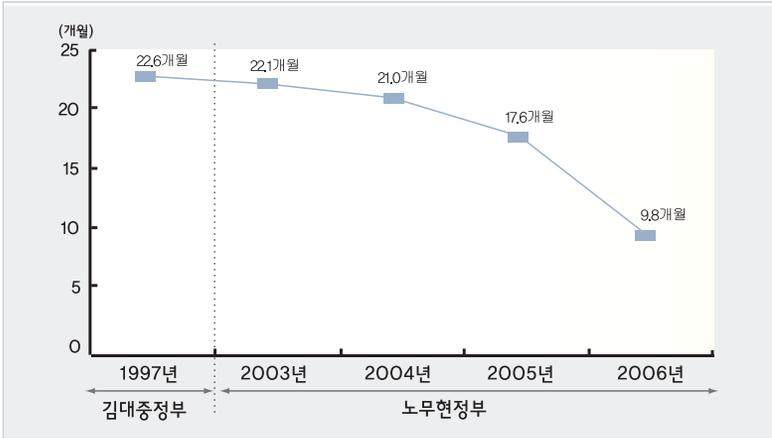
수출입화물 처리시간 단축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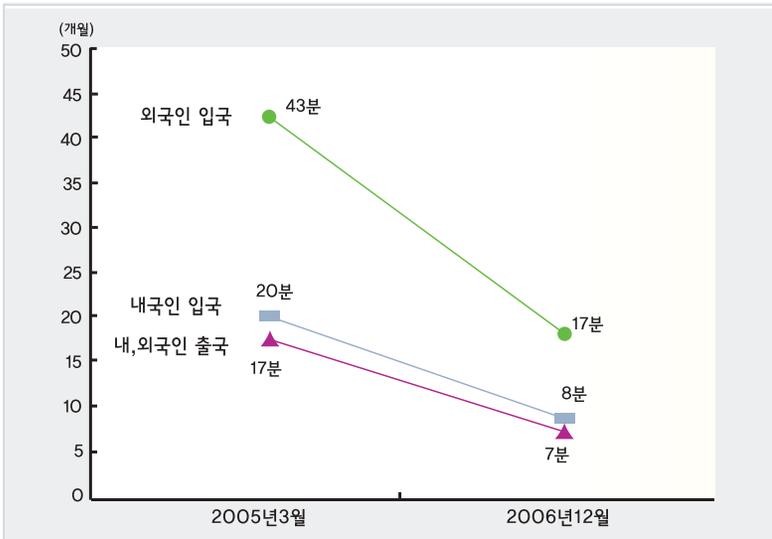
세금 전자신고 건수 증가 추이



특허심사기간 단축 추이



출입국심사 대기시간 단축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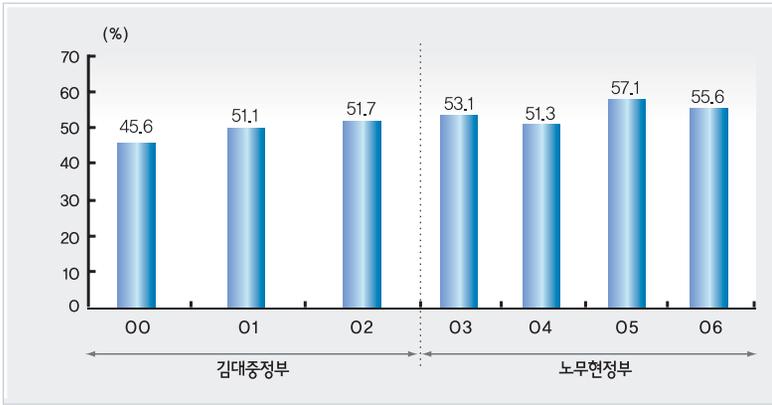
정책서비스도 ‘만족경영’ 시대로

노무현 정부는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추진함으로써 행정서비스 전달시간의 축소, 의사결정 단계 단축, 불필요한 업무 폐지 등 효율적이고 봉사하는 행정의 구현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정부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고객 만족도는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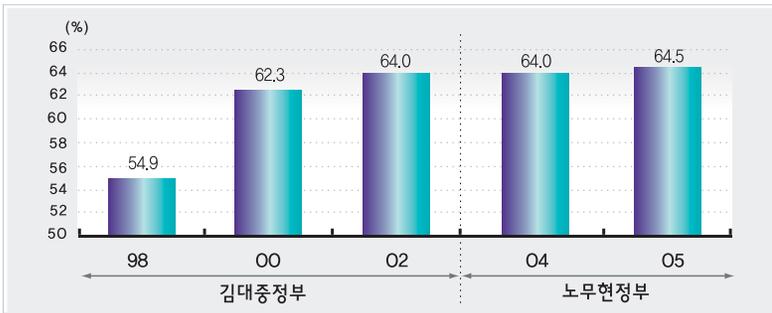
노무현 정부 이후 성과지표관리를 통해 정책목표의 달성도가 90% 수준으로 향상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주요정책에 대한 만족도도 개선되었다. 또한 공기업에 대한 고객만족도 역시 2002년 72.3%에서 2006년 83.6%까지 향상되었다.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성과를 이루어내고 있는 것이다.

중앙행정기관 주요정책 만족도



자료) 한국행정연구원

중앙부처 민원서비스 만족도



자료) 한국행정연구원(2005, 43개 중앙행정기관 대상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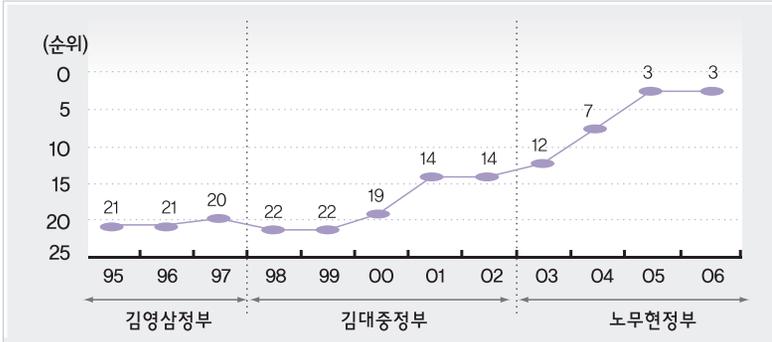
세계 3위 디지털 정부

노무현 정부는 국가사회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정보통신산업 기반 조성, 초고속 정보통신망의 효율적 구축을 통해 정보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국가의 정보화 수준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정보화 지수는 노무현 정부 들어 꾸준히 상승하여 세계 50개국 중 3위를 기록하였다.

또한 IT에 기반을 둔 디지털 정부를 구현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국민에게 봉사하는 행정서비스 체제를 구축해 냈다. 그 결과, 유엔이 매년 191개 회원 국가를 대상으로 전자정부 수준을 비교·평가하는 전자정부 준비지수에서 우리나라는 2003년 13위, 2004년과 2005년에는 연속 5위로 평가받았다. 특히 아시아에서는 확고부동한 1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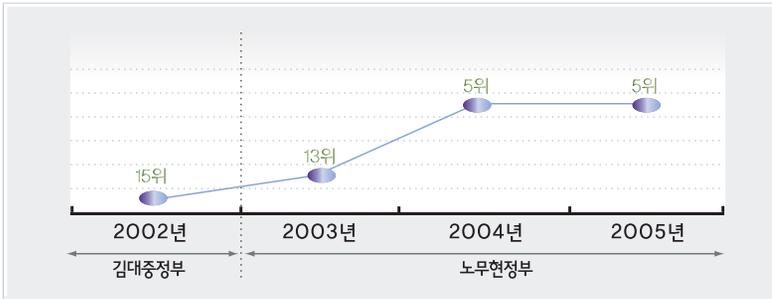
정보기술로 국민 참여를 확대하려는 노무현 정부의 노력 정도를 표시하는 전자적 참여지수(E-participation Index)에서도 우리나라가 캐나다와 함께 공동 4위로(2005년) 평가돼 2003년의 12위, 2004년의 6위에 이어 계속 상승했다.

국가정보화 순위



자료) 한국정보사회진흥원, "국가정보화 백서" 각년도
 1998년 이전 순위는 정보통신부·한국전산원 "한국의 정보화정책 발전사"

UN 전자정부 수준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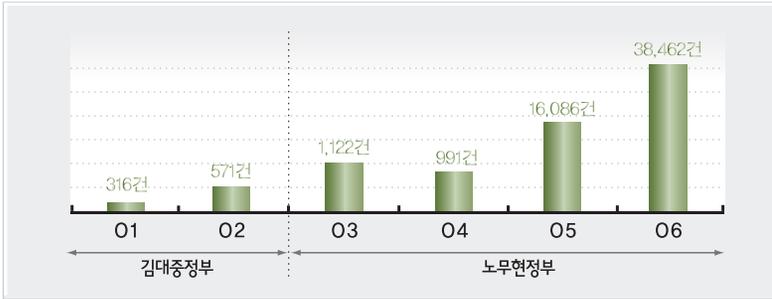
자료) UN, "UN Global e-Government Survey(2003)",
 "Global e-Government Readiness Report (2004-2005)"

국민의 소리가 제도를 바꿨다

노무현 정부는 국민이 국정수립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마당 신문고’ 개통 등을 통해 국민 제안, 고충 민원, 국민 참여 등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참여마당 신문고(www.epeople.go.kr)는 국민의 고충을 제대로 해결하고 국민이 간편하게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구축된 범정부 온라인 통합 포털로서 2005년 4월 시범 개통돼 2006년 8월 전체 중앙행정기관으로 확산되었다. 참여마당 신문고의 개통으로 국민제안 건수가 2004년 991건에서 2005년 1만6086건 그리고 2006년 3만8462건으로 대폭 늘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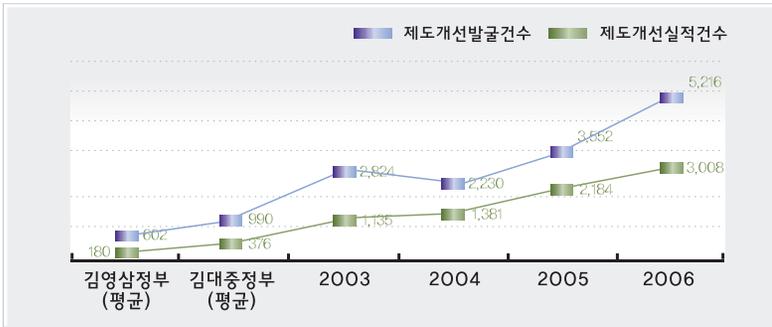
국민 참여를 통해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노무현 정부의 노력은 민원 등 국민의 소리에 대해 기존 절차와 관례에 따라 기계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이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해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민원·제도 개선 시스템 구축으로 이어진다. 그 결과, 2004년 1381건, 2005년 2184건, 2006년 3008건 등 제도 개선 실적이 증가하고 있다.

국민제안 건수



자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제도개선 실적



자료) 행정자치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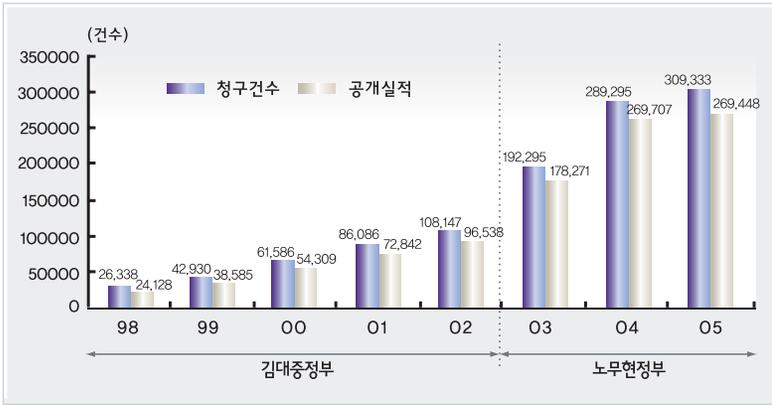
대통령 업무추진비를 세부내역까지 공개하는 나라

노무현 정부는 정책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 안보, 개인 정보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행정정보를 공개했다.

노무현 정부 들어 정보 공개 청구 건수는 크게 증가했고, 정보 공개 실적도 이와 함께 급증해 2005년도에 정보 공개 실적은 2000년에 비해 5배 가까이 증가했다.

또한 각 부처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주요 정책 자료는 물론, 장관의 업무추진비까지 매일 공개하고 있으며, 특히 2006년 1월 청와대에서 2005년 한 해 동안 집행된 대통령의 업무추진비를 세부내역까지 공개하는 등 최고위 공직자들의 업무 추진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연도별 정보공개 청구 및 공개 건수



자료) 행정자치부

규제 개선으로 2조216억 원을 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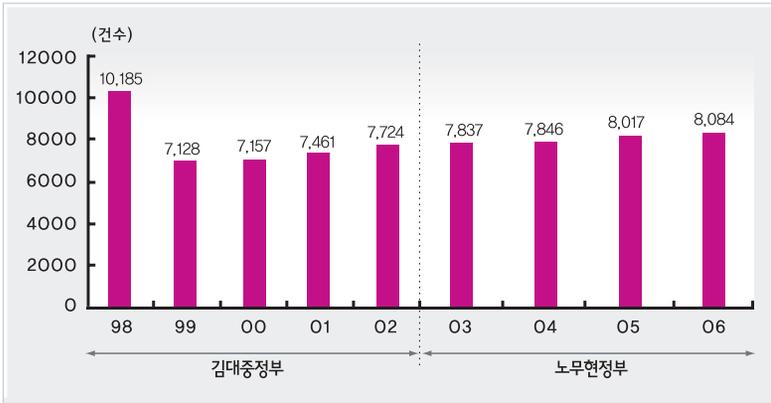
정부가 등록규제를 최초로 집계한 1998년 말에 1만185건이었던 등록규제 수는 2006년 말 기준 20.6%가 감소된 8084건을 기록하였다. 등록규제 수는 1998~1999년 기준 규제 일제 정비로 대폭 줄었다가,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노무현 정부 들어 증가 추세가 둔화되고 있다.

한편 2006년 말 기준으로 2002년에 비해서 등록규제 수가 360건 증가했다. 사회·경제가 고도화되면서 새로운 산업의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법을 제정하고 국민의 생명, 건강 및 환경보호 등을 위한 규제를 신설함에 따라 늘어나는 규제는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행정연구원의 '규제 개혁의 경제적 효과 분석(2006년 12월)'에 따르면 76개 규제 개혁 세부과제 수행에 따른 순 비용절감 효과는 2조216억 원이었고, 실질국내총생산 2.1% 증가, 15만2000명의 고용 증가라는 거시경제적 효과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노무현 정부의 규제 개혁은 국민(2006년 종합만족도는 62.7점으로 전년 대비 3.8점 상승)과 전문가(2006년 종합만족도는 67.7점으로 전년 대비 9.5점 상승)들로부터 보통 수준 이상의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OECD는 2007년 3월 우리나라에 대한 규제 개혁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면서 노무현 정부 들어 규제 정책 및 제도 개혁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특히 규제개혁기획단 등 수요자 참여형 추진체계 구축을 높이 평가한 바 있다.

등록규제 건수 현황



자료) 규제개혁위원회 홈페이지, "규제등록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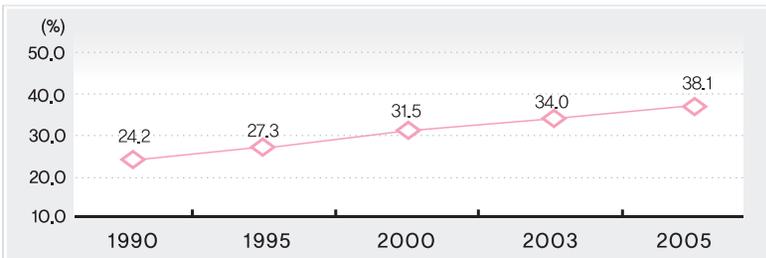
여성공무원 비율 38%, 장애인 의무 고용률 2% 달성

공직 내 양성 평등과 여성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노무현 정부는 '양성 평등 채용목표제', '5급 이상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5개년 계획' 등 다양한 노력을 실시했다.

노무현 정부의 여성공무원 비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해 전체 공무원 대비 38.1%에 이른다. 5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은 5년간 2배 정도 증가했다. 중앙 행정기관 중 여성과장을 1명 이상 둔 기관은 2002년 26개 기관에서 2006년 41개 기관으로 확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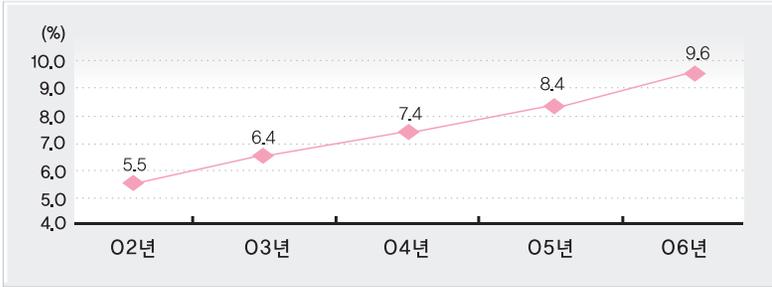
장애인 의무 고용 달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노무현 정부는 2005년 의무 고용률 2%를 달성했다. 장애인 의무 고용 직종을 대폭 확대(공안직군, 검사, 경찰, 소방, 군인, 경호직만 제외)함으로써 장애인의 공직 진출 문호를 대폭 넓혔다. 의무 고용 직종 비율은 2004년에 32%에서 2006년에는 84%로 높아졌다.

여성공무원 비율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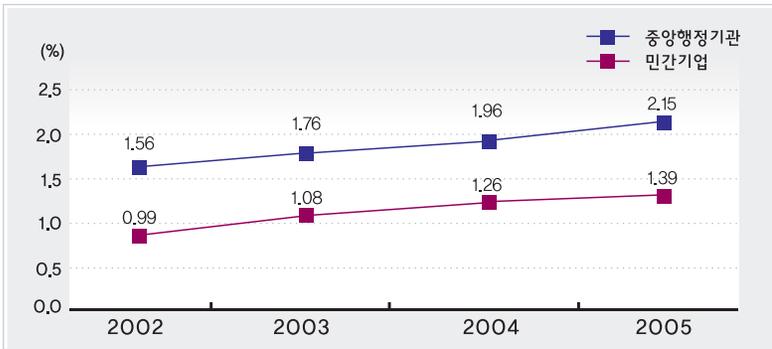
자료) 행정부, 여성부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 (5급이상)



자료) 행자부, 여성부

장애인 고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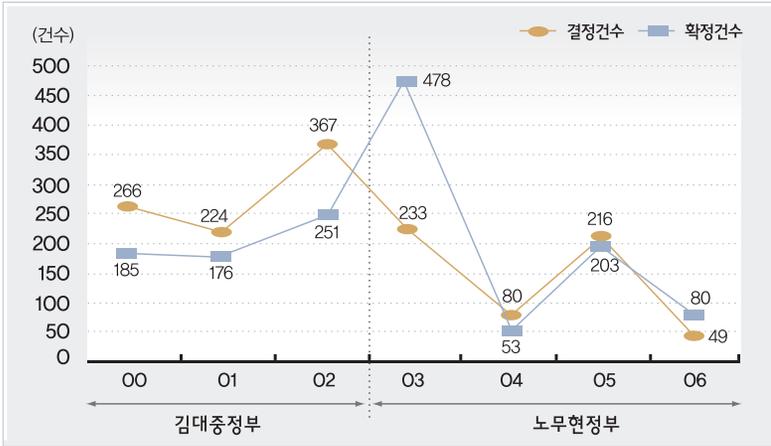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보다 부자가 되었다

지방분권과 관련해서도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 지방정부의 권한을 대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인사권 위임, 지방 재정력 확충, 불균형 완화 등 다양한 과제를 추진해 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2000~2006년 기간 중 총 1435건의 행정사무가 지방에 이양되는 것으로 결정이 났고, 이 중 1087건이 이양 완료된 상태다.

전체 국가예산에서 차지하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가용 재원의 비중을 살펴보면 노무현 정부 기간에 지방정부의 가용 자원 비중이 꾸준히 증가해 약 54%까지 진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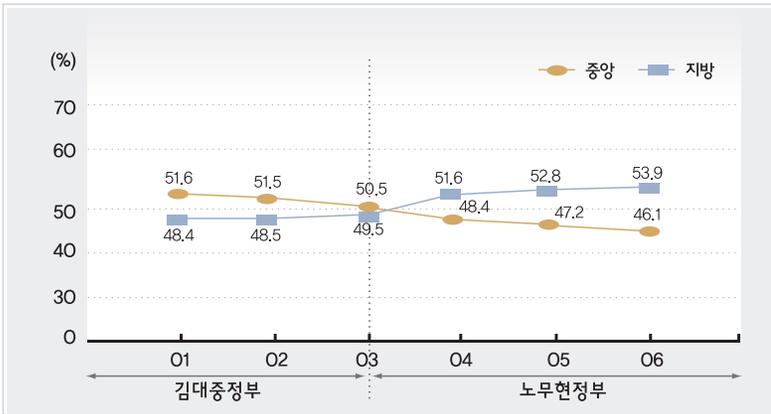
연도별 지방이양 결정 및 확정 건수



자료)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주) 지방이양 결정 건수는 지방이양 사항을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의결·결정한 건수이며, 확정건수는 동 의결 사항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시행토록 확정된 건수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가용재원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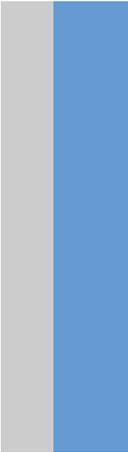
자료) 행정자치부

3. 갈등은 풀고 안전은 높이고

불법 폭력시위 1% 미만으로 급감

이젠 우리도 치안 선진국

교통사고 사망자, 13년 만에 절반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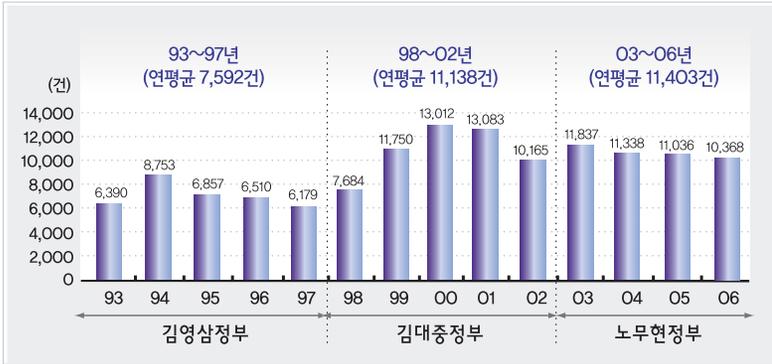


불법 폭력시위 1% 미만으로 급감

전체 집회시위는 집시법 개정(1989), 민주화·다원화된 사회분위기 등에 편승해 전반적으로 크게 증가해 왔으나 노무현 정부 들어 평화적 시위문화가 확산되면서 매년 감소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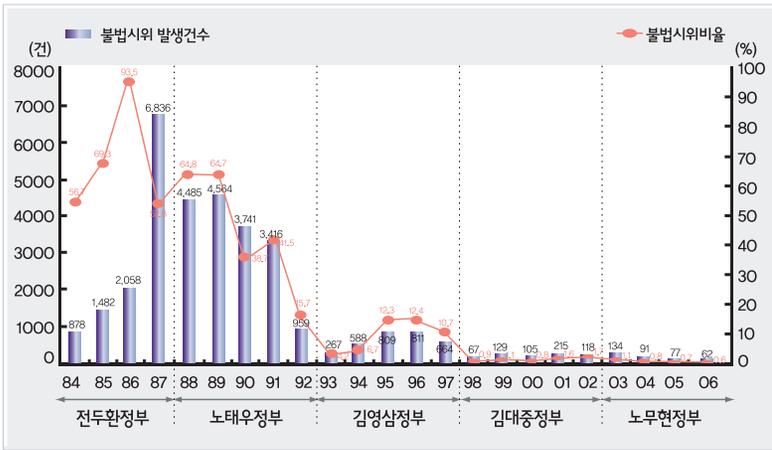
불법 폭력시위는 1996년을 정점으로 큰 폭으로 감소해 왔으며 2006년에는 김영삼 정부의 1/10 수준(불법 시위 비율도 1% 미만으로 유지)이다. 이는 준법 시위문화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폴리스라인 지키기’, ‘MOU 체결’ 등 시위문화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의 성과로 판단된다.

전체 집회시위 발생



* 경찰청(경비국) 분석자료

불법폭력시위 발생(비율)



■ 불법시위비율 : (불법시위/전체집회시위) × 100

* 경찰청(경비국) 분석자료

이젠 우리도 치안 선진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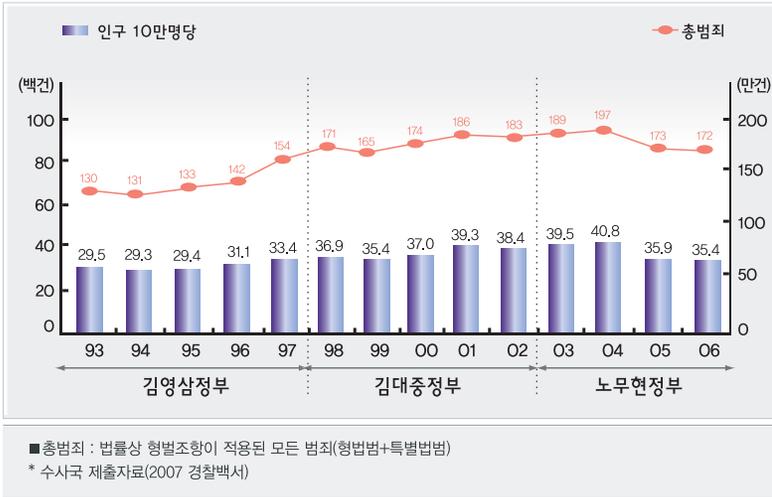
총 범죄 발생은 전반적 증가 추세로 특히 외환 위기 이후에 급격히 증가했으나 노무현 정부 들어 2005년부터 2000년 이전 수준으로 감소했다.

범죄 증감에는 도시화·경제 상황·인구 증가 등 다양한 변수가 작용할 수 있으나 2004년 지구대 체제 전환을 통한 경찰력 집중 운용 등 새로운 치안시스템의 정착이 범죄 감소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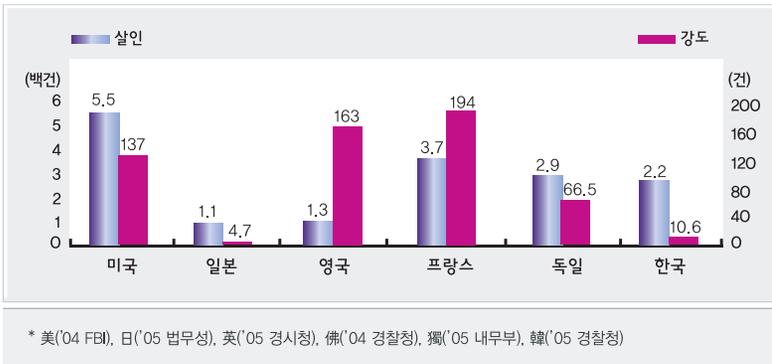
체감 치안과 가장 직결되는 인구 10만 명당 살인·강도 발생 건수를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범죄로 인한 인적 피해는 매년 증가해 왔으나 폭력범죄가 2001년 33만 8000명에서 2006년 28만2000명으로 줄었으며, 112순찰차 신속배치 시스템 구축 등 대응력 향상으로 2000년부터 2006년까지 59.8%로 대폭 줄어들었다.

총범죄 발생



인구 10만명당 살인·강도 발생



교통사고 사망자, 13년 만에 절반으로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991년 1만3249명으로 최고치에 달한 후 2004년 6563명을 기점으로 반감기(半減期)에 진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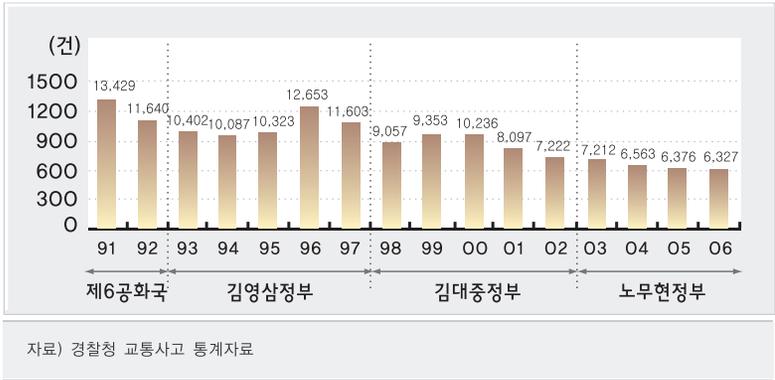
주요 선진국이 반감기에 접어드는 데 대체로 20여 년이 소요된 반면 우리나라는 13년 만에 교통사고 사망자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주요 선진국 반감기 소요기간

구분	한국	캐나다	독일	뉴질랜드	프랑스	호주	스웨덴	일본	영국
반감기	13년	21년	25년	27년	28년	30년	30년	33년	34년

*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자료

연도별 교통사고 사망자



5장

한반도의 평화 없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최근 10년 동안 우리는 냉전체제의 굴레에서 벗어나 평화와 공존의 시대를 열었다. 과거 군사독재 시기에는 적대적 남북관계에 뿌리를 둔 반공 이데올로기가 민주주의와 인권을 탄압하는 데 악용되었다. 안보를 내세워 국민을 겁주고 불안하게 하는 것은 독재시대의 나쁜 버릇이었다. 군사독재 시기에 한미관계는 일방적 의존관계였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노태우 정부 들어 비로소 북방 외교로 탈냉전 외교가 시작됐다. 1988년 7·7선언으로 남북 왕래가 시작되고 1990년 남북교류협력법이 제정되었다.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했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했다. 김영삼 정부에서는 강온이 혼합된 대북정책을 추진했다. 이인모 노인의 송환이 이루어졌고 북한에 대한 쌀 지원이 있었다. 그리고 평시 작전통제권이 환수되었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햇볕정책에 기초하여 금강산 관광과 6·15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대결적 남북관계를 평화와 공존의 관계로 전환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북핵 문제로 긴장과 위기가 있었으나 포용정책과 6자회담을 통해 평화주의 노선을 일관되게 관철시켰다. 남북교류협력사업도 확대되어 개성공단 입주업체인 리빙아트가 2004년 처음으로 냄비 세트를 생산했다.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가 결정되었고 용산 미군기지 이전이 이루어졌다.

지난 20년 동안 남북 인적·물적 교류도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1989년 이후 남북 왕래 인원이 총 27만5449명에 이르고 1998년 시작된 금강산 관광 인원도 총 140만 명에 달한다. 1989년 시작된 남북 간 교역은 2006년까지 총 74억 달러에 달하며, 최근에는 북한 대외무역의 1/4 이상을 차지해 남한은 북한의 제2의 교역상대가 되었다. 인도적 문제에서도 실질적 진전을 이뤘다. 군사정권 시기 157명(65건)에 불과했던 이산가족 상봉이 민주화 이후 1만6347명(3270건)으로 100배 이상 늘었다.

노무현 정부에서 주목할 점은, 외교·안보 분야의 묵은 과제를 해결한

것이다. 용산 기지 이전, 전시 작전권 이관, 국방 개혁 등은 군사정권 때에도 제기됐으나 해결하지 못했던 과제들이다. 20년 이상 묵혀온 과제를 피하지 않고 정리함으로써 민주정부의 역량을 보여주었다.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2000년 10월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민주주의와 인권, 한반도 평화와 화해를 위해 노력한 업적을 기려 김대중 당시 대통령에게 노벨평화상을 수여했다. 한국은 세계 민주국가 대열에 확고히 자리 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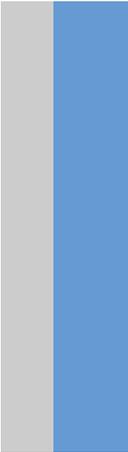
2006년 10월에는 반기문 전 외교부 장관이 만장일치로 유엔 사무총장에 선출되었다. 유엔 사무총장에 우리나라 인사가 선출된 것은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이룩한 한국의 국가적 역량이 반영된 것이다. 민주정부 시대에 우리의 외교·안보는 더 성숙하고 튼튼해졌고, 국가의 위신과 발언권은 더욱 높아졌다.

1. 무럭무럭 자라난 지구촌의 대한민국

49개국 44만km, 지구 10바퀴 반을 돌았다

에너지 문제도 안정궤도에 접어들었다

16개국과 FTA 타결, 40여 개국과 협상 중



49개국 44만km, 지구 10바퀴 반을 돌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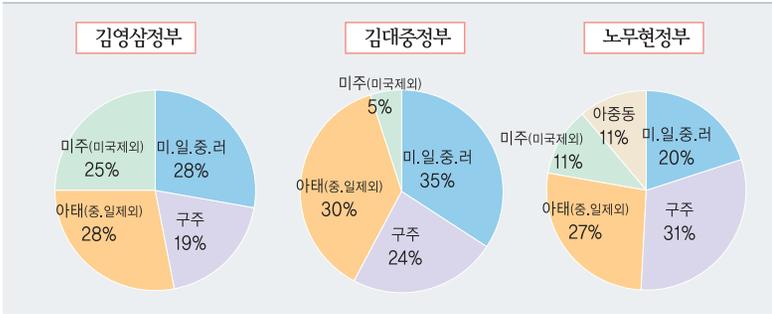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경제협력 확대, 자원·에너지 확보 등을 위해 가능한 한 많은 나라와 실리 확보를 기조로 하는 외교 전략을 추구했다. 그 결과 49개국 44만Km(2007년 2월 현재) 순방 등 외교의 지평을 획기적으로 넓혔다.

노무현 정부는 종래 미·일·중·러 중심에서 탈피하여 정상 외교의 다변화를 모색하고, 외교 지평을 아시아, 오세아니아, 중남미, 유럽, 아프리카, 중동 지역 등 전세계로 확대했다.

역대 대통령 해외 순방 현황

역대정부	방문회수	방문국가	거리(km)
5공화국	7	18	-
6공화국	12	19	258,673
김영삼정부	15	34	291,312
김대중정부	30	44	411,590
노무현정부(07.2)	23	49	440,000

정상외교의 지역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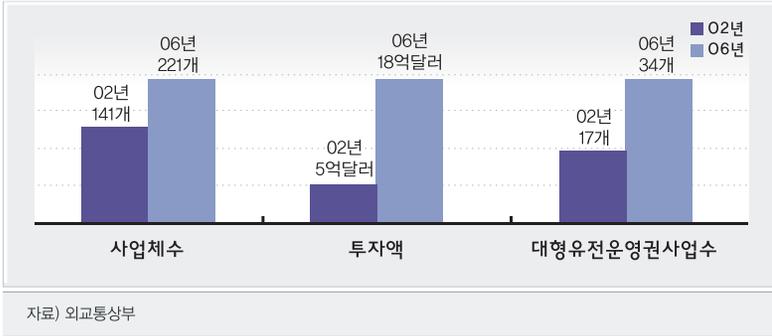
에너지 문제도 안정궤도에 접어들었다

노무현 정부는 경험 확대와 자원·에너지 확보를 위해 활발한 순방 외교를 펼쳐 석유 88억 배럴, 가스 760만 톤, 철광석 7억 톤, 우라늄 3600 톤 등 전략자원을 새로 확보하고 우리 기업의 진출을 위한 우호적 기반을 조성했다.

자원 외교를 통해 미래의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도 총력을 기울였다. 특히 러시아 서캄차카, 나이지리아, 카자흐 잠빌, 우즈베크 아랄해 가스전, 아제르바이잔 이남 등에서 유례없는 대형 프로젝트를 성사시켰다.

원유와 가스는 88억 배럴을 추가로 확보하여 확보 매장량이 140억 배럴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노무현 정부의 이러한 노력은 향후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해외자원 개발 현황



16개국과 FTA 타결, 40여 개국과 협상 중

과거 정부는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에 크게 의존하였으나, 노무현 정부는 2003년 9월 FTA 추진 로드맵을 확정하고 동시다발적으로 FTA 협상을 추진한 결과, 2007년 4월 현재 16개국과 FTA를 타결하고 40여 개국과 FTA 사전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2007년 4월까지 FTA 협상이 타결된 국가는 칠레와 싱가포르, EFTA 소속 4개국(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ASEAN 9개국(태국 제외), 미국 등 총 16개국이다. 특히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과 FTA가 체결되어 향후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에 190여 개의 FTA가 가동되고 있고, 또 수많은 나라들이 FTA를 통해 무관세 교역을 하는 현실에서 FTA는 피할 수 없는 새로운 무역 규범이 되고 있다. 이해당사자들의 극심한 반대 등 FTA가 타결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노무현 정부가 통상협상을 강화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한 결과, 2006년 수출 3260억 달러를 달성했다.

2. 남북이 함께 사는 한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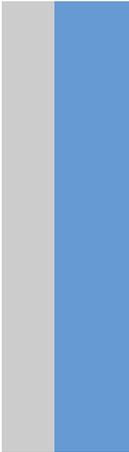
군사시설에서 생산시설로 바뀐 개성공단

바다로, 땅으로, 하늘로 오간 사람이 10만 명

남북으로 오가는 배

찾아진 남북회담

핵 위기도 흔들지 못한 대한민국의 안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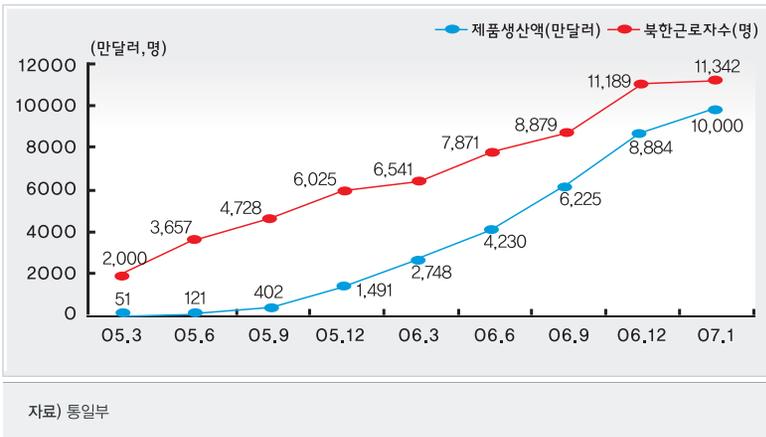
군사시설에서 생산시설로 바뀐 개성공단

개성공단 사업은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토지와 노동력을 결합하여 새로운 경쟁력을 창출하는 상생의 협력 사업으로 노무현 정부 들어 본격 추진되었다.

2007년 1월 말 현재 21개 공장이 가동 중이며 북한 근로자 1만1342명이 고용되어 일하고 있다. 2004년 12월 첫 제품 생산 이후 2007년 1월 말까지 총 1억 달러어치의 제품이 생산되었다.

1단계 330만㎡를 완전 가동할 경우, 200~300여 개 기업의 입주와 함께 연간 20억 달러의 생산이 예상되며, 7만~10만 명의 북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성공단 생산액 및 근로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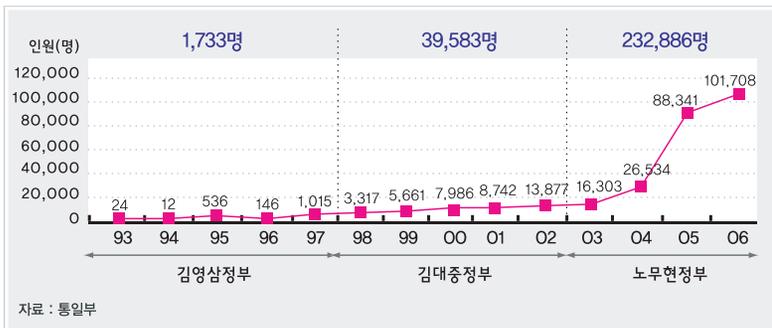
바다로, 땅으로, 하늘로 오간 사람이 10만 명

남북을 오가는 인원이 급증함에 따라 2006년에는 10만 명을 넘어섰다. 이는 김대중 정부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개성공단 개발이 본격화된 2005년부터 급격히 증가했다.

연도별 총 왕래 인원 중 개성공단 방문 인원 비율은 2003년 32.8% → 2004년 38.7% → 2005년 46.6% → 2006년 60%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4년 12월 개통된 남북연결도로는 개성공단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데 물적 토대가 되고 있다.

남북 인적왕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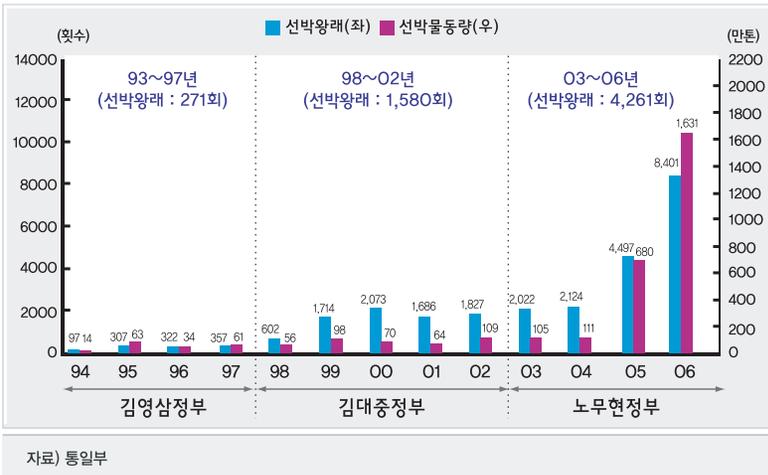
남북으로 오가는 배

남북해운합의서 발효(2005년 8월 1일) 등 제도적 여건 마련과 교역 확대로 2005년부터 선박 왕래가 급증하여 김대중 정부 선박 왕래 횟수의 2.2배에 달한다.

2005년부터 북한산 모래 반입 증가 등으로 선박 왕래 및 해운 물동량이 크게 증가했다. 2006년 모래 반입량은 1437만 톤으로, 수도권 모래 수요량의 25%를 차지한다.

남북해운합의서 발효로 2005년 8월 15일부터 북한 민간 선박의 제주해협 통과가 가능해졌다. 남북해운합의서 발효 이후 2006년 말까지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은 173회이며, 제주해협 통과는 164회이다.

남북 선박왕래 및 물동량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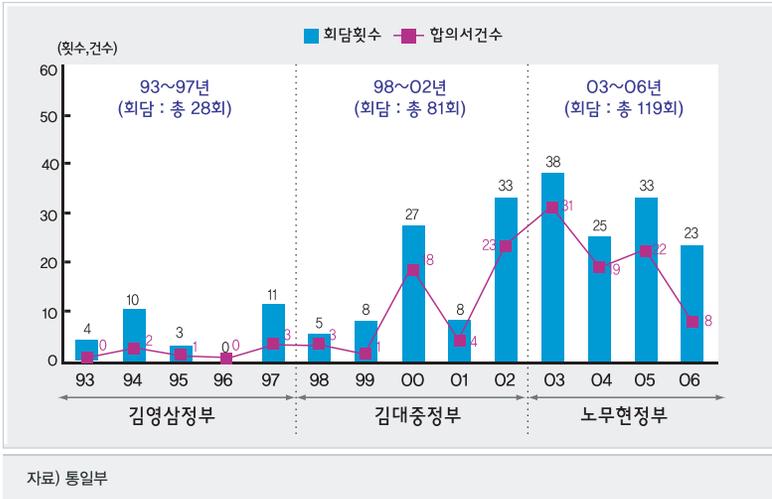


찾아진 남북회담

남북 간 현안 협의·해결을 위한 남북회담은 노무현 정부 들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남북회담이 주요 현안을 실질적으로 협의·해결하는 장(場)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회담 개최가 정례화되고 정치·경제 등 분야가 다양해졌다.

회담 개최 대비 합의서 도출 비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김영삼 정부 때 21%였던 합의서 도출 비율이 김대중 정부 시절 60%, 노무현 정부 들어서는 67%로 올라갔다.

남북회담 개최 및 합의서 현황



핵 위기도 흔들지 못한 대한민국의 안전성

국가위험도(country risk)란 일반적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대출(lending)이 이루어질 때 특정 정부로 인해 발생하는 우발적 손실에 노출되는 정도를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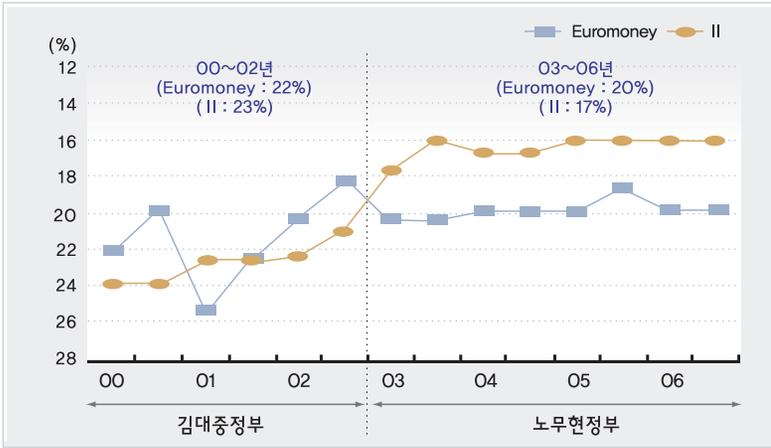
종합국가위험도 평가기관인 세계 기관투자자 유로머니(EUROMONEY)와 기관투자자인 인스티튜셔널 인베스터(Institutional Investor) 등에서 조사한 종합국가위험도 순위를 전체 평가대상국 수로 나눈 백분율을 보면 과거에 비해 노무현 정부 기간에 크게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두 기관의 평가를 종합해 보면, 외환 위기 이후에 정부의 구조조정을 통한 대외신인도 제고 노력이 결실을 맺는 등 종합국가위험도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유로머니의 역대 정부별 종합국가위험도 순위를 보면, 김대중 정부 전후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즉 전두환 정부 시절에는 88올림픽 개최 확정 등으로 인해 국가위험도의 순위가 상승(순위가 높을수록 위험도가 낮음)하였으나 이후 김영삼 정부에서는 종합국가위험도 순위가 22위에서 32위 사이에서 등락을 보였고, 김대중 정부에서는 외환 위기의 영향으로 순위가 40위 밖으로 밀려나기도 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에서는 평균 37위를 차지해 김대중 정부와 비교해 상당히 향상되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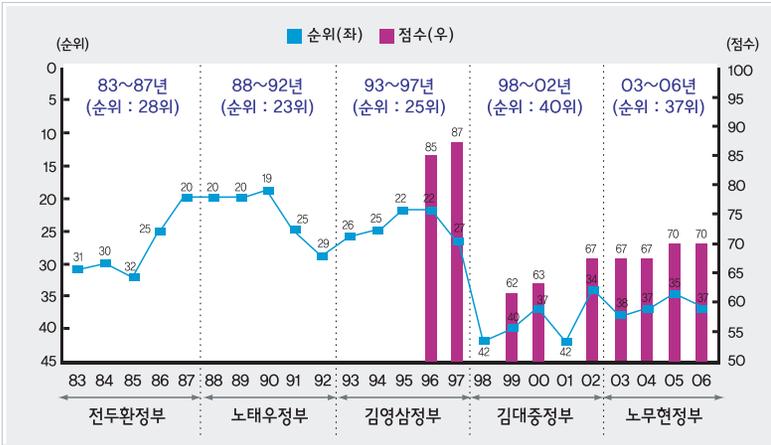
인스티튜셔널 인베스터의 역대 정부별 종합국가위험도 순위 및 점수를 보면, 노무현 정부 기간 순위는 28위로 김대중 정부 기간에 비교해 크게 개선된 수준을 보이고 있고 점수에서는 외환 위기 이전 수준 이상으로 회복되었다.

주요기관의 종합국가위험도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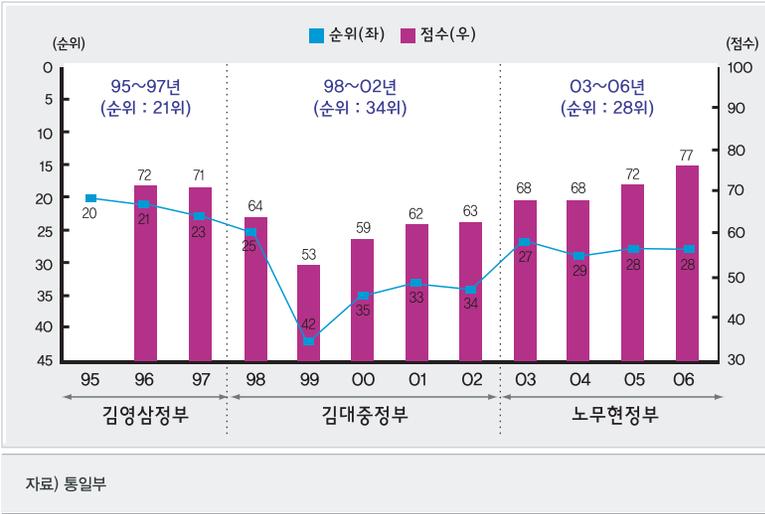
자료) Euromoney, Institutional Investor, International Country Risk Guide, 각호
 주) 그래프 수치(%) = 해당순위/전체 평가국가 수

EUROMONEY의 종합국가위험도 순위 및 점수



주 : 1) 짙은 선 그래프는 종합국가위험도의 순위를 나타냄
 2) 막대그래프는 종합국가위험도의 점수를 나타냄

Institutional Investor의 종합국가위험도 순위 및 점수



6장

박정희 정부부터
노무현 정부까지

1961년 이후 6개의 정부를 비교한 결과, 박정희 정부로 대표되는 산업화 시기에는 선성장 후분배의 기초 하에 양적 성장 위주의 발전이 추진되었으며, 그 결과 사회 분야 및 사회투자·균형발전 분야 등에서 저조한 성과를 보였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이에 대한 시정노력으로 여러 지표들이 개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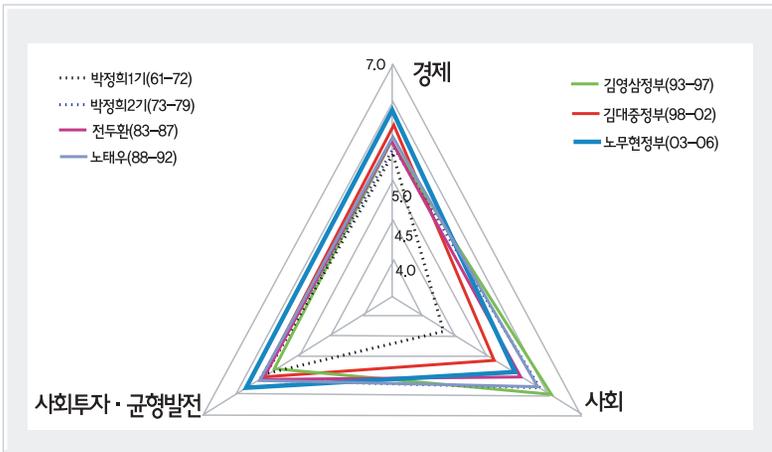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로 이어지는 민주정부는 군부통치의 잔재 제거, 외환 위기의 극복, 2만 달러 시대의 개막 등 큰 성과를 보였다. 노무현 정부 들어서는 동반 성장·균형발전·사회투자 등에 역점을 두어 성장과 분배를 병행 추진한 결과, 경제 분야뿐 아니라 사회투자, 균형발전 분야 등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보였다.

일부에서 말하는, 산업화를 이룩한 권위주의 정부는 유능했고, 민주정부는 무능하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 구체적 지표는 민주정부들이 대단히 '유능한 정부'였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분야별 6개 정부 성과 비교

박정희 정부부터 노무현 정부까지 최근 6개 역대 정부 성과를 종합 비교했다. 6개 정부 비교에서는 자료 확보의 한계로 3개 큰 분야 종합지수만 산출할 수 있었다. 경제 분야 13개, 사회 분야 9개, 사회투자·균형발전 분야 17개 등 총 39개 세부지표를 활용하여 종합지수를 산출한 다음 이를 삼각형 그래프로 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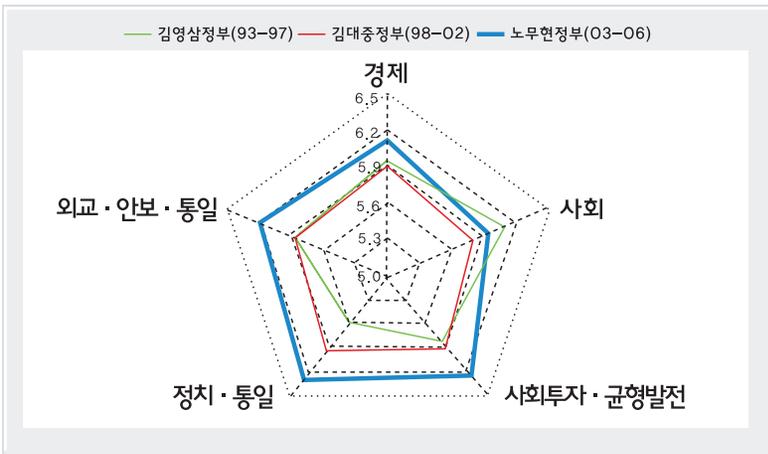
분야별 6개정부 성과 비교



분야별 3개 정부 성과 비교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 등 최근 3개 정부를 비교할 때는 경제 분야 30개, 사회 분야 20개, 사회투자·균형발전 분야 71개, 정치·행정 분야 38개, 외교·안보·통일 분야 28개 등 총 187개 세부지표를 활용하여 종합지수를 산출한 다음 이를 오각형 그래프로 표시했다.

분야별 3개정부 성과 비교



노무현 정부

노무현 정부는 과거의 성과를 계승하면서 도전과 과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발전의 물꼬를 텄다.

권위주의 잔재의 해소, 특권과 유착구조의 혁파 등을 통해 민주주의의 심화와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세계화와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확대되고 있는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동반성장, 균형발전, 사회투자 등 3대 '상생의 진보전략'을 개발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고, 이들 분야에서 뚜렷한 진보를 이루었다.

과거의 요소투입형 성장 모델의 한계를 극복하고 혁신주도형 성장 모델로 전환하기 위해 연구개발 투자 확대, 산학협력 활성화,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미래 성장동력 산업 육성, 혁신 클러스터 조성 등 5대 혁신정책과 인적자본 투자 확대 정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하나둘씩 그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에 들어와 혁신주도형 성장 모델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뚜렷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단기적·정치적 요구에 휘둘리지 않고 장기적 전망 하에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왔으며, 과거 정부와 달리 저출산·고령화 대책과 국가 균형발전 등 다수의 중장기 국정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이를 통해 한국 사회의 미래 발전에 큰 토대를 닦았다.

분야별로 보면 사회 분야를 제외한 전 분야에서 어느 정부보다 뚜렷한 성과를 만들어냈다.

경제 분야

1인당 국민소득 증가폭, 수출, 외환보유고, 주가지수 등에서 역대 정부 중 최고의 성과를 보였다. 또한 혁신주도형 경제 발전전략으로 R&D 투자 확대, 노동생산성 증가 등 성과가 두드러졌다.

사회 분야

외환 위기 이후 구조조정, 자동화 급진전,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 고리 약화 등으로 비정규직 및 자영업자가 증가하고 소득분배가 악화되었으나 최근 들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사회투자과 균형발전 분야

경제, 사회 분야에서 발생한 문제를 교정하고 계층 간, 지역 간 동반 성장을 위해 사회복지 예산 증가, 취약계층 지원 대책 마련, 보육정책 강화, 임대주택 건설, 균형발전정책 등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여 역대정부 중 이 분야에서 가장 현저한 성과를 보였다.

정치·행정 분야

정당 민주화, 정경유착 해소, 돈 안 드는 선거 등 정치영역에서 진전을 보였다. 또한 정부 혁신, 권력기관 자율화, 고객 만족, 전자정부, 분권화, 부정부패 척결 등 행정 분야에서도 성과를 보였다.

외교·안보·통일 분야

남북 긴장 완화, 남북교역 및 인적 교류, 자원 및 에너지 외교 등에서 외연 확대와 실리 확보에 큰 성과를 보였다. 다만 계량화 등의 문제로 인해 지수화해서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다.

노무현 정부의 집권 4년 동안 경제, 사회투자·균형발전, 정치·행정, 외교·안보·통일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둔 것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끊임없는 노력과 성취의 결과였다. 그러나 사회 분야에서 비정규직 확대, 소득 양극화의 확대 등으로 인해 성과가 적었던 것은 상당 부분 정부의 역량 부족에 기인했다는 점을 자성하고 앞으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지표 인덱스

- 개성공단 생산액 및 근로자 현황 188
- 경상수지 추이 31
-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111
- 고용률 추이 87
- 고용보험 적용 사업체 수 비중 105
- 고용안정센터를 통한 취업 현황 91
- 공공부문의 R&D 예산 추이 53
- 공공임대주택 건설 추이 119
- 공무원 1인당 인구수 147
- 공직자 부정부패 사범 처리 현황 141
-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 163
- 구속자 및 불구속 비율 137
- 국가 채무 기간별 증가요인 45
- 국가정보화 순위 155
- 국가채무 추이 45
- 국내 제조업체들의 현금 보유 비중 추이 21
- 국민 제안 건수 157
-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현황 106
- 균형발전특별회계 규모 68
- 금융채무 불이행자 수 추이 99
- 긴급체포 vs 체포영장 137
- 남북 선박 물동량 190
- 남북 인적 왕래 189
- 남북회담 개최 및 합의서 현황 191
- 노무현 정부 국가직 공무원 증원 현황 47
- 농림업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 65
- 농림축산물 수출액 65
- 등록규제 건수 현황 161
- 문화기반시설 수 127
- 문화산업 매출액 63
- 복지 증가율 내역 103
- 부도업체 수 추이 41
- 부동산가격 상승률 43
- 부패인식지수 및 백분율 변화 141
- 분야별 6개 정부 성과 비교 197
- 분야별 3개 정부 성과 비교 198
- 불법 폭력 시위 발생 비율 169
- 비상용근로자 및 비정규직 비중 추이 91
- 사회복지비 비중 103
- 사회서비스 일자리 추진 현황 89
- 생물산업의 지역별 생산액 추이 61
- 세계 문화산업 규모 63
- 세금 전자신고 건수 증가 추이 150
- 소득 5분위 배율 추이 95
-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17
- 수도권 대비 지방의 1인당 GRDP 비율 70
- 수도권과 지방의 인구 점유율 73
- 수출입화물 처리시간 단축 추이 150
- 수출 추이 27
- 실업급여 수혜율 105
- 실업률 추이 81
- 실업자 수 추이 81
- 실질 민간소비 증가율 추이 23
- 실질 설비투자 증가율 추이 21
- 실질 GDP 증가율 추이 15
-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113
- 여성공무원 비율 변화 추이 162
- 여성권한척도 113
- 역대 대통령 해외순방 현황 181
- 연간 매출액 200억 원 이상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기업 업체 추이 57

연도별 교통사고 사망자 173

연도별 자연환경보호지역 면적 123

연도별 정보공개 청구 및 공개 건수 159

연도별 지방 이양결정 및 확정 건수 165

외국인 직접투자 누계액 추이 38

외환거래량 추이 49

외환보유액 추이 35

원화의 달러 환율 추이 29

유치원 취원률 111

육아 지원 예산 115

인구 1000명당 주택 수 추이 117

인구 1000명당 특허출원 건수 추이 54

인구 10만 명당 살인 강도 발생 171

일반은행 BIS 비율 추이 47

임대주택 건설 비율 119

자영업주 수 추이 85

자유화 정도 등급 변화 135

장애인 고용률 163

저소득층 무상교육비 지원 현황 107

전자산업의 지역별 생산액 추이 61

전체 집회 시위 발생 건수 169

정부 R&D 예산의 지방 비중 69

정상 외교의 지역별 분포 181

제도개선 실적 157

제조업 부채비율 추이 39

조세·이전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도시근로자 가구) 96

조세·이전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전국가구) 97

종합주가지수(KOSPI) 추이 33

주요 국가별 도서관 현황 127

주요 국가별 BIS 비율 추이 47

주요 기관의 종합국가위험도 평가 193

주요 도시별 연간 미세먼지 농도 125

주요 선진국 반감기 소요기간 173

주요 선진국의 국민소득 1만3000~1만7000 달러 시기의 성장률 15

주요국의 2006년 민주주의 지수조사 선거항목 점수 139

주택보급률 추이 116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가용 자원 비중 165

중앙행정기관 민원서비스 만족도 153

중앙행정기관 주요 정책 만족도 153

지니계수 개선 효과 97

지니계수 추이 95

지방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수 59

지방의 수출규모 및 비중 71

지역별 주택보급률 추이 117

차세대 성장 동력 분야별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및 기술수준 55

참여정부 출범 이후 지역주의 개선 정도 143

청년 실업률 추이 83

초·중·고등학교 교사당 학생 수 109

초·중·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109

총 연구개발비 추이 53

총범죄 발생 171

총선 단속 실적 139

출입국 심사 대기시간 단축 추이 151

특허심사기간 단축 추이 151

특허출원 건수 추이 54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변화 37

해외 자원 개발 현황 183

혁신형 중소기업 수 추이 57

회사채 금리 추이 19

Euro Money의 종합국가위험도 순위 및 점수 193

FTA 협상 실적 185

IMD 교육경쟁력 순위 추이 110

Institutional Investor의 종합국가위험도 순위 및 점수 194

UN 전자정부 수준 평가 155

1988~2004년 총선 권역별 득표율 143

1인당 명목 국민소득(GNI) 추이 13

2005년 국가별 종합혁신지수 순위 148

4대 강 수질오염도 125